



■ 연구보고서 2014-22-1-10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 : 여성의 사회집단별 위험과 대응전략

장미혜·장혜경·박복순·김석호·정지연·조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여성폭력 예방체계의 통합적 구축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공저)

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 분석 및 효과성 연구

여성가족부, 2014(공저)

【공동연구진】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위원

조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조사원

연구보고서 2014-22-1-10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 :
여성의 사회집단별 위험과 대응전략**

발 행 일 2014년 12월 31일

저 자 장 미 혜

발 행 인 최 병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39-00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한디자인

정 가 8,000원

현재 한국사회는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초저출산·초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2013년도 합계출산율 1.19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노인인구 1명을 약 6명의 생산인구가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사회에서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가 진행되면 인구 부양비의 불일치로 인해 국내 생산율과 경제 성장률의 둔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불어 조세 수입의 감소와 연금, 의료비 등의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한 불균형이 나타나며 돌봄과 부양의무에 대한 세대 간 및 사회계층 간 갈등이 발생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저출산·초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계층별, 연령별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에 연구진들은 집단별로 미혼, 기혼, 노인 남성과 여성들에게 잠재해 있는 사회적 위험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초저출산·초고령화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에서 여성이 지니고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제시한 연구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를 벗어나 성장하는 사회가 되는데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가 지니고 있는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올바른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2014년 10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 명 선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2
제3절 연구배경	28
제4절 소결	56
 제2장 초저출산·초고령화의 진전과 여성의 사회적 위험	59
제1절 저출산 문제를 둘러싼 다섯 가지 시각들	61
제2절 재생산과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 강화	64
제3절 가족구성과 생애경로의 다양화와 불확실성	66
제4절 여성의 노동활동 참여와 성별 노동시장의 불평등	69
제5절 가족 내 성역할 변화와 돌봄의 부담	71
제6절 일-가족 양립을 둘러싼 갈등의 확대	76
제7절 소결	80
 제3장 여성의 사회적 위험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의 유형별 특성 ·	83
제1절 출산율의 변화를 통해 본 국가의 유형화	85
제2절 국가소득수준과 여성의 취업 및 성역할에 대한 인식	91
제3절 출산율과 여성의 취업 및 성역할에 대한 인식	101
제4절 소결	141

제4장 미혼여성의 사회적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147

제1절 미혼여성의 가족적 위험 149

제2절 미혼여성의 경제적 위험 163

제3절 미혼여성의 사회적 위험 168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172

제5장 기혼여성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175

제1절 사회계층별 기혼여성의 가족적 위험 177

제2절 사회계층별 기혼여성의 경제적 위험 190

제3절 기혼남녀의 사회적 위험 202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206

제6장 여성노인의 사회적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209

제1절 남녀노인의 가족적 위험 212

제2절 남녀노인의 경제적 위험 218

제3절 남녀노인의 사회적 위험 220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224

제7장 사회집단별 여성의 정책욕구와 대응방안 227

제1절 여성의 사회집단별 차이 229

제2절 초저출산 정책의 이슈와 쟁점 237

제3절 이슈별 향후 정책적 대응방안 249

참고문헌 255

표 목차

〈표 1- 1〉 주요 OECD 국가들의 출산율 및 평균 출산연령의 시계열적 변화	35
〈표 1- 2〉 합계 출산율의 변화	38
〈표 1- 3〉 노년 부양비	40
〈표 1- 4〉 모성보호제도의 종류	45
〈표 1- 5〉 시설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확대 추이(1999-2012)	50
〈표 1- 6〉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 수당 대상 및 급여 확대 추이	51
〈표 1- 7〉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	52
〈표 1- 8〉 어린이집 일반 현황	54
〈표 1- 9〉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결과	55
〈표 1-10〉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 사유	55
〈표 3- 1〉 ISSP 25개 국가들의 1인당 총국민소득(2012년)	88
〈표 3- 2〉 ISSP 25개 국가들의 합계출산율(2012년)	89
〈표 4- 1〉 부모로부터의 독립(1인가구)여부에 따른 미혼 응답자의 분포	151
〈표 4- 2〉 부모와 동거여부에 따른 미혼 응답자의 분포	152
〈표 4- 3〉 미혼응답자의 결혼 및 이혼에 대한 인식(사회계층별 차이)	153
〈표 4- 4〉 미혼 응답자의 결혼 및 이혼에 대한 인식(연령별 차이)	154
〈표 4- 5〉 자녀의 가치에 대한 요인분석	155
〈표 4- 6〉 미혼남녀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사회계층별 차이)	156
〈표 4- 7〉 미혼남녀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연령별 차이)	156
〈표 4- 8〉 미혼남녀의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사회계층별 차이)	157
〈표 4- 9〉 미혼남녀의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연령별 차이)	158
〈표 4-10〉 미혼남녀의 부모됨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사회계층별 차이)	159
〈표 4-11〉 미혼남녀의 부모됨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연령별 차이)	161
〈표 4-12〉 미혼남녀의 생계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사회계층별 차이)	162
〈표 4-13〉 미혼남녀의 생계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연령별 차이)	162

〈표 4-14〉 부모로부터 독립한 1인가구 미혼 응답자의 취업여부	164
〈표 4-15〉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응답자의 취업 여부	164
〈표 4-16〉 부모로부터 독립한 1인가구 미혼 응답자의 가구소득	165
〈표 4-17〉 부모와 동거중인 미혼 응답자의 가구소득	165
〈표 4-18〉 미혼 및 기혼 응답자의 경제활동 현황	166
〈표 4-19〉 미혼 1인가구의 고용형태	167
〈표 4-20〉 미혼 1인가구 응답자가 지난 1년간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조직/모임	169
〈표 4-21〉 미혼 응답자가 가족/이웃 간 평소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는 빈도	170
〈표 4-22〉 미혼 응답자의 친지 외 사람들과 식사 혹은 음주 여부	170
〈표 4-23〉 미혼 응답자의 인사하는 이웃 수	171
〈표 4-24〉 미혼 응답자의 위험 발생 시 도움 요청하는 경로	172
〈표 5- 1〉 현재 배우자와 동거기간	178
〈표 5- 2〉 출산경력	179
〈표 5- 3〉 마지막 자녀의 연령별 구분	180
〈표 5- 4〉 기혼남녀의 결혼 및 이혼에 대한 인식(사회계층별 차이)	181
〈표 5- 5〉 기혼남녀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현재 배우자와의 동거기간별 차이)	182
〈표 5- 6〉 기혼남녀의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현재 배우자와의 동거기간별 차이)	184
〈표 5- 7〉 기혼남녀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출산경력별 차이)	185
〈표 5- 8〉 기혼남녀의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출산경력별 차이)	187
〈표 5- 9〉 기혼남녀의 가장 이상적인 유형의 성별분업(사회계층별 차이)	188
〈표 5-10〉 기혼남녀의 가장 나쁜 유형의 성별분업(사회계층별 차이)	190
〈표 5-11〉 일하는 부모의 삶, 일, 가정에 대한 행복도(육아단계별 차이)	192
〈표 5-12〉 기혼남녀와 그 배우자의 일주일간 평균 가사노동시간	193
〈표 5-13〉 기혼남녀와 그 배우자의 일주일간 평균 돌봄노동시간	195
〈표 5-14〉 일하는 부모의 일-가족 양립 수준(육아단계별 차이)	197
〈표 5-15〉 일하는 부모의 경력단절 경험	199
〈표 5-16〉 일하는 부모의 고용상의 지위(육아단계별 차이)	201
〈표 5-17〉 일하는 부모의 평균 임금노동시간(육아단계별 차이)	202

〈표 5-18〉 기혼 및 미혼남녀의 가구동거 형태	203
〈표 5-19〉 기혼남녀가 배우자가 동거하지 않을 경우 함께 거주중인 가구원의 수	204
〈표 5-20〉 기혼남녀의 배우자와 동거형태와 별거 사유	205
〈표 5-21〉 육아 중인 기혼남녀의 사회적 참여활동 유형	206
〈표 6- 1〉 남녀노인의 동거가족 구성(사회계층별 차이)	213
〈표 6- 2〉 남녀노인의 동거 중인 자녀 유형	214
〈표 6- 3〉 남녀노인의 동거형태별 가구경제 상황	215
〈표 6- 4〉 65세 이상 남녀노인의 가사노동 수준(사회계층별 차이)	216
〈표 6- 5〉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있을 때 돌봄의 주체에 대한 인식	217
〈표 6- 6〉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있을 때 그 비용지불의 주체	217
〈표 6- 7〉 남녀노인의 평균 가구소득	219
〈표 6- 8〉 남녀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219
〈표 6- 9〉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족과 연락 및 접촉빈도	221
〈표 6-10〉 독거노인의 이웃과 접촉 수준: 서로 인사하고 지내는 이웃 수	222
〈표 6-11〉 독거노인의 이웃과 접촉 수준: 필요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이웃 수	222
〈표 6-12〉 노인 1인가구의 위험발생 시 도움 요청하는 경로	223

그림 목차

[그림 1- 1] 주요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2012년)	30
[그림 1- 2] 국가별 결혼제도의 특징과 출산율과의 상관성: (a)혼전동거와 (b)혼전출산 · 33	
[그림 1- 3] 합계 출산율의 변화	38
[그림 1- 4] 노년 부양비	39
[그림 1- 5] 노년부양비의 장기추이	41
[그림 1- 6] 고령화지수의 장기추이	42
[그림 1- 7] 모성보호제도 휴가·휴직자 추이	47
[그림 1- 8]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추이(2001~2011)	49
[그림 1- 9] 전체 0~5세 아동 및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아동수(2001~2011)	50
[그림 3- 1] 출산율(TFR)과 1인당 국민소득(GNI)의 관계(2012년)	87
[그림 3- 2] 2012년 ISSP 국가들의 출산율(TFR)과 2012년 1인당 국민소득(GNI)	91
[그림 3- 3]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2: 어머니가 취업해도 취학 전 자녀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93
[그림 3- 4] 어머니의 취업과 취학 전 자녀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94
[그림 3- 5] 여성의 전일제 취업과 가정생활의 어려움 3: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을 해도 가 정생활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95
[그림 3- 6] 중간 GNI와 고 GNI 국가의 여성의 전일제 취업과 가정생활의 어려움 인식 96	
[그림 3- 7] 전업주부 대비 취업에 대한 높은 가치부여 5: 전업주부가 되는 것 보다 보수 를 받고 일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97
[그림 3- 8] GNI 수준별 국가의 전업주부 대비 취업에 대한 높은 가치부여 인식	98
[그림 3- 9] GNI 수준별 '성별 분업' 인식	99
[그림 3-10] 국가별 소득수준과 '성별 분업' 인식	101
[그림 3-11] TFR 1.5 미만 국가들의 '어머니의 취업과 취학 전 자녀의 어려움' 인식 103	
[그림 3-12] TFR 1.5 미만 국가들의 TFR과 '어머니의 취업과 취학 전 자녀의 어려움' 인 식과의 관계	104

[그림 3-13] TFR 1.5~2.1 미만 국가들의 '어머니의 취업과 취학 전 자녀의 어려움'	
인식	105
[그림 3-14] TFR 1.5~2.1 미만 국가들의 TFR과 '어머니의 취업과 취학 전 자녀의 어려움'	
인식과의 관계	106
[그림 3-15] TFR 1.5 미만 국가들의 '여성의 전일제 취업과 가정생활의 어려움' 인식	107
[그림 3-16] TFR 1.5 미만 국가들의 TFR과 '여성의 전일제 취업과 가정생활의 어려움'	
인식과의 관계	108
[그림 3-17] TFR 1.5~2.1 미만 국가들의 '여성의 전일제 취업과 가정생활의 어려움'	
인식	109
[그림 3-18] TFR 1.5~2.1 미만 국가들의 TFR과 '여성의 전일제 취업과 가정생활의 어려움'	
인식과의 관계	110
[그림 3-19] TFR 1.5 미만 국가들의 '전업주부 대비 취업에 대한 높은 가치부여'	
인식	111
[그림 3-20] TFR 1.5 미만 국가들의 TFR과 '취업에 대한 높은 가치 부여'	
인식과의 관계	112
[그림 3-21] TFR 1.5~2.1 미만 국가들의 '전업주부 대비 취업에 대한 높은 가치부여'	
인식	113
[그림 3-22] TFR 1.5~2.1미만 국가들의 TFR과 '전업주부 대비 취업에 대한 높은 가치 부여'	
인식과의 관계	114
[그림 3-23] 2012년 TFR 1.5 미만 국가군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2002년과 2012년 비교	115
[그림 3-24] 2012년 TFR 1.5~2.1 미만국가들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2002년과 2012년 비교	116
[그림 3-25] TFR 1.5 미만 국가들의 '성별 분업' 인식	117
[그림 3-26] TFR 1.5 미만 국가들의 TFR과 '성별 분업' 인식과의 관계	118
[그림 3-27] TFR 1.5~2.1 미만 국가들의 '성별 분업' 인식	119
[그림 3-28] TFR 1.5~2.1 미만 국가들의 TFR과 '성별 분업' 인식과의 관계	120
[그림 3-29] 25개 전체 국가들의 TFR과 '성별 분업' 인식과의 관계	121

[그림 3-30] 2012년 출산율(TFR) 1.5 미만국가들의 '성별 분업' 인식의 변화: 2002년과 2012년 비교	122
[그림 3-31] 2012년 출산율(TFR) 1.5~2.1 미만 국가들의 '성별 분업' 인식의 변화: 2002년과 2012년 비교	122
[그림 3-32] TFR 1.5 미만 국가들의 '가정생활만족도'	123
[그림 3-33] TFR 1.5 미만 국가들의 TFR과 가정생활만족도와의 관계	124
[그림 3-34] TFR 1.5~2.1 미만 국가들의 '가정생활만족도'	125
[그림 3-35] TFR 1.5~2.1 미만 국가들의 TFR과 가정생활만족도와의 관계	126
[그림 3-36] 25개 전체 국가들의 TFR과 가정생활만족도와의 관계	127
[그림 3-37] TFR 1.5 미만 국가들의 '동거는 결혼의사 전제가 필수' 인식	128
[그림 3-38] TFR 1.5 미만 국가들의 TFR과 '동거는 결혼의사 전제가 필수' 인식과의 관계	129
[그림 3-39] TFR 1.5~2.1 미만 국가들의 '동거는 결혼의사 전제가 필수' 인식	130
[그림 3-40] TFR 1.5~2.1 미만 국가들의 '동거는 결혼의사 전제가 필수' 인식과의 관계	130
[그림 3-41] 2012년 출산율(TFR) 1.5미만국가들의 '전통적 결혼관'의 변화: 2002년과 2012년 비교	131
[그림 3-42] 2012년 출산율(TFR) 1.5~2.1 미만국가들의 '전통적 결혼관'의 변화: 2002년과 2012년 비교	132
[그림 3-43] TFR 1.5 미만 국가들의 자녀관	133
[그림 3-44] TFR 1.5 미만 국가들의 TFR과 자녀관과의 관계	134
[그림 3-45] TFR 1.5~2.1 미만 국가들의 자녀관	135
[그림 3-46] TFR 1.5~2.1 미만 국가들의 TFR과 자녀관과의 관계	135
[그림 3-47] 25개 국가들의 TFR과 자녀관과의 관계	136
[그림 3-48] 2012년 출산율(TFR) 1.5 미만국가들의 '전통적 자녀관'의 변화: 2002년과 2012년 변화	137
[그림 3-49] 2012년 출산율(TFR) 1.5~2.1 미만국가들의 '전통적 자녀관'의 변화: 2002년과 2012년 변화	138

[그림 3-50] 2012년 출산율(TFR) 1.5 미만 국가들의 '취업형태'의 변화: 2002년과 2012년 비교	139
[그림 3-51] 2012년 출산율(TFR) 1.5~2.1미만 국가들의 '취업형태'의 변화: 2002년과 2012년 비교	139
[그림 3-52] 2012년 출산율(TFR) 1.5 미만 국가들의 '유급휴가 필요성'인식의 변화: 2002년과 2012년 비교	140
[그림 3-53] 2012년 출산율(TFR) 1.5~2.1 미만 국가들의 '유급휴가 필요성'인식의 변화: 2002년과 2012년 비교	141

Abstract <<

Super-low birthrate and super-aging society: risks and responding strategies according to female social groups

In South Korea, there is a phenomenon showing super-low birthrate of 1.19 average, the lowest in all OECD countries on the basis of 2013 figure. Although there has been rapid growth in number of childbirth and childcare support policies for the last 10 years since the light was first shed on the risk of low birthrate, single women still stick with negative attitude against childbirth, married women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work-family relations and old generations are not being taken care of.

Therefore policies supporting childbirth should move forward in direction of allowing women to continue to stay in labour force even during the process of childbirth and childcare by guaranteeing stability in employment and flexibility in labour for moms. Thus the goal of policies against low-birthrate should not simply be enhancing birthrate of individual household but an establishment of good local community and environment where parents can give birth and raise children is required.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초저출산은 한 여성의 가임기간 동안 출산하는 자녀의 평균적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1.3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과 일본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들은 과거 출산율의 하락을 경험하였으며, 현재도 하락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양 인구의 불일치로 국내 생산율과 경제 성장률의 둔화, 조세 수입의 감소와 연금과 의료비 등의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한 불균형, 돌봄과 부양의무에 대한 세대 간 및 사회계층 간 갈등이 발생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한국은 2013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출산율 중 최저 수준인 1.19로 초저출산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인구고령화가 급격한 속도로 진행 중에 있어 2013년의 노인부양비를 환산할 경우 노인인구 1명당 약 6명의 생산인구가 부양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출산-초고령화의 위기가 심화되자 정부는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출산율을 회복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여성의 몸과 모성성, 재생산 능력을 통제하는 권력관계에 주목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출산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성 불평등한 관계 속에 의미를 구성하였는지 살펴본다. 둘째,

가족제도의 다양성 증가와 생애단계의 유연성에 주목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통적인 성역할과 가족규범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과 불일치하는 가족제도가 어떻게 출산율에 영향 미치는지 분석한다. 셋째,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임금, 경력, 고용지위 등에 있어 격차가 존재하는 점에 주목하며, 노동시장의 젠더화 된 조건이 여성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넷째, 가족 내 성역할과 돌봄문제에 관한 시각을 다룬 연구이다.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데 가족책임의 역할 분담을 둘러싼 논쟁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출산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다섯째, 일-가족 양립정책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저출산이 여성이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데 겪는 갈등지수가 높을 경우 발생하며 가족친화적인 지원정책이 무엇인지, 이들 정책이 여성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목적을 설정하였다. (1)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였던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소득수준과 합계출산율의 차이에 따라 세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그래서 유형별 국가들의 성역할, 가족규범, 유급휴가제도 등 일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의 특징을 비교한다. (2) 경제적 독립과 결혼 및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고자 하는 태도가 증가하고 있는 청년세대의 가족 및 성역할에 대한 인식과 경제사회적 특징을 비교하여 미혼여성이 경험하는 성 불평등의 요인을 해소하고자 한다. (3)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사와 육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는 현실에 주목하고, 기혼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4) 고령화로 인한 여성노인의 경제사회적 양극화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인구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노

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5) 응답자를 소득수준과 연령, 육아단계 등 다양한 사회집단으로 나누어 여성이 경험하는 주요한 위험군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지 파악함으로써 집단별 상이한 욕구들을 밝혀내고자 한다.

위와 같은 다섯 가지의 연구목적들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가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집단별 분화된 정책 개발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한국 사회의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현상에 대한 성평등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분석방법

연구의 분석자료는 국가비교 설문자료, 국내 설문자료, 국내외 거시지표 자료의 세 가지 종류이다. 국가비교를 위한 분석에서는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이하 ISSP)에서 발행한 2002년의 [ISSP 2002 - 가족과 성역할의 변화 III(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II)]와 2012년의 [ISSP 2012 - 가족과 성역할의 변화 IV(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V)]의 가족과 성역할을 주제로 하는 두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이 설문에는 OECD의 주요 국가들을 포함한 약 25여개의 국가의 개인들이 응답하였다. 우리사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국내자료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한 [2012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 General Social Survey)]의 설문자료이다. 2012년 조사에는 ISSP의 지정모듈인 「가족과 성 역할의 변화 IV」의 공통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2012년 KGSS는 2012년 ISSP 조사의 결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의

주요한 사회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OECD, World Bank, UN 등 주요 국제기구와 통계청에서 공개하는 거시지표들을 활용하였다.

3. 주요 연구결과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제비교 분석으로 주요 국가들의 일-가족 문제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국가의 경제발전수준과 합계출산율이 적정 수준까지 높을수록 국민들이 개방적인 가족규범과 성평등 인식을 가지고 있어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출산율은 U자형 패턴을 보여 너무 출산율이 낮거나 높은 국가들은 성평등 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발전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출산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수록 성평등한 사회가 조성되어 여성이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데 어려움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아버지-생계부양자 및 어머니-돌봄책임자 모델’에 더 가까운 편이었다. 한국의 응답자들은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이었고, 성역할에 대한 인식 역시 전통적인 편이어서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을 나타냈다. 응답자들은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양육의 양립이 어렵다고 인식하였고, 자녀가 삶의 가치에 주는 긍정적 역할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출산율을 회복하였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성 불평등의 수준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과 여성에 대하여 보수적인 태도는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어렵게 하여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우리사회가 지난 10여 년간 출산지원정책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

였지만 여전히 개인들이 체감하는 양육환경은 열악한 수준이며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가족적 위험, 경제적 위험, 사회적 위험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위험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가족적 위험으로는 20-30대의 청년세대 중 상당수가 부모와 동거 중에 있었다. 이는 청년세대가 경제적 독립을 지연하고, 결혼 및 출산역시 늦어짐으로써 청년세대의 생애단계가 전반적으로 지연되어 이행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가족규범과 성역할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인식차이를 가장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남녀 간의 간극은 30대 이상 집단보다 20대 이하 집단에서 더 높았다. 한편 미혼여성은 미혼남성에 비해 결혼, 출산, 양육 등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 여성이 부담해야하는 역할에 대해 부정적 태도가 두드러졌고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도 여성의 경제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자녀양육에 대한 여성의 일차적 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좀 더 성평등한 의식수준을 나타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가족과 성역할에 대한 남녀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들은 여전히 성평등 의식에 있어 더딘 진일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미혼여성들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가족규범과 성역할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을 누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의 재구성을 둘러싼 남녀 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경제적 위험에 있어 미혼여성은 미혼남성보다 임금이 낮았고 세대가 증가할수록 그 간극이 벌어져 노동시장에서의 성 불평등이 사회진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성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노동시장의 성차별과 경제적 불안정은 자기계발의 욕구를 갖고 있는 미혼여성들의 높은 성평등 의식과 마찰을 일으키고 결혼과 출산 이후 일-가

죽 양립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처럼 경제적 독립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야기되는 성 불평등의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는 미혼 중인 청년 1인가구의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들은 사회적 유대망으로부터 고립되어있지만 독거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심은 대부분 노인층에게 집중되어 있어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점이 우려된다. 특히 경제적 불황이 이어지면서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고립된 환경에 놓여있는 청년 1인가구가 증가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이른 시기부터 형성된 사회적 고립이 생애사적으로 지속적인 취약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가족적 위험, 경제적 위험, 사회적 위험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위험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가족적 위험의 경우 일-가족 양립은 일과 양육을 병행 중인 부모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기혼남녀의 성 불평등을 강화하는 핵심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가족적 위험을 살펴보면, 기혼남녀는 사회계층, 연령, 자녀양육단계 등 다양한 가족적 요소에 따라 위험의 차이가 발생한다. 기혼 여성은 기혼남성보다 사회계층에 따른 편차가 두드러진다. 상층여성이 하층여성보다 가족규범과 성역할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성평등한 가치관을 나타낸다. 그러나 남성은 계층에 따라 위험의 차이가 불규칙하거나 덜 명료하였다. 따라서 기혼여성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위치와 맥락에 놓여있느냐에 따라 배우자와의 일-가족 양립문제에 대한 가치관이 중요하게 충돌할 여지가 있으며 사회집단별 특징에 따른 정책수요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적 위험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일과 가족의 분담에 대한 성 불평등이 존재한다. 기혼여성은 기혼남성보

다 가사 및 돌봄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계층, 배우자와의 동거기간, 자녀의 육아단계, 출산경력 등에 따라 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일-가족 양립 갈등지수는 여성의 전(全) 생애단계에 걸쳐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기혼여성이 경험하는 일-가족 양립 갈등의 수준이 전 생애과정에 걸쳐 심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 역시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위험에서는 기혼이지만 비동거 중인 부부가 존재하는 등 가구구성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은 배우자와 동거 중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할수록 이직, 출장, 원거리 취업,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배우자와 별거중이며 가사나 육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기 어려운 부부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가족정책이 동거부부와 그 동거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표준적 가족모델에 해당하는 가족만을 지원하던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의 삶을 고려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초고령화라는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고령사회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문제들, 즉 독거노인의 증가와 노인 돌봄 수요 증가로 인한 고령사회 진전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여성노인 및 남성노인이 겪고 있는 가족적 위험, 경제적 위험,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남녀노인의 가족적 위험을 살펴보면, 1인 독거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 독거가구 비율이 남성 독거가구보다 높아, 노인돌봄에 대한 필요성과 그 돌봄 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1인 독거노인은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더욱이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평균 가계소득이 낮고, 노동활동 참여 비율 역시 낮아

여성노인의 경제적 빈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노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은 성별과 상관없이 상당수의 독거노인이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거노인이 응급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4. 결론 및 시사점

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관점을 세 가지이다. 첫째, 청년층의 낮은 경제적 독립으로 인한 만혼, 결혼기피, 출산지연 등 생애과정의 변화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둘째, 성 평등화된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보수적인 가족규범과 억압적인 젠더 이데올로기 때문에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는 관점이다. 셋째,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 때문에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한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저출산의 위기를 경험한 이후 지난 10여 년간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지원정책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혼여성들은 여전히 자녀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기혼여성들은 높은 수준의 일-가족 충돌을 경험하고 있다. 노인여성들 역시 돌봄의 취약 속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저출산 사회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산행위를 중심으로 한 도구적 정책 보다는 출산행위의 주체가 되는 여성의 경험과 그것을 둘러싼 남성과 여성 사이의 젠더관계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의 목적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여 개별 가족과 여성이 가지는 출산과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출산이 여성의 책임이라는 점과, 여성의 모

성역할을 강조하고, 양육의 전담자는 여성이라는 인식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출산의 주체가 되는 여성의 목소리는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관점을 도입하여 정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산의 주체가 되는 여성의 목소리가 정책과정 속에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저출산 정책은 가족지원정책인 동시에 양성평등정책이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해야만 한다. 더 넓은 맥락에서 성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돌봄의 사회적 공백'에서 비롯되는 근본적인 사회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저출산 정책을 여성정책의 과정 속에 재정립하기 위하여 고민해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논쟁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기 여성의 돌봄노동과 임금노동 중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의 논쟁이다. 가족지원정책은 제도적 구성원리에 따라 성평등한 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한다. 출산지원정책은 어머니의 고용안정성과 노동유연성을 동시에 보장하여 여성이 출산과 양육을 하는 중에도 노동시장으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력을 누적하며 일-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부부의 양육의 분담인가, 여성의 이중부담 강화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다수의 출산지원정책이 주로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성권과 양육자로서의 참여기회는 차단되어 있다. 좀 더 성평등한 시각에서 일-가족 양립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성중립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남성배우자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아버지로서의 혜택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과 부모, 개인과 가족 중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가족 및 돌봄을 위한 정책수혜의 자격이 가족이나 배우자의 특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제공되어 여

성 개인이 남성배우자의 소득수준이나 다른 가구원의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도 출산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은 일-가족 양립에 대한 선택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한 성평등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양육단계 및 생애주기의 차이에 따른 정책수요의 차이를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특히 가구구성의 원리가 복잡해지고 가족생활이 점점 더 탈표준화된 양식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주목하여 이러한 변화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족, 지역사회와 기업 중 정책의 범위를 어디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출산기의 여성이나 양육기의 부모와 같은 개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보다 기업과 지역사회, 노동시장과 같은 거시적인 사회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두는 정책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 정책의 목표는 개별가구의 출산율 제고가 아니라,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지역사회와 노동시장의 환경구축을 포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제와 정책대안을 제안한다. 첫째, 생애과정의 다양성을 고려한 가족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지원정책은 주로 출산기의 모성보호정책 및 부모휴가제도에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취업 유무와 자녀의 연령에 따른 다양한 양육 단계를 고려할 수 있는 통합적인 가족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의 취업유무 및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자녀양육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양육지원 프로그램은 다양성이 부족하고 그 결과로 부모의 선택가능성이 협소해졌다. 그러므로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시설에 맡기는데 한계가 있고, 부모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데도 부족하다. 특히 일하는 부모들의 업무환경이 변화하고, 고용형태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업무시간표의 다양성에 맞추어

육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다원화된 시설보급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 계층별 차이를 고려한 가족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중산층 여성들의 경우,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기보다 개별 양육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계층의 여성들에게 동일한 정도의 보육시설의 질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계층의 가정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육시설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정책들을 통합하여 단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가족 지원 기금 역시 통일된 재원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여성,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장에 있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 등 모든 집단의 여성들이 정책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주요용어: 초저출산, 초고령화, 출산율, 가족적 위험, 경제적 위험, 사회적 위험, 사회집단간 불평등, 일-가족 양립, 성평등적 접근, 통합적 관리, 맞춤형 정책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배경

제4절 소결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반적으로 초저출산(lowest-low-fertility)은 출산율이 현재의 인구 대체수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를 의미하는데,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1.3 이하가 기준선이다(Bilari & Kohler, 2004).¹⁾ 저출산 현상은 우리보다 앞서 경제발전을 이루었던 서구 유럽과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미 196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후반에 걸쳐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와 권역별로 순차적인 출산율의 하락과 회복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Lesthaeghe & Moors, 2000).

현재 초저출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국가는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들 국가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이 1.3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주목하였다(Bilari & Kohler, 2004). 출산율이 감소하면 전반적인 인구성장율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핵심 생산인구인 25~49세의 인구가 줄어들고, 동시에 인구고령화가 발생한다. 생산 가능한 인구비중의 감소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부양인구의 불일치는 국내생산율과 경제 성장률의 둔화, 조세수입의 감소와 연금과 의료비를 포함하는 과다한 복지지출에 따른 국가재정의 악화, 돌봄과 부양의 의무와 책임을 둘러싼 세대 간 및 사회계층 간 갈등의 심화와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그 결과, 저출산이 장기화되면

1)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이며, 연령별 출산율을 합한 값으로 구성되어 출산력의 국가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된다(출처: e-나라지표, <http://index.go.kr/>)

연금의 수혜와 분배를 포함하는 자원배분의 문제가 사회갈등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Myles, 2002; Pierson, 2001). 그러므로 국가 경쟁력을 저하하지 않고 과도한 부양의 의무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선진 복지국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합계출산율 1.3 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은 유럽뿐 아니라 홍콩,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2013년 한국사회의 합계출산율은 OECD 최저수준인 1.19명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표 1-1>은 2012년 주요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을 나타낸 것인데, 한국은 포르투갈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출산율의 회복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선진국의 경우 인구학적 변화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증대로 인한 가족의 돌봄 기능의 약화에 대비하여 사회적 지원을 해주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출산율을 높일만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OECD 국가별로 가족복지와 관련된 공공지원액(public support)이 전체 GDP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볼 때 현금, 서비스, 감세를 합한 한국 가족복지의 총 지원 규모는 전체 GDP의 0.50%로 조사대상 17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저출산이 새로운 사회적 위협으로 인식된 이래 지난 10여 년간 출산지원정책, 자녀양육 지원정책, 일-가족 양립정책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해왔다. 특히 최근 들어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태아검진시간제, 수유시간 부여, 수유실 설치,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모성보호제도,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등의 휴가·휴직제도, 출산장려금, 보육비·교육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제도, 직장보육시설 설치 또는 위탁 등의 보육지원제도,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등의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는 등 출산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도를 확대하였다. 2014년도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시행계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사위원, 2014)에 따르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허용 후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 인상 및 대체인력뱅크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가능연령을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13.12)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연소득 4천만 원 미만 가구에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 환급형 세액공제를 지급하고, 시간 연장 어린이집 및 일시보육 서비스,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돌봄(종일제, 시간제) 서비스 등 맞춤형 보육 및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 및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은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서 결혼, 출산, 양육 등 가족생활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부담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보기도 하고, 육아의 책임이 어머니에게 주로 전가되는 불평등한 성역할 분담 및 일-가족 영역의 부조화 등에서 비롯된다고 보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그동안 ‘여성’보다는 ‘여성의 출산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출산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주의적 시각에서는 이른바 출산을 목적으로 한 도구적인 목적의 출산정책을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김민주, 2010; 신경아, 2010).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관점의 차이 이외에도 제도로 정착되기까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장애요인에 대한 지적도 존재한다. 현재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육아비용을 충당하기 미흡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기업에서는 일-가족 양립지원제도나 가족친화제도를 장기적으로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기보다는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근로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게 되는 국민 개개인의 체감 만족도는 낮으며 정책의 시행이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인구재생산의 위기,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고립화 현상 등 한국사회가 봉착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여성정책의 수립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기존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논의는 주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복지 국가의 위기,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산성의 저하와 젊은 층의 부양비의 증가에 다른 세대 간 갈등의 증대와 같이 주로 거시적인 맥락에서의 사회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거시적인 사회구조와 제도의 변화와 함께 개인과 가족의 삶 역시 변화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 가사노동의 상품화, 일하는 여성의 증가로 인한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방식의 변화와 같은 거대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출산력의 저하는 거시적인 인구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다. 일하는 어머니의 증가, 결혼과 이혼, 재혼, 동거 등 다양한 가족구성 방식의 등장, 새로운 아버지상의 출현과 부모역할의 재조정, 양육의 사회적 책임강화와 같은 사회변화가 동시에 진행된다.

그러므로 초저출산·초고령화 시대의 여성정책은 초고령화 현상이 진

전되면서 대두되는 돌봄의 책임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일하는 여성이 일반화됨에 따라 가정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양육과 가사분담 방식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마리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며 초저출산 사회로 이행한 선진국의 변화과정과 대응방식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다가올 한국사회의 초저출산 사회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성 전체로서가 아니라 여성들이 속한 사회집단 별로 직면하는 문제가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저학력 비정규직 여성집단과 고학력 정규직 여성집단 사이의 간극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동일한 학력이라도 일자리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회계층에 속한 여성들은 각각 원하는 일자리 지원과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욕구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계층별 상층, 중층, 하층의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주요 일자리 형태를 파악하고, 계층별 여성의 경력지속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요약하면 세대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기혼자와 미혼자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뿐 아니라 여성 내부의 차이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여성집단별 욕구에 부응한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고령화로 인해 개인의 노년기가 길어질 뿐 아니라 노후에 혼자 생활하는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노후를 잘 준비하여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기는 여성노인집단과 그렇지 못한 빈곤 여성노인집단과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성별 및 사회계층별 집단과 그 외 생애과정의 다양성 등 서로 다른 사회적 상황에 처해있는 남성과 여성 및 미혼과 기혼, 노인 여성집단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출산과 돌봄을 둘러싼 인식의 격차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성평등의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바라보고, 사회계층 및 생애과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번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위험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크게 국가와 개인의 두 가지의 층위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가수준에서는 거시지표 및 국제비교가 가능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고 개인수준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사회계층, 연령, 생애주기 등 다양한 집단으로 나누어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는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 설문자료(ISSP), 국내 설문자료(KGSS), 국내외 거시지표의 세 가지이다.

먼저 여성을 둘러싼 다양한 제도적 환경의 국가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국제사회조사인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http://www.issp.org>)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2002년 발행한 [ISSP 2002 - 가족과 성역할의 변화 III(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II)]와 2012년 발행한 [ISSP 2012 - 가족과 성역할의 변화 IV(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V)]의 두 설문지의 조사문항을 토대로 약 25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비교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지는

가족제도와 성역할, 돌봄, 일-가족 양립 등에 대한 응답자의 다양한 가치관을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2년과 2012년의 두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시대의 이행에 따르는 가치관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자료는 한국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스웨덴, 일본 등의 OECD의 주요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세계의 가치관 변화와 비교하여 우리사회의 인식이 어느 수준인가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우리사회의 가족 및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사회집단별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한 [2012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 General Social Survey)]의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사회종합조사는 ISSP의 50여 개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주제들을 조사년도마다 변화해서 조사하고 있다. 2012년 조사에서는 ISSP의 지정모듈 「가족과 성 역할의 변화 IV」를 공통문항으로 포함하고 있다(김상욱·김지범·문용갑·신승배, 2013). 2012년 조사에서는 전체 1,396명의 응답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중 남성이 617명(44.20%), 여성이 779명(55.80%)이다. 본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가족구조의 특성, 가족 및 성역할을 둘러싼 가치관이 사회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의 주요한 사회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청 등에서 공개하는 다양한 사회지표를 활용하여 시계열적 변화를 추적하였고, 국제사회의 동향과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OECD, World Bank, UN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공개하는 거시지표들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초저출산·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국가의 특성을 유형화함으로써 저출산이 지속되는 사회의 거시적 변화 추세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이번 연구의 진행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장에서는 초저출산·초고

령화 현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국내외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전반적인 특징을 개괄하고자 한다. 주요 OECD 국가들의 출산율이 시기별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저출산을 야기하는 사회적 맥락들에 대한 주요 특징을 논의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와 그에 따른 인구고령화 현상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의 발전과정과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 다음 2장에서는 초저출산·초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한국사회의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미혼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과 원가구로부터의 분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 재혼, 동거 등 결혼과정을 통한 청년에서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1인가구, 비혼부부, 한부모가족, 비동거가족 등 가족 구성의 방식도 다양화되고 있다. 아울러 여성의 노동활동 참여의 증가는 가족 내 성역할 변화와 돌봄의 부담을 야기하였다. 일하는 어머니가 늘어나면서 일-가족의 양립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아버지라는 부모역할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 이렇듯 더 이상 개별 가족이 전담할 수 없는 양육의 사회적 책임이 요청되고 있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2002년 및 2012년의 ISSP를 중심으로 초저출산·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국가의 특성을 유형화함으로써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사회의 거시적 변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선진국의 초저출산 사회에 접어들 시점의 국민소득을 파악한 뒤 유사한 국민소득 수준을 가진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또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 초저출산·초고령화 시대의 여성과 가족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과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에 따라 국가의 유형군을 나누어 취업

하고 있는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 가족의 생계부양의 책임에 있어서 남녀 역할에 대한 인식, 자녀돌봄의 책임에 있어서 남녀 역할에 대한 인식,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인식, 가정생활에 대한 행복도, 어머니의 전일제 취업상태, 유급휴가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국가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요약하면 가족규범 및 성역할 태도의 국가 간 차이가 소득수준과 출산율과의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사회의 여성과 가족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4장부터 6장까지는 2012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 중심으로 사회계층을 포함한 연령, 생애단계 등 다양한 사회집단별 여성의 핵심 위험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사회계층별로 상층, 중층, 하층의 생애주기별 여성의 주요 일자리 형태를 분류한 후 계층별 여성의 경력지속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4장에서는 미혼여성의 사회적 위험요인과 실태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만혼화 경향이 늘어나면서 미혼여성 1인가구는 가구형성 전 단계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대적 특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 평생 불안정하고 단절적인 일자리를 전전하는 여성의 증가는 결혼과 출산을 포함한 생애기획에 관련된 가치관과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성인으로서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는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의 개인화, 개별화가 진전되면서 고립과 단절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의 창출이 향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비정규직 여성집단을 위해서는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고, 사회구성원간의 유대관계를 확립하며, 이들의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실업의 증가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미혼여성이 가족형성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사회는 지속적으로 출산율의 하락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5장에서는 기혼여성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요인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사회계층별로 여성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사회계층별로 (1) 결혼 후 자녀를 갖기 전까지 전일제 일자리로 일하는 여성과 일하지 않는 여성의 비중, (2) 학교를 다니지 않는 어린 자녀가 있을 때 전일제 일자리로 일하는 여성과 일하지 않는 여성의 비중, (3) 막내가 학교에 들어간 후 전일제 일자리로 일하는 여성과 일하지 않는 여성의 비중, (4) 자녀가 성장하여 가정을 떠난 후 전일제 일자리로 일하는 여성과 일하지 않는 여성의 비중, (5) 맞벌이 가정의 비중을 파악하여 계층별로 분화된 일-가정 양립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또한 소득 수준별 맞벌이 가정의 비중,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른 선호하는 고용형태 비중, 소득수준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시 재정적 혜택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의 비중, 여성의 유급출산 휴가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의 비중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가족구성원 중 어머니에게 집중된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경감하면서 돌봄의 사회적 및 국가적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장에서 분석한 사회계층별 기혼여성의 특성은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정책적 대처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6장에서는 여성노인의 사회적 위험요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고령인구 중 여성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령층 중에서도 여성노인이 수반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령 여성노인들은 수명의 연장으로 의료비 등 생활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인적인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그러므로 여성노인의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의 복지예산만으로 이를 대비하

기 어려움이 있다. 구체적인 분석항목은 (1) 사회계층별 노인가구의 가족과의 동거형태, (2) 65세 이상 노인 중 결혼한 아들과 같이 사는 비중, (3) 65세 이상 노인 중 결혼한 딸과 같이 사는 사람의 비중, (4) 65세 이상 배우자와 단둘이 사는 사람의 비중, (5)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서 사는 사람의 비중, (6) 65세 이상 노인 중 양로시설에 사는 사람의 비중, (7) 65세 이상 노인 중 딸과 같이 사는 사람의 비중, (8) 노인가구의 가족과의 유대정도, (9) 사회계층별로 65세 이상이 다른 가족과 떨어져 사는 거리, (10) 직접 만나는 빈도, (11) 연락하는 빈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사회계층별 돌봄의 서비스 욕구의 차이를 감안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가족과 여성을 대상으로 집단별로 분화된 정책의 개발과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부모의 취업유무, 자녀의 발달 단계 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사회계층별 맞벌이의 아이 돌봄에 대한 욕구파악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였다.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여성정책의 과제는 여성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화 현상은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새로운 여성 빈곤층의 등장에 따른 사회복지부담은 무엇인가, 새로운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구성원은 직면하는 혼란은 무엇인가,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가사분담 방식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초고령화 현상이 진전되면서 대두되는 돌봄의 책임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여성 내부의 양극화 추세 확대와 더불어 사회적 균열은 가속화될 것인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한국사회 여성의 사회집단별 사회적 위험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에서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은 궁극적으로 남녀 가족구성원이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적 참여의 보장을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1인가구 등 다양한 가구의 사회적 고립 완화와 유대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동시에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노인은 부양과 돌봄의 대상으로서 사회적 짐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전환해야 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대공존과 화합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커뮤니티의 역할 증대 및 시민 참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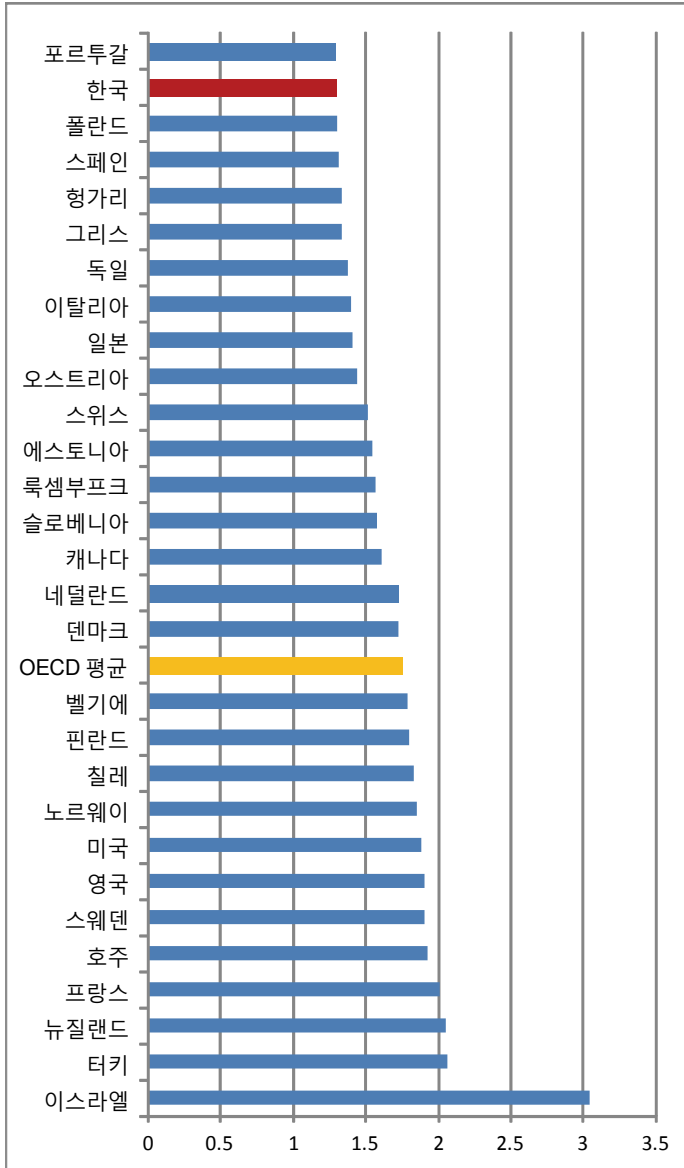
제3절 연구배경

1. 국가별 저출산 현상 동향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로 경제적으로 발전한 서구사회에서만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었다 (Billari, 2008; Morgan, 2003; Pierson, 2001; Rindfuss, Guzzo, & Morgan, 2003). 서구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해지고 성평등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서구유럽에서는 1960년대 중반에서부터 1990년대 사이에서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였고, 돌봄의 공백과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가족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출산율의 변화는 국가군과 시기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출산율이 각 국가의 사회적-제도적 맥락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유럽 등의 국가들은 출산율이 떨어지다가 점차 회복되거나 적정수준으로 유지된 반면,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급격한 하락을 경험한 이후 저조한 수준에 머물며 사회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인구대체율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의 국가 간 차이는 그 사회의 출산기피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과 그 사회적 대응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며, 출산율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출산행위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1] 주요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2012년)



출처 : The World Bank(<http://www.worldbank.org>)

선행연구들은 출산율 형태의 국가별 차이를 결정하는 사회문화적·제도적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나타난 각국의 사례는 저출산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저출산국인 22개국의 1960-1997년까지의 출산율 변화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1980년대에는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서로 부적(-) 상관관계를 가졌으나, 1990년대부터는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U자형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Rindfuss, Guzzo, & Morgan, 2003). 이는 여성의 노동활동이 반드시 출산율의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일하는 어머니를 위한 포괄적인 양육지원정책과 같이 국가가 어머니와 노동자의 역할 사이의 비양립성(incompatibility)을 완화시킴으로써 출산행위에 따르는 여성의 불이익을 경감시킨다면 출산율의 저하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출산율의 국가 간 차이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서는 각 사회의 생애단계의 특징, 가족규범, 성평등 수준 등의 차이 등이 있다(Billari & Kohler, 2004; Lesthaeghe & Moors, 2000).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은 1) 청년세대의 부모로부터 이른 경제적 독립/분가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가족제도 및 가족규범의 경직성, 3)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수준이다(Billari & Kohler, 2004). 다시 말해 청년층이 어린 연령대에 경제적 독립이 가능할수록 출산율이 높으며, 결혼 및 가족제도가 개방적이고 유연할수록 출산율이 높고, 일-가정 양립수준이 높을 때 출산율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청년세대의 독립은 젊은 세대가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배우자와 분가하면서 동거, 혼인 등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안정된 경제적 기반(예컨대, 일자리 마련, 주택마련 등)과 제도적

지원체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지지망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늦은 경제적 독립은 만혼과 출산지연의 효과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sthaeghe & Moors, 2000; Shirahase,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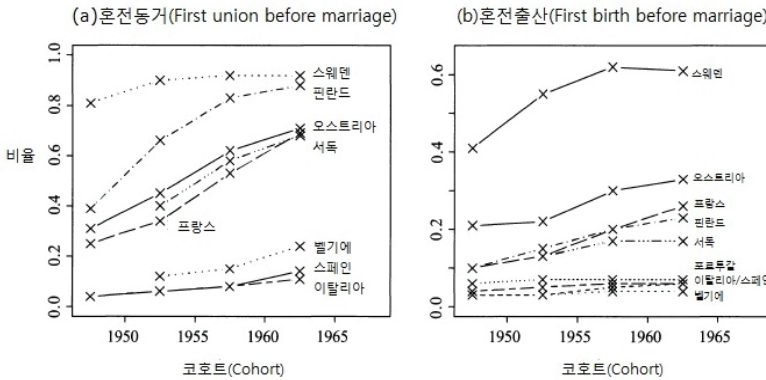
다음으로 다양하고 탈표준화된 가족제도와 생애경로의 유연화가 가능한 환경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Lesthaeghe & Moors, 2000; Shirahase, 2000). 즉 혼전 동거나 혼전출산과 같이 보수적인 결혼제도로부터 대안적 형태의 가구구성에 대한 선택의 가능성이 높고, 여성이 혼인시기, 출산시기 등 자신의 중요한 삶의 경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선택의 유연성이 높을수록 출산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회는 여성들의 일-가족 양립수준이 높기 때문이다(Ahn & Mira, 2002; Rindfuss, Guzzo, & Morgan, 2003).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우호적인 환경은 여성이 가정-일, 어머니-노동자의 역할을 병립하는데 경험하는 불일치성을 낮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여성에게 자녀를 재생산하고 양육하는데 부담이 적은 친화적 환경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그림 1-2]는 Billari와 Kohler(2004)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가별 결혼제도의 특징과 출산율과의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결혼제도의 유연성과 관련된 주요변수인 혼전 동거(first union before marriage)를 살펴보면, 1990년대의 코호트를 기준으로 스웨덴, 핀란드가 가장 높고 오스트리아, 서독이 중간,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가 가장 낮다. 혼전 출산(first birth before marriage)은 스웨덴이 가장 높고 오스트리아, 프랑스, 핀란드, 서독이 중간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는 반면,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가 가장 낮았다. 스웨덴, 핀란드 등 스칸

디나비아 국가는 출산율의 하락이 완만하였으며 큰 위기 없이 회복된 반면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남유럽 국가들은 초저출산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국가였던 것을 감안하면 가족제도의 보수성은 저출산 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Billari & Kohler, 2004).

[그림 1-2] 국가별 결혼제도의 특징과 출산율과의 상관성: (a)혼전동거와 (b)혼전출산



출처 : Billari and Wilson, 2001 (Billari and Kohler, 2004에서 재인용)

다른 연구에서는 출산율이 하락하고 회복되는 패턴에 따라 출산율의 이행패턴과 요인이 비슷한 국가군끼리 유형화를 시도한 바 있다(Billari & Kohler, 2004; Lesthaeghe & Moors, 2000; Thévenon, 2011).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스웨덴,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청년층의 이른 독립 및 분가, 성평등하고 개방적인 가족규범, 생애단계의 탈표준화, 높은 수준의 가족지원정책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출산율 역시 큰 증감을 경험하지 않고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양호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한편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대륙유럽 국가들의 경우 점차 가족 및 성역할을 둘러싼 환경들이 변화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문화와 제한된 수준의 가족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Thévenon, 2011). 대륙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은 대체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만 각 국가별로 경로의 다양성이 존재하며 U자 곡선을 그리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지중해권의 남유럽 국가들은 심각하게 출산율의 저하를 경험하고 그 이후인 1990년대 중반 이후 미미한 수준으로 출산율이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수준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김사현·홍경준, 2014). 남유럽 국가들은 청년층의 늦은 독립, 보수적인 가족규범, 경직된 가족제도, 여성의 모성성에 대한 강한 규범적 압력, 노동시장의 높은 성 불평등, 종교적 보수주의, 전체 OECD 유럽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저조한 수준의 가족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출산율의 저하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De Rose, Racioppi, & Zanatta, 2008; Paxon, 2004).

동아시아 국가 중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한국, 일본 등은 남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사회적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가족규범이 우세하고 보수적인 성역할 이데올로기로 인한 성 불평등이 높으며 청년세대들의 경제적 독립과 분가가 늦은 연령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공공지출 영역에서 낮은 수준의 가족지원제도를 갖고 있다. 요약하면 저출산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요한 특징들을 대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김영미, 2009; 이민아, 2012).

실제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한국을 포함한 OECD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 및 출산연령의 변화 패턴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표 1-1>는 북유럽 국가의 스웨덴, 대륙유럽 국가의 독일, 프랑스, 영미권 국가의 미국, 영국, 남유럽 국가의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우리나라를 각 지역별 대표국가로 선별하여 평균 출산연령의 시기별 변화과정을 비교한 것이다.

〈표 1-1〉 주요 OECD 국가들의 출산율 및 평균 출산연령의 시계열적 변화

국가	연도	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평균 출산연령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프랑스	1970	2.47	26	157	157	93	45	14	1	27.7
	1985	1.83	12	97	143	79	30	6	0	28.0
	1995	1.70	7	55	130	100	40	8	0	29.5
	2005	1.91	8	55	129	121	56	13	1	30.2
	2009	2.07	12	63	138	128	60	12	1	29.9
독일	1970	2.02	46	138	107	72	36	9	1	26.8
	1985	1.39	16	80	102	57	20	3	0	27.4
	1995	1.25	10	52	85	71	27	4	0	28.9
	2005	1.33	10	48	83	84	36	6	0	29.5
	2010	1.37	9	38	81	90	47	8	0	30.3
이탈리아	1970	2.41	32	126	153	100	53	16	1	28.2
	1985	1.41	12	73	102	66	25	5	0	28.1
	1995	1.19	7	36	81	76	32	6	0	29.8
	2005	1.30	7	33	72	88	50	10	0	30.8
	2010	1.43	6	34	75	95	61	14	1	31.3
일본	1970	2.10	4	97	209	86	20	3	0	27.8
	1985	1.73	4	61	176	85	18	2	0	28.3
	1995	1.39	4	40	113	93	26	3	0	29.4
	2005	1.22	5	34	81	83	35	5	0	30.0
	2010	1.35	5	34	85	94	46	8	0	30.6
한국	1970	4.27	13	174	298	207	111	43	8	29.8
	1985	1.66	10	119	154	38	8	2	0	26.4
	1996	1.66	3	58	180	72	16	2	0	28.2
	2005	1.14	2	19	97	87	20	3	0	30.0
	2010	1.31	2	17	85	119	35	4	0	31.0
스페인	1970	2.82	14	122	193	128	77	26	3	29.5
	1985	1.63	18	72	116	75	34	10	1	28.5
	1995	1.18	8	28	80	84	31	5	0	30.0
	2005	1.35	11	31	64	100	53	9	0	30.9
	2010	1.39	11	35	62	96	62	12	1	31.2
스웨덴	1970	1.94	34	120	129	70	27	6	0	26.9
	1985	1.73	11	81	132	86	31	5	0	28.4
	1995	1.74	9	67	127	98	41	7	0	29.2
	2005	1.77	6	47	110	125	55	11	0	30.5
	2010	1.98	6	50	120	137	69	13	1	30.7

〈표 1-1〉 계속

국가	연도	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평균 출산연령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영국	1970	2.41	50	155	154	80	35	9	1	26.7
	1985	1.79	30	95	128	77	24	5	0	27.3
	1995	1.71	28	76	108	87	36	6	0	28.2
	2004	1.76	26	71	95	100	49	10	0	29.0
	2009	1.95	25	74	108	110	59	12	1	29.3
미국	1970	2.45	63	168	145	73	32	8	0	26.2
	1985	1.84	51	109	111	68	24	4	0	26.4
	1995	2.01	57	110	112	83	34	7	0	26.8
	2005	2.04	40	102	115	96	46	9	1	27.9
	2008	2.08	41	103	115	99	47	10	1	28.0

출처 : World Fertility Data 2012,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http://www.un.org/eas/population>).

가장 급격한 출산율의 변화를 보이는 국가는 한국으로 1970년대에 합계 출산율이 4~6 사이를 나타냈으나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출산율이 급감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산업화 시기에 정부주도로 추진된 가족계획사업으로 인한 강력한 인구 억제정책에 따른 효과로 설명된다. 다른 OECD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1970년과 1986년 사이의 두드러진 출산율 감소가 나타났으나 이는 생활양식이나 가치관의 변화에서 기인된 현상으로 한국과 비교하면 변화의 폭이 완만한 편이다. 이들 국가들은 대체로 1990년 중반에서 가장 최저점을 나타내다가 그 이후부터 점차 출산율이 회복되는 완만한 U자형의 패턴을 그리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민자 가족의 구성이 높아 출산율의 위기를 상대적으로 덜 겪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프랑스는 높은 지원수준을 갖춘 출산장려 및 모성친화적 정책이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어온 결과물로 보인다. 스웨덴 역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사회적 권리로서 보장하면서 동시에 어머니가 일과 가족 양립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양육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 한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출산율이 최저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는데, 특히 한국은 전체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출산연령의 변화역시 국가별로 다양하다. 여성의 교육수준 및 성평등 의식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참여율이 증가할수록 결혼연령은 지연되며 이로 인해 출산시기 역시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역시 증가하면서 평균 출산연령이 점차 지연되는 것이 일반적인 선진국들의 추세로 알려져 왔다.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가장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국가는 이탈리아, 스페인의 남유럽 국가와 한국인데, 이들 국가는 주로 초저출산이 나타나는 국가로 분류되는 곳이다. 한국은 전체 국가 중에 급격한 증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1970년에는 다른 국가에 비해 평균 출산연령이 30대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지만 1986년에서 크게 급감했다가 그 이후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1986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였다가 증가의 패턴을 보이는 국가는 스페인, 이탈리아로 남유럽 국가들이다. 한편,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은 점진적인 방식으로 오늘날로 올수록 출산연령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으로 주로 영미계 국가에서 출산연령의 증가율이 약한 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급격한 한국의 출산연령의 변화 추이를 통해, 오늘날 한국이 경험하고 있는 초저출산·초고령화 현상은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기 보다 급격한 사회적 배경의 변화와 구조화된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

이번에는 앞서 살펴본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 패턴을 참조하여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이행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 1-2>와 [그림 1-3]에서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 중에 있다가 최근 미미한 회복을 보이는 반면 고령인구는 급속한 증가추세에 놓여있다.

[그림 1-3] 합계 출산율의 변화



<표 1-2> 합계 출산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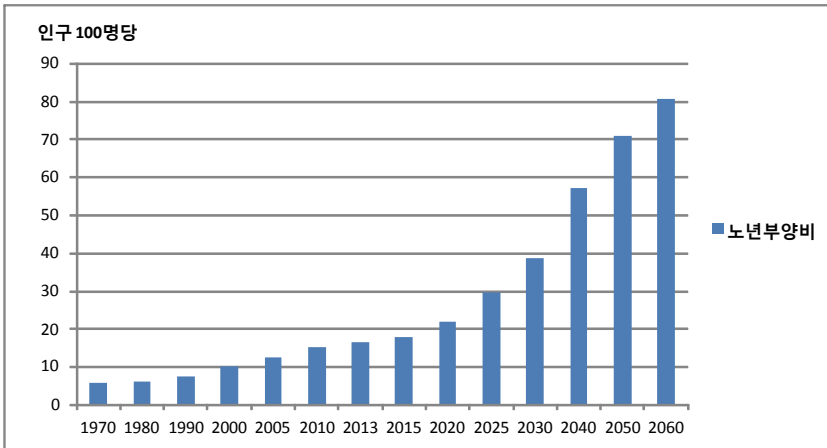
(단위: 합계출산율)

시점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출산율	1.654	1.656	1.634	1.574	1.520	1.448	1.410	1.467	1.297	1.166
시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출산율	1.180	1.154	1.076	1.123	1.250	1.192	1.149	1.226	1.244	1.297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먼저 한국의 출산율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2005년 들어 1.076의 최저출산율을 나타낸 뒤 점차 미미한 수준에서 회복하여 1.2 이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중반에 최저율을 나타낸 이후 점차 회복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추정 가능성이 있으나 만혼, 경제활동참여 등으로 인해 출산이 지연되었던 코호트 효과가 회복되고 있고, 저출산의 위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가족지원정책의 대폭적인 확대가 이루어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출산율은 여전히 1.30 내외를 넘나드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저출산 위기 의식에 따른 대대적인 사회적 투자와 정책지원의 노력과 비교해보면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편이다.

[그림 1-4] 노년 부양비



주: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인구의 수를 표시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인구 / 15세~64세 인구) × 100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년 12월.

(e-나라지표: <http://index.go.kr/potal/>)

〈표 1-3〉 노년 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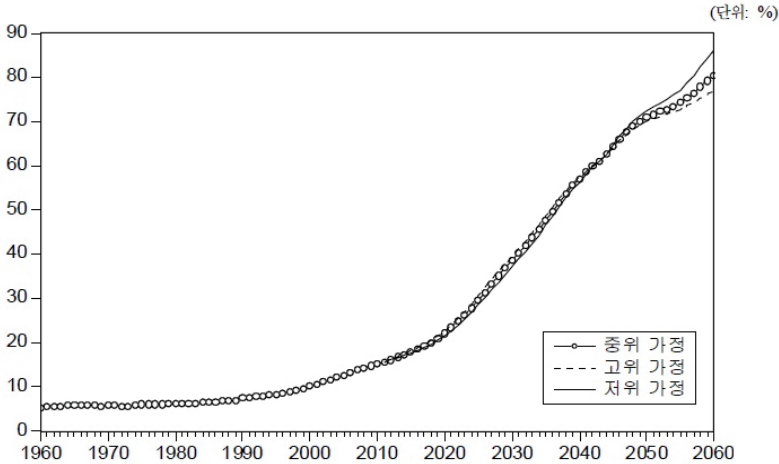
(단위 : 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인구)

년도	노년부양비	년도	노년부양비
1970	5.7	2015	17.9
1980	6.1	2020	22.1
1990	7.4	2025	29.6
2000	10.1	2030	38.6
2005	12.6	2040	57.2
2010	15.2	2050	71.0
2013	16.7	2060	80.6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년 12월. (e-나라지표: <http://index.go.kr/potal/>)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저출산과 더불어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림 1-4]와 〈표 1-3〉은 노년부양비를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볼 때 미래로 갈수록 점점 노년인구부양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년부양비는 전체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으로 생산가능연령층인 15-64세의 인구에 대해 65세 이상의 노년인구의 백분비를 환산하여 생산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의 비율을 나타낸 지표이다. 1970년에는 생산인구 100명 당 5.7명에 그쳤지만, 2005년 12.6명, 2010년 15.2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71.0명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노인인구 1인당 부양인구로 환산할 경우 2005년은 노인 1인당 7.9명, 2010년은 6.6명, 2025년은 3.4명, 2050년은 1.4명의 생산인구가 부양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5] 노년부양비의 장기추이



주: 노년부양비 = 노년인구(65세 이상)/생산가능인구(15-6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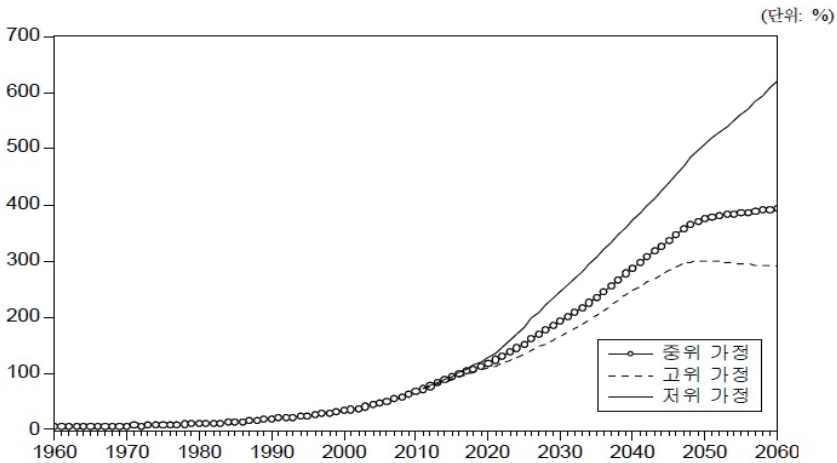
출처: 이현창 외(201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보
건사회연구원,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그림 1-5]와 [그림 1-6]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진전에 따르는 인구분포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대표적인 지표인 노년부양비와 고령화지수를 활용하여 소득수준별로 분포를 비교하고 있다. 이현창 외(2012: 25)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명이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의 수(65세 이상)를 의미하며 이는 출산율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반면, 고령화지수는 유소년 인구(0-14세) 1명당 노년인구의 수를 나타내어 저출산 및 고령화의 진전이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볼 수 있다.

[그림 1-5]의 패턴을 보면 노년부양비는 2020년을 기점을 급격히 증가하면서 2050년에는 약 70%에 도달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가정은 고소득층보다 더 높은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화

지수 역시 노년부양비와 마찬가지로 증가추세를 나타내지만, 고위 가정이나 중위 가정의 경우 2050년을 기점으로 점차 회복되는 반면 저위 가정의 경우 이러한 회복의 변화 없이 가장 급격한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소득분포에 따른 인구구조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며 특히 저위가정에서 고령화-저출산에 따르는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많은 지표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출산율의 감소와 회복을 경험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1-6] 고령화지수의 장기추이



주: 고령화 지수 = 노년인구(65세 이상)/유소년인구(0-14세)

자료출처: 연도

출처: 이현창 외(201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보건사회연구원,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3. 한국의 저출산 정책의 전개과정

한국에서는 1962년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실시와 함께 인구증가 억제 정책과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해 왔다. 한국은 이미 1984년에 출생률이 일본에 비해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서 “2명도 많다”는 슬로건 하에 자녀 한 명으로 자녀수를 제한하는 출산억제정책을 지속하였다. 정부가 출산아동수를 제한하는 정책의 포기를 선언한 것은 1994년이 되어서부터이다(裴海善, 2012; 池本 美香·韓松花, 2014: 99).

1996년부터 2003년에는 정부는 인구 자질 및 복지증진정책으로 전환하였지만,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은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한국에서 저출산이 정책과제로서 부상한 것은 2002년의 출생률이 1.30 밑으로 낮아져 초저출산국이 된 2003년이다. 그 뒤 출산율은 2003년 1.180, 2004년 1.154로 하락하여 특히 2005년에는 1.076의 역대 가장 최저수준을 나타내면서 저출산 문제가 향후 우리사회의 중대한 위기요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저출산 대책의 필요성이 비로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²⁾을 제정하였고, 보건복지(가족)부는 2006~2010년을 대상으로 한 『2006-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하였다. 『2006-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저출산대책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출산-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일-가정 양립가능 사회시스템 구축,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의 책임 강화를 위해 육아비용의 직접적 지원, 방과후 학교 대폭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및 직장보육 시설 등 육아지원시설 확충, 민

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간 육아지원 시설의 서비스 개선 및 질 관리 강화, 모성 및 영유아 건강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수행하고, ② 개인과 가족, 사회가 함께 하는 가족친화적, 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사업으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근로형태 유연화), 가족친화적 기업경영모델 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성평등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③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를 확대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본계획 시안은 영유아기 자녀양육 지원에 재정적 투자, 방과 후 학교의 설립을 통한 사교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프라와 제도 확립, 국내입양 활성화, OECD 국가 평균수준인 약 1.6 정도로의 출산율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저출산을 위기로 호명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표명되어 있다. 2011~2015년의 제2차 계획은 “점진적 출생율의 회복 및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책의 확립”, 2016~2020년의 제3차 계획은 “OECD 평균 출산율(1.6명)까지의 회복과 고령사회에 대한 원활한 적응”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池本 美香·韓松花, 2014: 10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2005년에는 「건강가정기본법」도 동시에 시행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기초하여 책정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은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제시하고, 남성의 가정생활 참여 지원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라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007년에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남성이나 가족을 중핵으로 한 환경이 바뀐 뒤,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강조되었다. 같은 해에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다. 2008년에는 육아 등을 이유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법」도 제정되었다(池本 美香韓松花, 2014: 100). 이러한 법률적 변화는 초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한 위기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초기에 제정된 모성지원정책은 주로 남성 생계부양자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가족모델과 성역할 관념 속에서 전일제 노동자의 사회보험을 위주로 발전되어 왔으며, 돌봄은 공적 영역이기보다 사적 영역의 책임으로 가족 내 여성의 역할에 국한된 형태로 인식했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저출산 현상이 노동력 부족, 생산성 하락 등의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인식되면서 양육, 돌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일-가족 양립의 다양한 법적, 경제적 기반이 확장되기 시작하였다(김영미, 2009).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역시 당시에는 전형적인 핵가족만을 가족의 단위로 간주하면서 가족중심주의를 조장한다는 등의 비판도 있었으나 “건강가정”이란 특정 형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가정생활의 질의 향상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역할을 명시하고 가족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공적 대응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池本 美香韓松花, 2014: 99).

구체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살펴보면, 1)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2) 육아휴직,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아래의 <표 1-4>는 각각의 정의와 수혜범위 등을 설명한 것이다.

<표 1-4> 모성보호제도의 종류

모성보호제도	내용
출산전후 휴가급여	-정의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표 1-4〉 계속

모성보호제도	내용
출산전후 휴가급여 (계속)	-지급 •임신 중인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
	-수혜범위 •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지급액: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
육아휴직	-정의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될 경우(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함
	-수혜범위 •급여방법: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을 지급 •휴가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
	-지급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경우(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아야 함

〈표 1-4〉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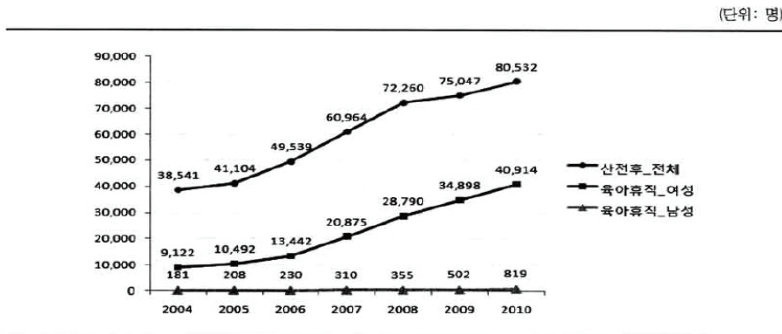
모성보호제도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계속)	-수혜범위 •수혜방법: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가능 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됨(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 •지급액: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의 지급액 •임금지급: 통상임금의 4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

[그림 1-7]은 모성보호제도로 보장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수혜자 규모를 나타내며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전후 휴가급여는 2002년 22,711명에서 2009년 70,506명으로 확장되었고, 급여비용 역시 2002년 226억원에서 2010년 192억 5천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큰 성장세가 나타나지 않아 여전히 육아와 모성의 역할이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한계도 존재한다(조준모, 2012).

[그림 1-7] 모성보호제도 휴가·휴직자 추이



출처: 조준모(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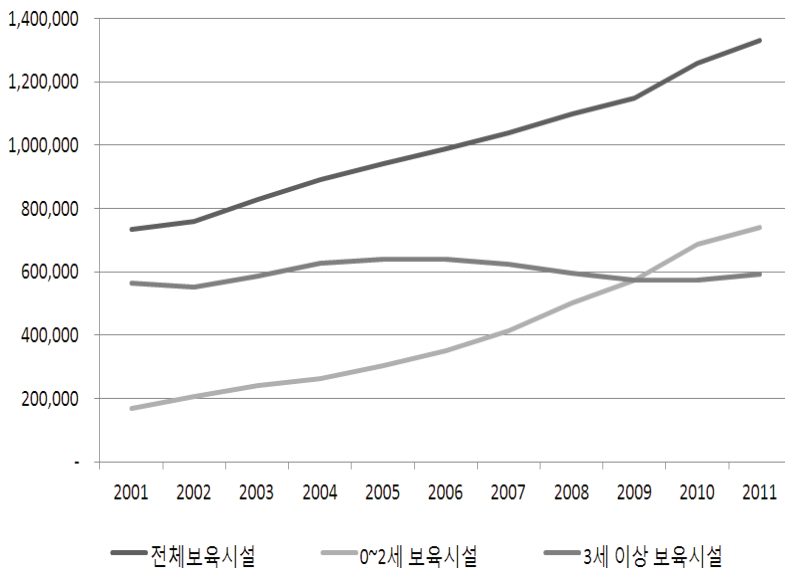
모성 및 육아휴직제도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시행 과정에 있어 몇 가지 현실적인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실적으로 휴가제도가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일제 장시간의 노동을 중심으로 한 기업문화에서 휴직제도의 사용은 직장에 대한 낮은 헌신도로 간주되어 여러 가지 인사상의 불이익이 주어지며, 무엇보다 휴가를 사용하는 여성들의 결원보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부모휴가의 사용은 직장과 주변동료의 불편을 증가시키는 부담스러운 일로 여겨지고 있다(유계숙, 2012; 홍정화, 2012).

무엇보다 휴가제도는 사회계층별로 혜택의 접근성이 제약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휴가제도는 사실상 고용보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수의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휴가제도의 이용은 특히 인력풀 및 자원이 큰 대기업과 결원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영세업 사이의 큰 편차가 발생한다. 육아휴직제도는 기업규모 및 업종, 고용상의 지위에 따라 그 활용에 있어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다수기업들은 높은 시행률에 비해 기업 간 이용률의 격차가 나타났으며 특히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과 정규직 등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이용률이 적다(유계숙 외, 2007).

한편, 직장여성들의 돌봄을 보조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역시 지난 2000년 이래로 꾸준히 확장 중에 있다. OECD는 국가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이 지녀야 할 핵심요소로 1) 보육·교육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보편성과 형평성의 조화, 2) 서비스 질 향상과 보장, 3) 서비스와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 강화, 4) 보육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적절한 훈련과 근로조건 제공, 5)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개발과 이행, 6) 보육과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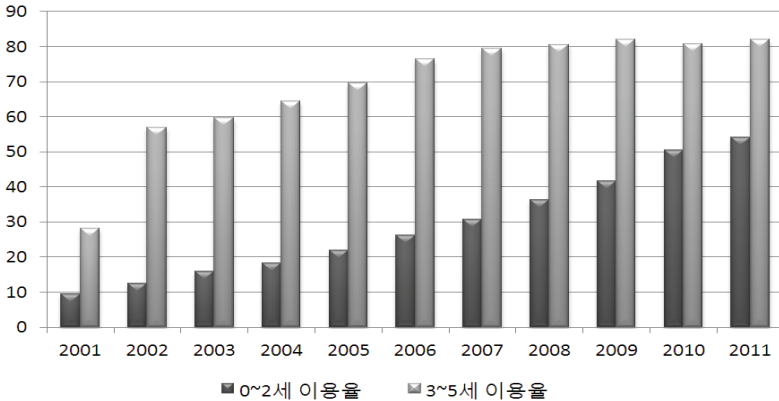
체계간의 파트너십 구축, 7) 체계적인 감독과 자료 수집, 8) 연구와 평가를 통한 장기적 아젠더 제시(신윤정·김윤희, 2012: 18)의 8가지 사항을 지시하였다. 하단의 [그림 1-8]과 [그림1-9]는 국내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지원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지난 10년여 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가 꾸준히 증가 중에 있으며 특히 0-2세 아동을 중심으로 한 보육시설의 등록률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0-2세 아동보육은 주로 어머니의 경력지속을 위한 것이며, 3-5세는 아동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림 1-8]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추이(2001-2011)



출처: 신윤정·김윤희(2012: 133), 원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그림 1-9] 전체 0~5세 아동 및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아동수(2001~2011)



출처: 신윤정·김윤희(2012: 134), 원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 통계 각 연도, 통계청 추계인구.

아래의 <표 1-5>와 <표 1-6>은 국내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제도적 확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1-5>는 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확대되어 <표 1-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급여수준 역시 꾸준히 성장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 시설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확대 추이(1999~2012)

	1999	2000	2004	2005	2006	2007	2009	2011	2012
만 0-1세	법정 저소득층				법정저소득층 + 최저생계비 120% 이하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50%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	전체
만 1-2세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
만 3-4세									
만 5세		법정 저소득층 +기타 저소득층 (만 0-4세 보육료 지원 대상)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90% 이하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 득 90%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 득 10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전체	

출처: 신윤정·김윤희(2012: 138), 원자료: 각 연도 보육사업 안내

〈표 1-6〉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 수당 대상 및 급여 확대 추이

연도	지원연령	지원 대상	지원액
2009.7~ 2010	만 0-1세	차상위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	월 10만원
2011	만 0-2세	차상위 저소득층: 월가구소득(4인기준) 173만원 이하	만 0세(월 20만원) 만 1세(월 15만원) 만 2세(월 10만원)
2012	만 0-2세 (장애아동: 만 0-5세)	차상위 저소득층: 월가구소득(4인기준) 180만원 이하 농어촌 아동: 농지 5만㎡, 농어업 외 소득 연간 4천만원 미만(1자녀 기준) 장애아동: 소득무관	- 차상위 이하: 만 0세(월 20만원) 만 1세(월 15만원), 만 2세(월 10만원),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별보육료지원단가의 45% 장애아동 양육수당: 만 0-2세(월 20만원), 만 3세-취학전 만 5세(월 10만원)

출처: 신윤정·김윤희(2012: 138), 원자료: 각 연도 보육사업 안내

〈표 1-7〉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기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013	계	1,486,980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4,479
		100.0	10.4	7.3	3.5	51.8	24.5	2.3
	남	768,523	79,934	57,048	26,670	397,270	187,899	17,967
2012	녀	718,457	74,531	51,786	25,014	372,909	176,214	16,512
	계	1,487,361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881
		100.0	10.1	7.6	3.5	51.7	25.0	2.0
2011	남	769,573	77,321	59,562	26,867	397,021	191,722	15,508
	녀	717,788	72,356	53,487	25,047	371,235	179,949	14,373
	계	1,348,729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4,987
		100.0	10.6	8.4	3.8	52.4	22.9	1.9
	남	699,806	73,850	59,408	26,341	366,164	159,878	12,917
	녀	648,923	69,185	53,280	24,335	340,483	148,532	12,070
2010		1,279,9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21,901
2009		1,175,049	129,656	112,338	52,718	623,045	236,843	18,794
2008		1,135,502	123,405	113,894	53,818	615,647	210,438	16,809
2007		1,099,933	119,141	118,211	55,906	612,484	177,623	15,124
2006		1,040,361	114,657	120,551	58,808	582,329	148,240	14,538
2005		989,390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12,985

〈표 1-7〉 계속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004	930,252	107,335	135,531	48,414	507,398	119,787	미분류	11,787
2003	858,345	103,474	140,994	37,911	461,640	103,935	미분류	10,391
2002	800,991	103,351	142,035	30,289	425,647	90,939	미분류	8,730
2001	734,192	102,118	161,419	16,483	369,044	77,247	미분류	7,881
2000	686,000	99,666	157,993	15,949	336,625	67,960	미분류	7,807
1999	640,915	99,866	151,652	13,195	301,630	67,294	미분류	7,278
1998	556,957	91,260	141,616	9,290	250,000	58,968	미분류	5,823
1997	520,959	89,002	123,567	6,727	227,951	68,467	미분류	5,245
1996	403,001	85,121	99,119	2,735	153,990	58,440	미분류	3,596
1995	293,747	78,831	77,187	591	92,634	42,116	미분류	2,388
1994	219,308	70,937	63,466	759	55,743	27,427	미분류	976
1993	153,270	55,133	44,026	854	35,520	17,012	미분류	725

주: 2013년 12월 31일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2013 보육통계』.

〈표 1-8〉 어린이집 일반 현황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어린이집수	개소	43,770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
	(비중)	100.0	5.3	3.3	2.0	33.7	54.0	0.3	1.4
아동수	정원	1,782,459	170,050	139,669	62,820	937,632	423,533	3,972	44,783
	(비중)	100.0	9.5	7.8	3.5	52.6	23.8	0.2	2.5
	계	1,486,980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226	34,479
	남	768,523	79,934	57,048	26,670	397,270	187,899	1,735	17,967
	녀	718,457	74,531	51,786	25,014	372,909	176,214	1,491	16,512
	(비중)	100.0	10.4	7.3	3.5	51.8	24.5	0.2	2.3
보육교직원	정원비율	83.4	90.8	77.9	82.3	82.1	86.0	81.2	77.0
	계	301,719	26,750	18,765	8,703	136,180	102,731	730	7,860
	남	13,182	806	1,768	672	8,304	1,534	18	80
	녀	288,537	25,944	16,997	8,031	127,876	101,197	712	7,780
	(비중)	100.0	8.9	6.2	2.9	45.1	34.0	0.2	2.6
	아린이집1개당 아동수	34	66	76	60	52	15	25	56
보육교직원1인당 아동수		4.9	5.8	5.8	5.9	5.7	3.5	4.4	4.4

주: 2013년 12월 31일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2013 보육통계』.

그러나 현행 양육지원서비스 역시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여전히 제도적인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예시로, 국공립양육시설과 마찬가지로 다수 부모들은 직장 내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높은 편이나 이러한 높은 선호와 달리 실제 보급률은 미흡한 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하지만 <표1-9>와 <표1-10>은 이러한 설치의무가 잘 이행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나타내준다.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부모들이 현실적인 수요를 갖는 보육시설들에 대한 제도적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직장 내 보육시설의 준수 역시 제도적 괴리를 방지하지 말고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9>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결과

(단위: 개소)

구분	의무사업장	의무이행				미이행
		소계	시설설치	보육수당	위탁	
2010년	576	340	179	126	35	236
12월	100.0%	59.0%	31.1%	21.9%	6.0%	41.0%

출처: 2011년 고용노동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유계숙, 2012 재인용)

<표 1-10>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 사유

(단위: 개소)

미이행 사업장	계	보육수요 부족			재정 부담	부지 확보 곤란	기타
		보육아동 없는 경우	보육 아동 적은 경우	부모이용 수요 적은 경우			
전체	236	106	5	34	67	37	47
	100.0	44.9	2.1	14.4	28.4	15.7	19.9

출처: 2011년 고용노동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유계숙, 2012 재인용)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되고 있는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현상에 대한 학술적 고찰을 위해 통계청, World Bank, OECD의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별 저출산 특성을 유형화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 간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추세를 살펴보고, 다른 국가의 특성을 한국 사회의 특성과 비교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인구적·경제적·사회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친화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 저출산 동향을 살펴본 결과, 90년대 이후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은 양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U자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여성의 노동활동과 출산율이 반드시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양육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출산율의 저하가 완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청년층의 이른 경제적 독립 가능성, 결혼 및 가족제도의 개방성 및 유연성, 일-가정 양립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 출산연령의 변화를 국가별로 살펴본 결과, 여성의 교육 수준 및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결혼연령 역시 높아졌다. 결론적으로 높은 결혼연령은 평균 출산연령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앞서 살펴본 국가들의 출산율 패턴과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비교·고찰하기 위해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의 변화 이행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본 결과, 1993년 이후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00년 중반 이후 미비하게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장래인구추계를 통한 노년부양비를 추정한 결과, 앞서 살펴본 저출산 경향으로 인해 인구고령화 역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년부양비와 고령화지수를 활용하여 소득수준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노년부양비와 고령화지수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소득분포에 따라서 노년부양에 대한 격차가 심화될 수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저출산 정책의 전개과정을 고찰한 결과 모성보호제도인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자 및 급여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아, 육아와 모성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휴가정책이 여성노동자들에게 법정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휴가를 이용하는 여성노동자의 수는 많지 않으며, 이용자들도 주로 대기업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이었다. 다음으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정책이 제도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급여수준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저출산정책의 증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이 정책을 적절하게 이용하느냐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 모성보호제도의 실질 이용 가능성 및 사회계층별 혜택 접근성에 대한 객관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2장

초저출산·초고령화의 진전과 여성의 사회적 위험

- 제1절 저출산 문제를 둘러싼 다섯 가지 시각들
- 제2절 재생산과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 강화
- 제3절 가족구성과 생애경로의 다양화와 불확실성
- 제4절 여성의 노동활동 참여와 성별 노동시장의 불평등
- 제5절 가족 내 성역할 변화와 돌봄의 부담
- 제6절 일-가족 양립을 둘러싼 갈등의 확대
- 제7절 소결

2

초저출산·초고령화의 진전과 <<

여성의 사회적 위험

제1절 저출산 문제를 둘러싼 다섯 가지 시각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경제발전을 이룬 선진사회에서는 저출산화 경향이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Billari, 2008).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사회적 위기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저출산이 필요이상으로 과장되어 있는 위기이며, 저출산을 사회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흐름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즉, 저출산은 근대화, 가족변화에 수반하는 불가피한 추세이며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여성의 역할 변화 등 부모, 자녀, 가족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적응이라는 것이다(Morgan, 2003).

이러한 관점을 가진 학자들은 저출산 현상이 세대 간 재생산의 근본적인 구조를 위협한다는 논의는 지나치게 회의주의적이라고 설명한다. 저출산 문제는 서구유럽, 영미권 등 정책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경제발전국가에 국한된 문제이며 인구과잉으로 인한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과정으로 다루어 왔다. 더욱이 개인주의와 성평등이 확대되어 ‘두 자녀를 갖는 것’은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 인구대체를 이하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초저출산 사회의 위험은 도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점진적으로는 현재의 세대재생산이 대체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각국의 출산율의 추이를 비교해본 결과 유럽의 경우는 명확하게 초저

출산의 위험은 근본적인 사회의 위협요인은 아니다. 그리고 유럽국가 이외에 동아시아, 북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몇몇 지역에서도 출산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 모성보호정책 및 가족정책, 출산지연(tempo effects)의 완화, 높은 이민자의 출산율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부터 기인한다고 설명한다(Goldstein, Sobotka, & Jasilioniene, 2009).

이처럼 저출산이 과연 사회적 위기인가는 아닌가는 여전히 논쟁 속에 놓여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출산율의 하락은 구조화된 돌봄의 공백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고령사회로의 이행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사회적 위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저출산은 여성과 그 여성을 둘러싼 친밀한 영역의 행위자들(예를 들어, 남성배우자 등)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지연하게 만드는 현상이 사회적 수준에서 재생산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은 여성이 출산을 통해 가족과 사회적 수준에서의 재생산을 수행하는데 경험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모순성과 성 불평등의 맥락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저출산을 여성의 경험으로 이해하는 젠더적 시각에서 출발할 것이며, 다양한 집단의 여성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을 살펴보고 우리사회의 출산의 위기를 구성하는 거시적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저출산의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다섯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재생산 문제를 여성의 몸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통제로 해석하는 여성학적 시각이다. 여성학적 접근에서는 출산력을 여성의 몸에 대한 개입과 재생산의 통제로 이해하고 모성의 사회적 위치 및 정치적 의미를 재조직하는 구조적이고 제도적 결과로 설명한다.

둘째, 저출산의 요인을 가족제도와 가족규범의 변화로부터 찾는 관점들이 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학자들에 의하면 가족구조가 탈표준화되

고 생애단계의 경로유연성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가족관계가 출현하게 된다. 그래서 결혼, 출산, 부모됨과 육아 등 생애단계의 이행과정에서 전통적 성역할과 가족규범이 해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만혼과 비혼커플의 증가로 인해 기혼상태인 두 남녀 및 혈연적 관계의 자녀를 중심으로 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약화되고 새로운 가족생활양식이 등장한다. 유연하지 못한 가족규범은 여성의 생애단계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과 일치하지 않아 여성으로 하여금 출산을 기피하거나 늦추도록 만든다.

셋째, 저출산과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을 견지하는 학자들은 근대화나 경제발전수준에 따른 출산율 변화의 이행과정에 주목한다. 특히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전통적 성역할의 수행이 약화되고, 그 결과로 출산율이 낮아진다. 더 나아가, 노동시장에서의 젠더화된 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여성임금수준, 노동시간의 유연화 가능성, 실업률 등과 같이 노동시장의 성평등 수준은 여성의 출산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저출산과 성역할 및 돌봄을 둘러싼 성 불평등의 문제에 주목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생산 및 재생산 영역에서의 젠더위계와 성 불평등에서 기인한다. 성별분업, 가사노동과 돌봄시간의 분담, 사회제도 간 성평등 수준의 격차 등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되고 제도화된 성 불평등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불리한 지위에 대응하여 출산을 회피하고 지연하게 만든다.

다섯째, 저출산과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적 대응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여성의 가족돌봄 의무를 경감하고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한 관행을 해소할 경우 여성의 출산기피를 해결할 수 있다. 일-가족 양립정책은 노동시간 및 근로조건 유연성의 증대시키고 부

모휴가와 같이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므로 공공보육시설과 출산 및 육아수당, 부모휴가 등 다양한 돌봄지원정책이 출산율의 증가에 효과적이다.

제2절 재생산과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 강화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은 인구감소 등의 인구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등의 경제 영역 및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 중에서 재생산과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 강화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학적 시각에서 학자들은 출산율의 문제는 여성의 몸과 재생산 능력을 통제하는 권력관계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가는 여성의 몸과 모성을 필요에 따라 정책적으로 도구화한다. 여성의 재생산 능력은 모성성과 돌봄,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해 정치적 의미를 재조직하는 중요한 의미구성의 대상이 된다. 한국에서 출산에 대한 정책적 접근 사례는 어떻게 여성의 몸이 국가권력의 통제로 인해 정치적 담론의 공간으로 재구성되는지 중요한 단서를 보여준다. 예컨대 과거 산업화 시기에는 산아제한정책을 통한 출산통제가 중요한 사회적 담론이었다. 이와는 달리 오늘날 탈산업 사회에서는 출산지원정책을 통해 여성의 출산을 규범적으로 장려하는 등 모성성을 국가주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여성학주의 연구들은 출산권, 양육권, 노동권과 관련하여 여성의 출산권의 변화와 출산이 여성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저출산 위기 담론은 생산 인구 감소와 노동인력 부족이라는 성장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국익을 위해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는 국가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저출산 위기에 관한 또 다른 담론은 정상가족 규범 위기 담론이다. 이 담론에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젠더관계를 전제로 하는 정상 가족 규범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에는 일-가정이 엄격히 분리되지 않은 환경에서 출산이 여성 권리와 지위획득에 도움이 되었으나 현재의 환경에서는 그것들 간의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출산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손승영, 2007). 국가주도의 가족계획은 모성을 도구화하고 사적인 것으로 축소하였고 이를 통해 국가, 가구, 개인(여성) 수준에서 각각 이익을 위해 출산 기피를 선택하여 저출산 사회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황정미, 2005). 근대적 모성 규범은 여성의 몸에 대한 개입과 모성의 사회적 위치 및 정치적 의미를 재조직화하였고 자녀생산과 돌봄의 권리는 사회적으로 평가절하 하였다.

반면, 여성의 출산행위가 반드시 국가주도적인 통제로부터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여성의 자발적 행위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 관점은 한국의 저출산에 대한 시각이 주로 국가주의 담론에 의해 전유되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즉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출산율의 변동은 가족계획사업의 결과가 아니며 여성의 행위성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배은경, 2010). 특히 90년대 이후의 저출산은 결혼연령의 상승이 그 주요 효과이며, 일-가족 병행을 위한 합리적 선택에 따른 것이다. 저출산에 대한 대안으로 저자는 어머니와 자녀를 도구화하는 모성성이 아닌 보살핌, 교류를 통한 모성성의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즉, 여성을 ‘출산하는 몸’으로 규정하고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여성의

이중부담과 돌봄의 공백, 일-가족 양립, 성평등 증진 등의 노력으로 어머니노릇, 모성, 돌봄 자체를 인정하고, 어머니노릇을 적극적으로 의미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3절 가족구성과 생애경로의 다양화와 불확실성

가족구조 및 생애경로의 다양화, 탈표준화 역시 출산을 그리고 인구학적 변화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 즉, 급속한 사회변화는 가족 영역에까지 침투하여 기존의 가족 정의에 대한 도전과 함께 새로운 가족 개념을 등장시켰다. 구체적으로 현대사회에서는 한 가지 획일적인 형태의 가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유형이 존재하며 그 가변성 역시 존재하여 ‘가족(the family)’이라는 단수의 가족 개념에서 탈피하여 ‘가족들(families)’이라는 복수의 가족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기틴스, 1997; Skolnick, 2013).

한국 가족의 경우, 세대 구성에 있어서 3세대에서 2세대 혹은 1세대 구성으로의 ‘구조적 단순화’와 가족의 형태에 있어서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1인가구, 비혈연가구 등의 비정형가족 비율의 증가로 인한 가족 형태의 다양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태상 비정형 가족의 증가’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김혜영, 2008).

가족구성에서의 다양하고 탈표준화된 삶의 양식의 증가는 출산율 증가 및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혼전동거에 관대한 사회나 젊은 세대의 이른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사회는 출산력을 끌어올리지만, 결혼을 중심으로 한 경직된 가족제도 및 젊은 세대들의 늦은 독립과 분가는 출산율 저하를 악화시킨다.

유럽, 일본 등을 대상으로 한 출산율의 추이와 가구구성의 탈표준화(destandardization)에 관한 추이를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출산율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의 인구변화(first demographical transition)는 출산 시 증가된 연령으로 인한 자발적인 출산율의 감소 현상을 지칭한다. 두 번째 시기의 인구변화(second demographical transition)는 효율적인 피임기구 보급 및 근대화로 인해 일반화된 부모단계 이행의 지연으로 인해 나타난다. 두 번째 시기의 출산율 저하 현상은 주로 부모로부터의 독립(home leaving)과 분가(household formation)의 패턴들의 비표준화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탈표준화는 18세에서 30세 사이의 개인들의 생애단계의 이행에 대한 표준적인 규칙(standard ordering)이 사라지면서 야기되는 변화를 의미한다. 즉, 1인가구, 동거가구, 부모와의 동거인구, 혼외자녀 출산, 파트너 없는 출산 등의 다양화된 가구 생활양식이 교육단계 이행 후와 노동시장 진출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탈표준화는 청년 세대의 독립적 생계의 유지가능성 및 혼전 동거의 생활방식이 증가하는지 아니면 경제적 독립의 어려움으로 인한 늦은 분가로 인해 부모세대와의 동거형태가 증가하는지에 따라 출산율의 변화를 야기하며, 일반화된 초혼연령의 지연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Lesthaeghe & Moors, 2000).

실제로 가족제도의 변화와 출산율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비혼 동거, 이혼, 미혼모와 같이 결혼으로 인한 가구구성 이외에 다양한 방식에 대한 선택가능성이 많을수록 혼인 외 출산이 증가한다.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국가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Rindfuss, Guzzo, & Morgan, 2003). 이러한 사실은 여성이 기존의 표준적인 가족제도 형태로부터 경제활동을 양립하는데 경험하는 불일치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화된 형태로의 가구생활을 모색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사회적 수준에

서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보수적 성역할의 약화는 모성성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대안적 형태의 보육서비스(공공보육시설, 베이비시터 등)가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낮추어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Ahn & Mira, 2002).

생애단계의 유연화 및 탈표준화 역시 출산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다. 어떤 사회가 여성에게 경직된 생애과정의 이행순서와 시기를 요구할 경우 여성은 자신의 삶의 경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선택가능성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거나 미루게 된다. Shirahase(2000)의 연구는 일본사회의 저출산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로서, 출산율과 그동안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설명변수였던 가족배경과 교육적 성취, 첫 직장의 직업군(예컨대, 전문직의 여부), 교육연수와 연령 코호트 간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은 출산율을 낮추는데 유의하지 않았다. 가족배경과 첫 번째 직업은 제한적인 효과만 나타났으며 출산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설명변수는 연령이었다. 특히 저출산은 결혼 시 여성의 연령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혼인연령이 점점 증가하면서 저출산의 패턴이 출현하였고, 여성이 언제 결혼할 것인가, 언제 자녀를 낳고 직업을 그만둘 것인가 등의 생애단계의 문제에서 선택의 경직성이 증가하면서 자녀양육환경과 불일치를 이루며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illari(2008) 역시 유럽에서 초저출산이 나타난 주요한 요인을 자녀출산의 지연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근대화와 새로운 가족 행위양식의 출현으로 인한 가치와 규범, 문화에 대한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일부 초저출산 국가에서는 이

민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인구증감의 균형을 유지하였다. 이는 저출산이 반드시 인구감소의 위기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구변화의 이행과정에 놓일 가능성을 제안했다.

또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역시 가족형성의 지연과 약화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더 이상 결혼과 출산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사회적 적령기의 개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김혜영, 2008; 정성호, 2009).

제4절 여성의 노동활동 참여와 성별 노동시장의 불평등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한 성장을 보여 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42.8%, 1990년 47%, 2000년 48.6%, 2010년 49.4%, 2013년 현재 50.2%로 1980년에 비해 7.4%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이처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로 인해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2인생계부양자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하고 아버지의 양육분담 역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여전히 여성이 완전한 성인으로서의 지위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Arendell, 2000). 자녀양육의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여전히 어머니이며 여성의 책임을 공고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존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사 및 돌봄 노동은 남성과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다. 노동시장 내에서도 구조화된 성 불평등으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들과 승진, 임금, 업무분담에서 인해 차별을 경험한다.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에 관한 선행연구는 성 불평등 구조 및 원인을 다루고 있다.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 구조를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진수희(1992)는 한국노동시장에서의 성적불평등을 시장 외적요인과 시장 내적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시장 외적요인은 가부장적 성별 분업이라는 제도적 요인과 경제의 이중구조로 인한 경제구조적 요인이다. 시장 내적요인은 직종선택상의 제약, 기업의 가부장적 고용형태, 고용상의 이중구조이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직종분리와 임금격차 등의 성 불평등 현상이 나타난다. 이정옥(1993)에 의하면, 노동시장에서의 성 불평등 구조는 자본·남성·국가의 삼중체계가 맞물려 작동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본의 측면은 여성이 사적 영역을 담당함으로써 노동통제와 노동 착취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에 기능적이다. 여성의 가사전담구조 역시 남성의 지배를 가능케 하며, 자본과 남성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가족과 모성 역할을 신화화함으로써 여성의 성 불평등 구조를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 원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권혜자(2008)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노동경력단절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경력단절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보다 출산과 육아때문에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여성의 'M자형 노동공급 곡선'을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성의 일-가족 양립가능성을 지지하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면 여성의 경제활동은 단기적으로는 출산율을 낮추지만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Ahn과 Mira(2002)은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국가, 중간 국가, 낮은 국가의 세 군집으로 나누어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유형별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국가에게서 더 급격하게 출산율이 낮아졌으며, 참여율이 높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출산율 변화의 폭이 완만하였다.

성 불평등의 원인으로 여성의 일과 가족의 역할 불일치(role incompatibility)와 출산율과의 상관성을 살펴본 연구들도 존재한다. Rindfuss와 Brewster(1996)은 국가마다 출산율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여성이 노동시장의 업무 스케줄과 가정에서의 일이 양립할 수 있는지, 양자 간에 유연성이 존재하는지에 좌우된다고 설명한다. 부모휴가제도나 유연근무제같이 일-가족의 양립을 돕는 제도를 확충하고, 여성에게 대안적 형태의 자녀양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 여성은 일-가족 역할 부정합을 적게 인지한다. 그 결과 가족돌봄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게 되고 이는 출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5절 가족 내 성역할 변화와 돌봄의 부담

오늘날 가족유형은 결혼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양(兩) 부모-자녀’의 표준적 형태를 벗어나 점차 더 다양한 개념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생애단계 역시 ‘독립-취업-결혼-출산-육아’의 단일화된 경로로부터 개인화된 복잡성이 증가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생활의 탈표준화와 복잡성의 증가는 고용의 경로 역시 변화를 야기하며 일과 가족생활에 대한 새로운 경계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즉,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른 일과 가족생활의 적절한 균형을 사회적 지원체계 안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어가고 있다(Lesthaeghe & Moors, 2000; O’Brien, 2012).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가족 구조 및 형태의 변화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의 증가는 가족 내 성역할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기혼여

성 중 취업한 여성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과 가사 분담자로서의 여성, 혹은 도구적 역할을 담당하는 남성과 표현적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이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성역할에 대한 사고가 변화되기 시작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는 유급노동과 양육을 담당하는 데 있어 남성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전의 가부장적인 모습과는 달리 가사와 육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신(新) 남성상(New man)과 새로운 아버지상이 등장하였다(Wilcox, 2004), 단순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전통적인 아버지의 역할은 어머니와 더불어서 아이를 함께 키우는(equal co-parenting: Pleck & Pleck, 1997)것으로 변화되었다.

아버지의 다양한 역할이 등장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후기 근대사회에 존재하는 아버지상의 역설(paradoxes)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Dermott(2008)는 최근 육아에 함께 참여하는 아버지의 등장을 주장하기에는 역설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부재(absence)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부재란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거나 감정적인 거리감이 존재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주로 빈곤층이면서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동거커플 사이에서 아이가 출생한 후 아버지가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가족구성상 아버지됨의 구성(construction)에 대한 모순은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되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동성애 부부나 입양, 재혼과 같이 생물학적인 유대가 없이도 아버지가 될 수 있다. 또한 익명으로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제공함으로써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가족으로서의 유대관계가 없다. 이와 같이 현대에는 가족이 구성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화되고 있다. 요약하면 부성이 구성되어가는 과정이 점차 복잡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는 생물학적인 아버지보다는 사회적인 역할을 통해서 구성되는 아버지(social fatherhoods, Dermott, 2008: 14)가 보다 중요하게 부각된다. 생물학적 관계가 없는 사회적 아버지가 점차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좋은 아빠’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인식도 확산되게 된다. 인공수정 등 다양한 재생산기술이 발전하면서 생물학적인 아버지와 사회적인 아버지가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입양이나 재혼의 과정을 통해 생물학적인 유대가 없이 아버지가 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된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자식이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귀속적(ascribed)인 것 이라기보다는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얻어지는 성취적(achieved)인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과거같이 저절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 없이 노력해야만 아버지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후기근대사회를 특징 짓는 중요한 문화적 변화의 징후로 파악할 수 있다. 아버지임에 대한 문화적 표현은 동등한 부모임으로의 이동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 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가사분담이 명백하게 지속되고 있어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성역할은 덜 변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역할의 변화가 반드시 성평등한 관계로의 변화로 이어지다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라는 반론이 존재한다. 후기 근대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아이들과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남성들의 욕구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때문에 실현하기 어렵다. 노동시간 이외에 통근시간으로 소비해야 하는 시간이 길고, 전문직은 인터넷의 발전으로 공식적인 업무시간 이외에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층계급의 경우 노동시간이 점점 더 길어

지고 있다. 이와같은 현실에서 실제로 남성들이 원한다고 해도 아버지로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성역할 변화는 완전한 젠더 평등적 특성을 보이는 대신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 관점이 공존해 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Cotter et al.(2011)는 최근 성역할 태도에 대한 변화가 이전보다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새로운 문화적 프레임인 “평등주의적 본질주의(egalitarian essentialism)”의 등장 때문인데 평등주의적 본질주의란 페미니즘의 평등의 관점과 전통적인 어머니임(motherhood) 역할이 혼합된 측면이다. 여성은 출산 이후에 일-가족 양면의 노동의 부담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여성은 자녀 갖기를 미루고 있다. 여성은 자녀돌봄을 위해 매우 많은 양의 시간을 할애한다. 이에 반해 남성들은 이전에 비해서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늘고 있지만 여성들처럼 자신의 일을 그만두거나 혹은 파트타임으로 바꾸어가면서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새로운 아버지상’의 출현은 지나치게 과장된 수사에 불과하다(Dienhart, 1998). 풀타임으로 어머니 노릇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아버지가 자신의 일을 중단한 채 풀타임으로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 이러한 측면에서 자녀의 출산은 여성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만 남성들의 삶은 부분적으로만 변화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남성들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친밀감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가정생활의 많은 영역이 상업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 능력이 중요한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경제적인 능력과 감정적인 친밀감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추구하는 후기 근대사회의 아버지들은 현실 속에서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자녀에게 좋은 장난감을 제공하고, 자녀와 다양한 장소를 여행하고, 자녀를 위해 좋은 교육을 시키는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과 지내는 시간 대신 점점 더 많은 일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후기 근대적 아버지는 과거처럼 홀로 가족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경제적 책임감이 줄어든 것은 아니며, 가난한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로 인식되지 않는다. 생계부양자로서의 아버지의 역할만으로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아버지 노릇에 대한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involved father, Dermott, 2008: 17). 그러나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고 가족들과 감정적인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만이 새로운 아버지(new fatherhood)의 역할이 아니라는 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부모됨(parentthood)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자녀양육 과정에서 과거에 어머니가 수행하던 역할을 아버지가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편적으로 어머니에게 요구되던 의무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버지의 부모역할의 의미는 여전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자녀양육의 책임을 분담한다는 것이 남녀가 똑같은 부모노릇을 양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어머니와 다른 아버지 노릇의 고유한 영역은 존재한다. 다시 말해, 일상적인 돌봄을 전담하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라면,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훈육과 놀이에서의 다른 역할을 함으로써 어머니로서의 부모역할과는 다르다(Tasker & Golombok, 1997). 후기 근대에 부모역할의 핵심은 부모와 자녀와의 감정적인 소통을 통한 친밀감의 유지에 있다. 친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은 아버지가 하는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쟁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시간압박을 받는 부모들이 제대로 부모노릇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정책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

제6절 일-가족 양립을 둘러싼 갈등의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와 기혼여성의 맞벌이의 증대로 인해 이분법적인 성역할 모델이 붕괴되면서 일-가족 양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둘러싼 갈등 역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일반적으로 일-가족 양립 갈등이란 “개인이 직장과 가족이라는 두 생활영역에서 비롯되는 역할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양립할 수 없을 때 경험하게 되는 역할 간 갈등의 형태”를 의미한다(송다영 외, 2010: 30; 이진숙·최원석, 2012: 10).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일-가족을 둘러싼 갈등은 기존의 인식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이러한 일-가족 갈등의 복잡성은 ‘일-가족 갈등의 양방향성(bidirectionality)’, 즉 가족으로부터 방해를 받는 직장, 직장으로부터 방해 받는 직장에서 기인한다(Wadsworth & Owens, 2007). 일과 가족의 영역 간 충돌은 여러 가지 정의가 존재하였으며, 몇몇 연구는 일-가족 전이효과(work to family conflict: 일터의 과중한 부담이 가족역할에 전이되는 경우), 가족-일 전이효과(family to work conflict: 가족생활에서의 과중한 부담이 업무역할에서 전이되는 경우)를 구분하기도 한다(Grzywacz & Marks, 2000; Keene & Quadagno, 2004). 일-가족 충돌의 경험은 개인과 사회별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특히 성별은 차이를 야기하는 중요한 핵심변수인데, 일반적으로 일하는 정규직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일-가족 충돌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rompton & Lyonette, 2006). 영역별로 보면 여성은 가정에서 많은 일-가족 충돌을, 남성은 일터에서 일-가족 충돌을 느끼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oydanoff, 1988). 한편, 남성은 개인의 여가시간 부족할 경우 일-가족 충돌을 높게 인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여성의 개인시간은 일-가족 사이의 충돌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Keene & Quadagno, 2004).

일-가정양립 정책의 발전은 주로 1960년부터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민주의 국가 사이에서 여성의 완전고용을 통한 성평등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여성지원정책으로부터 출발하였다(Fleckenstein & Lee, 2014; Lewis & Åström, 1992). 그러나 탈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남성중심형 제조업의 사양세와 서비스 산업의 팽창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만성적 실업의 증가와 빈곤 해결을 위한 맞벌이 부부의 필요성 증가,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의 변화 등 사회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은 기존의 복지국가에 중요한 정책적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Esping-Andersen, 1999; Pierson, 1994). 이러한 맥락에서 일-가족 양립정책은 탈산업사회로 이행된 유럽의 전 지역을 비롯해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포함하여 경제발전을 이룬 선진국가들의 보편적 관심사로 확장되었다(Fleckenstein & Lee, 2014).

일-가족 양립정책의 필요성을 증가시킨 노동시장의 주요한 변화요인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증가와 노동시장의 특성 변화를 들 수 있다. 전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일-가족 양립정책의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OECD 국가에서 여성의 노동활동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으나, 한국, 싱가포르, 중국, 칠레 등 여성의 노동참여율의 증가율에 비해 성별 임금차별이 높은 곳도 존재한다(O'Brien, 2012). 이에 따라 가구형태가 과거 성별분업을 중심으로 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로부터 맞벌이 모델로 전환되면서 여성들의 유급노동시간 증가에 따른 일-가족 영역의 충돌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O'Brien, 2012).

또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인해 비정형화, 비표준화, 유연화된 형태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가족 영역의 재배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산업화 사회의 노동시장은 전일제의 정규직 노동을 중심으로 한 안정된 고용을 중심으로 하며, 이는 남성 생계부양자 1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한 다른 피부양 가족 구성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높은 수준의 가족임금(family wage)을 전제로 하였다(Fraser, 1994). 그러나 노동시장은 점차 유연성이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간, 근무 장소를 비롯하여 업무배치 및 고용상의 지위에서의 유연화로 확장되고 있다. 증가된 노동유연성의 수요는 전일제 중심의 남성보다는 업무스케줄을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재배치할 수 있는 여성에게 더 친화적인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가족 양립의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Crompton, 2006). 한편,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는 반대로 일-가족 충돌을 강화하기도 하는데 만성적 고용불안정은 여러 가지 형태의 야근, 휴일근무 등 비정형화된 노동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노동강도의 증가는 노동자들의 초과노동시간이 길어지면서 전문직 노동자들과 여성들에게 높은 일-가족 충돌을 경험하게 했다(Crompton, 2006; O'Brien, 2012).

구체적으로 일-가족 양립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사례는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송다영 외(2010)는 일가족양립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장 내 지원(업무와 관련한 비공식적이고 심리적 지지로서 동료, 상사, 조직의 전반적 분위기)과 가족지원(가족 내 돌봄이나 가사일 분담 등의 가족문화)이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직장 내 지원과 가족 지원 모두 일-가족 양립갈등과 관련이 있으며,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을수록, 법정근로시간제도가 제대로 지켜지는 기업에 근무할수록, 일-가족 양립 갈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

죽친화제도 도입여부, 정규적 여부, 기업규모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촉진하고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자 2007년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법률」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김영미, 2009: 283). 그러나 저출산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된 일가족양립정책이 제시하는 무급휴직, 탄력적 근무시간, 직무공유 등이 오히려 가족 돌봄 부담을 강요함으로써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며,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시행도가 높은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일수록, 혹은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근로자일수록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가족양립지원제도 시행도가 포함된 회귀모형에 제도 이용도를 추가한 분석에서는 제도 시행의 긍정적 효과가 사라지고 제도 이용만이 출산자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도 실제로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면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유계숙, 2012: 120-121).

한편, 젠더문화의 사회적 차이도 일-가족 충돌의 인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차이로 나타났다. 서구문화와 아시아권 문화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및 성평등한 문화와 아시아의 집단주의적 및 젠더이데올로기적 문화가 어떻게 직장 및 가족관계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일-가족 충돌에 상이한 효과를 야기하는지 설명하고 있다(Chandra, 2012; Hassan, Dollard, & Winefield, 2010). Hassan, Dollard, 그리고 Winefield(2010)은 직장 내에서 일과 가족생활이 분리되고 이익-비용의 합리적 고용관계가 우선시되는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와 달리 아시아권 노동시장에서는 일과 가족의 경계가 미분화되었고 가족적 유대감이 강조

되는 고용관계로 대비된다고 보았다. 특히 가족생활에서 아시아권의 집단주의 문화는 대가족을 포괄하는 세대 간 돌봄 및 재화의 지원과 교류, 경제적, 정서적 부담이 개인에게 가중되므로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와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며,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아시아권 여성이 서구여성보다 더 높은 일-가족 충돌의 수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이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 중 어머니가 자신의 근무조건이나 노동시간을 자녀 양육에 맞추어 조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EU의 국가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남성들이 부성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전환하고 있는 경우는 여전히 드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ex & Smith, 2002). 특히 양육수당이나 육아휴직시의 임금지불과 같은 현금급여의 지급을 통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메카니즘 자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도덕성’이 요청된다는 논의도 진행되었다(Dermott, 2008: 98). 보다 나은 아버지노릇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에서의 보내야하는 시간이 많은 남성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아이의 양육 때문에 일시적으로나 영구히 노동시장을 떠난 여성들의 직장으로의 복귀가 원활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별특성을 반영한 가족친화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제7절 소결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저출산 현상이 진행되어가는 원인에 대해

서 살펴보면, 근대화가 진행되고 경제발전수준이 향상되면서 출산율의 저하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경제가 발전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증가에 따라 전통적 성역할의 수행이 약화되면서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여성임금수준, 노동시간의 유연화 가능성, 실업률 등과 같이 노동시장의 성평등 수준은 여성의 출산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가족구조가 탈표준화되고 생애단계의 경로유연성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가족관계의 출현으로 인해 결혼, 출산, 부모됨과 육아 등 생애단계의 이행으로부터 전통적 성역할과 가족규범의 해체 역시 저출산의 주요한 요인이다. 보편화된 만혼과 비혼커플의 증가는 기혼상태인 두 남녀와 자녀를 중심으로 한 가족구성원리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약화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생활 양식을 등장시키기 때문이다. 이때 유연하지 못한 가족규범은 여성의 생애단계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과 불일치를 증가시켜 출산을 기피하거나 늦추도록 만든다. 출산율 변화의 요인으로 주로 여성의 경제참여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주목하는 인구학 및 경제학 분야와 달리, 여성학적 접근에서는 출산력을 여성의 몸에 대한 개입과 재생산의 통제로 이해하고 모성의 사회적 위치 및 정치적 의미를 재조직하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결과로 본다. 출산의 주체인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생산 및 재생산 영역에서의 젠더위계와 젠더불평등으로 인해서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성별분업, 가사노동과 돌봄시간의 분담, 사회제도 간 성평등 수준의 격차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조화되고 제도화된 젠더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출산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여성들의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다. 저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거시적인 사회정책의 영향이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여성의 가족돌봄 의무를 경감하고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한 관행을 해소할 경우 여성의 출산기

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가족 양립정책은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노동시간 및 근로조건 유연성의 증대시키고 부모휴가와 같이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보육시설과 출산 및 육아수당, 부모휴가 등 다양한 돌봄지원 공공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출산율의 장려 효과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3장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의 유형별 특성

제1절 출산율의 변화를 통해 본 국가의 유형화

제2절 국가소득수준과 여성의 취업 및

성역할에 대한 인식

제3절 출산율과 여성의 취업 및 성역할에 대한 인식

제4절 소결

3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의 << 유형별 특성

이번 장에서는 신뢰할만한 국제비교연구인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2002년과 2012년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소득 및 출산율 수준별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국가 간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인 한국의 미래 모습에 대한 전망을 시도하는 것이다. 특히 이미 경제 및 사회 수준이 미래 한국이 지향하는 지점에 도달한 국가 국민들의 가지고 있는 여성의 역할과 가족 가치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미래 한국 사회의 모습을 엿보고자 한다. 본 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2년과 2012년 두 시기에 ISSP자료에 모두 포함된 25개 국가들을 경제 수준과 출산율 수준별로 각각 세 집단으로 분류한다. 둘째, 경제 수준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가족가치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살펴본다. 셋째, 출산율 수준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가족가치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2002년과 2012년 ISSP 자료를 분석하여 10여 년 동안 출산율 수준별 여성의 취업과 가족 내 역할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변화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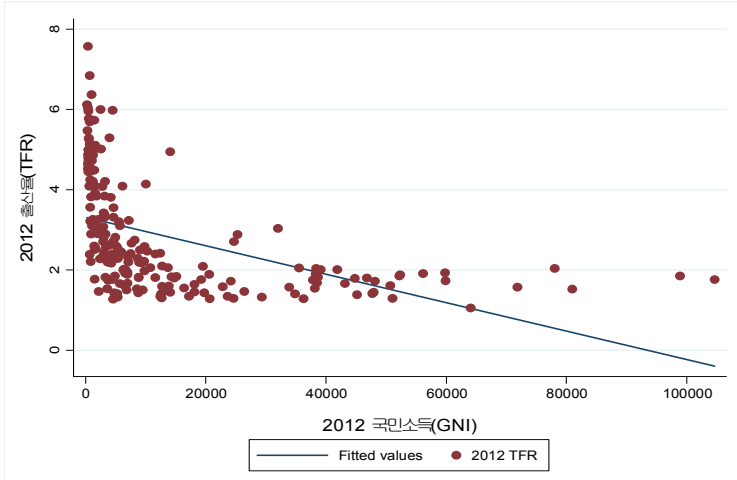
제1절 출산율의 변화를 통해 본 국가의 유형화

최근 전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은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국가들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는 출산율이 경제 발전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출산율의 변동이

경제적 요인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이 대개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대개 유럽과 아시아의 경제선진국인 점을 고려하면, 경제 발전이 출산율에 강한 영향을 미쳐왔음은 분명하다(UN, 2012).

[그림 3-1]은 2012년 전세계 258개 국가들에서 관찰된 1인당 국민소득(GNI)과 출산율(TFR)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대체적으로 국민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일수록 출산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약 40,000달러 수준에 도달했을 때 출산율의 하락이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또한 발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이 한국의 경제 수준이 꾸준히 성장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여성의 취업과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 가를 이미 경제선진국의 반열에 도달했으며 초저출산·초고령 사회의 문턱에 있는 국가의 경험을 통해 예측하려는 것에 있다는 점에서, 여러 국가들의 경제발전 수준과 연동된 출산율의 변화 패턴을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집단별로 여성의 취업과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위의 그림에서는 210개 국가들의 국민소득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본 연구가 국민소득 수준별 및 출산율별 국가군 분류를 시도하는 대상은 2012년 ISSP에 포함된 25개 국가가 될 것이다.

[그림 3-1] 출산율(TFR)과 1인당 국민소득(GNI)의 관계(2012년)



주: 모두 210개국이며, Worldbank 데이터에 있는 258개국 중 2012년도 출산율과 국민소득 값이 모두 존재하는 국가들만을 포함함

출처: Worldbank(세계은행, 2012년)

먼저 국민소득 수준에 따른 국가들의 구분을 살펴보자. <표 3-1>은 ISSP 25개 국가들의 1인당 총국민소득(Gross National Income, 이하 GNI)를 보여준다. 저(低) 소득수준 군(群)에 속하는 GNI 20,000달러 미만의 국가들로는 필리핀, 불가리아, 멕시코, 폴란드, 칠레, 슬로바키아, 체코 공화국 등이 있다. 이들 저 소득수준 국가군에서 필리핀(2,950달러)과 체코공화국(18,130달러) 간 큰 편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20,000달러를 기준으로 한 국가의 경제수준이 저발전 상태에서 벗어났는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적절해 보인다. 다음으로 중간(中間) 소득수준 군에 속하는 GNI 20,000달러 이상 37,000달러 미만 국가들로는 대만, 슬로베니아, 스페인, 한국, 이스라엘 등이 있다. 이들 중 이스라엘(32,030달러)과 스페인(29,340달러)의 1인당 GNI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경제선진국에 속하는 GNI 37,000달러 이상의 고(高) 국민소득 수준을 향유하는 국가들은 독일, 영국, 미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프랑스,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등이며, 이들 중에서도 노르웨이(98,880달러)와 스위스(80,950달러)의 1인당 국민소득이 특히 높다.

〈표 3-1〉 ISSP 25개 국가들의 1인당 총국민소득(2012년)

국가	2012년 GNI	GNI수준별 집단
필리핀	2,950	GNI 2만달러 미만
불가리아	6,850	
멕시코	9,720	
폴란드	12,660	
라트비아	14,060	
칠레	14,290	
슬로바키아	17,200	
체코공화국	18,130	
대만	20,910	GNI 2만달러 이상 3만7천달러 미만
슬로베니아	22,830	
스페인	29,340	
한국	24,640	
이스라엘	32,030	
독일	45,170	GNI 3만 7천달러 이상
영국	38,300	
미국	52,350	
아일랜드	39,110	
노르웨이	98,880	
스웨덴	56,120	
일본	47,690	
프랑스	41,860	
덴마크	59,860	
스위스	80,950	
핀란드	46,820	

다음으로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이하 TFR) 따른 국가들의 구분을 살펴보자. 〈표 3-2〉는 ISSP 25개 국가들의 출산율을 보여준다. 합계출산율이 1.5 미만으로 낮은 수준에 속하는 초저출산 국가들로는 폴란드, 스페인, 독일, 일본,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대만, 한

국 등이 있다. 저출산으로 분류되는 TFR 1.5 이상 2.1미만 국가들로는 영국, 미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칠레,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등이 있으며, 인구 대체 수준 합계출산율인 TFR 2.1 이상 국가들로는 필리핀, 멕시코, 이스라엘 등이 있다.

〈표 3-2〉 ISSP 25개 국가들의 합계출산율(2012년)

국가	2012 TFR	출산율 수준별 집단
폴란드	1.30	초저출산 (TFR 1.5명 미만) 국가
스페인	1.32	
독일	1.38	
일본	1.41	
체코공화국	1.45	
슬로바키아	1.34	
라트비아	1.44	
대만	1.27	
한국	1.30	
영국	1.90	저출산 (TFR 1.5명 이상 2.1명 미만) 국가
미국	1.88	
아일랜드	2.01	
노르웨이	1.85	
스웨덴	1.91	
프랑스	2.01	
칠레	1.83	
덴마크	1.73	
스위스	1.52	
핀란드	1.80	
불가리아	1.50	
슬로베니아	1.58	
필리핀	3.08	인구 대체 수준 합계출산율 (TFR 2.1명 이상) 국가
멕시코	2.22	
이스라엘	3.04	

출처: the World Bank, 대만의 경우 대만통계청(National Statistics Republic of China(<http://eng.stat.gov.t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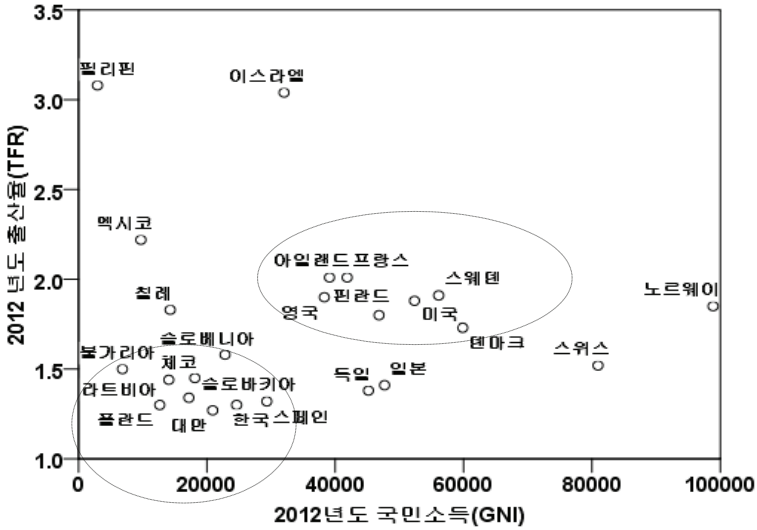
위의 25개 ISSP 국가들의 1인당 국민총소득과 합계출산율 표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소득 수준이 높은 경제선진국과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

만 상당한 정도 경제발전을 달성한 국가들이 대개 저출산 또는 초저출산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다시 말해, 몇몇 예외는 존재하지만 [그림 3-1]에서 확인된 것처럼 두 표의 결과를 통해 경제발전 수준과 저출산은 서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는 ISSP 25개 국가들의 2012년 1인당 총국민소득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래프의 두 점선 원 안에 들어온 국가들이 대개 저출산 또는 초저출산 문제에 노출된 경우이며, 왼쪽 원의 한국, 대만,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등은 소득수준과 출산율이 모두 오른쪽 원의 영국,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다음 절에서는 여성의 취업과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인식, 생계부양 및 자녀돌봄에 있어서 남녀 역할에 대한 태도, 자녀의 연령별 어머니의 취업, 이혼에 대한 인식, 결혼생활 행복도,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과 관련된 국가 간 비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림에서 드러난 국민소득 수준과 출산율 수준별 집단 구분은 분석결과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2] 2012년 ISSP 국가들의 출산율(TFR)과 2012년 1인당 국민소득(GNI)



제2절 국가소득수준과 여성의 취업 및 성역할에 대한 인식

본 절에서는 국가의 소득수준별로 고 소득수준(GNI, 3만 7천달러 이상), 중간 소득수준(GNI, 2만 달러 이상 ~ 3만7천 달러 미만), 저 소득수준(GNI, 2만 달러 미만)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어머니의 취업과 성 역할 태도에 관해 2012년 ISSP 25국 자료로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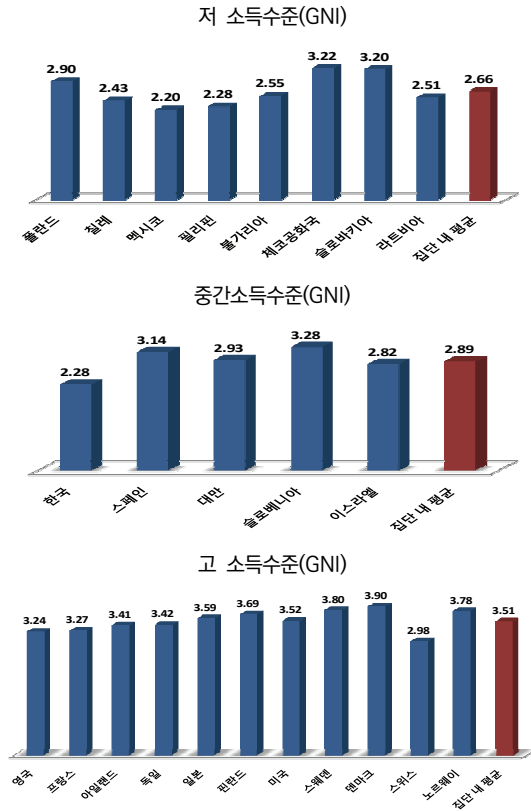
1. 소득수준별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인식 비교

가. 소득수준(GNI)과 ‘어머니의 취업과 취학 전 자녀의 어려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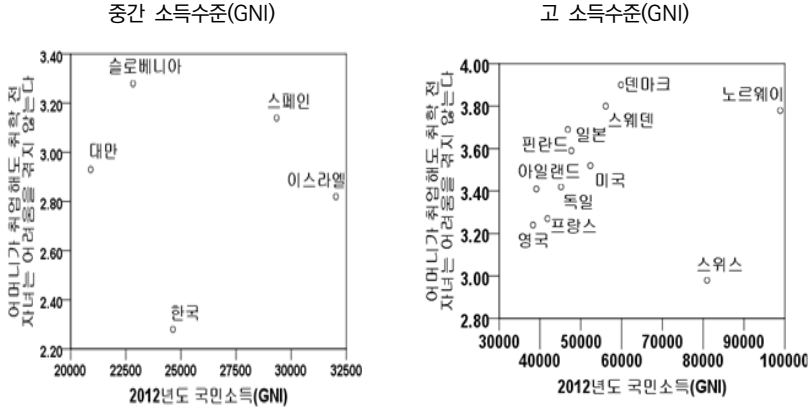
하단부터 소득수준(GNI)과 ‘어머니의 취업과 취학 전 자녀의 어려움’에 관한 인식을 비교하였으며 [그림 3-3]에서도 [그림 3-2]에서 관찰된 소득수준별 국가군 간 차이가 발견된다. 즉 고 소득수준(GNI) 국가들에서 저 소득수준(GNI)과 중간 소득수준(GNI) 국가들에서보다 자녀 돌봄과 관련해 어머니의 취업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그리고 저 소득수준(GNI)과 중간 소득수준(GNI) 간 차이는 크지 않다. 저 소득수준(GNI)과 중간 소득수준(GNI) 국가들에서 어머니의 취업과 취학 전 자녀의 어려움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인식의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에 각각 2.66점과 2.89점인데 반해, 고 소득수준(GNI) 국가들의 평균은 3.5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덴마크(3.90점), 스웨덴(3.89점), 노르웨이(3.78점) 국민들은 다른 국가 국민들보다 어머니의 취업이 취학 전 자녀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믿는 경향이 더 강하다. 대체적으로 각 국가군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취업이 취학 전 자녀의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중간 소득수준(GNI)의 한국(2.18점)과 고 소득수준(GNI)의 스위스(2.98점)는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나 있다([그림 3-4]참조). 특히 한국의 점수는 2.18점으로 전체 25개 국가들 중 최하위에 속한다. 한국보다 더 낮은 나라는 멕시코(2.20점) 뿐이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은 어머니의 취업은 결과적으로 취학 전 자녀의 교육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의 취학 전 자녀교육이 공적 및 정책적 개입에 의해 지원되기 보다는 사적 영역에서 순전히 개인 또는 가구의 노력과 능

력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3-3]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2: 어머니가 취업해도 취학 전 자녀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림 3-4] 어머니의 취업과 취학 전 자녀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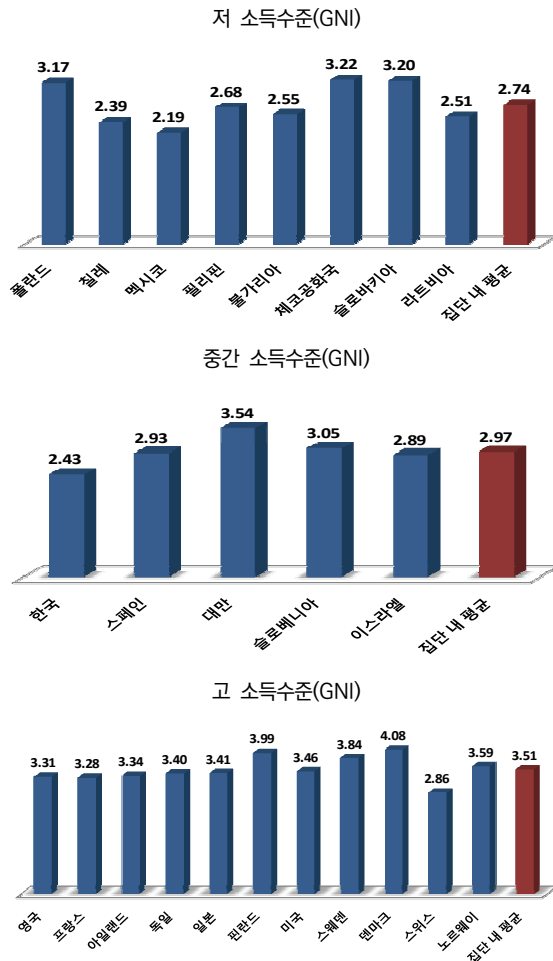


나. GNI와 ‘여성의 전일제 취업과 가정생활의 어려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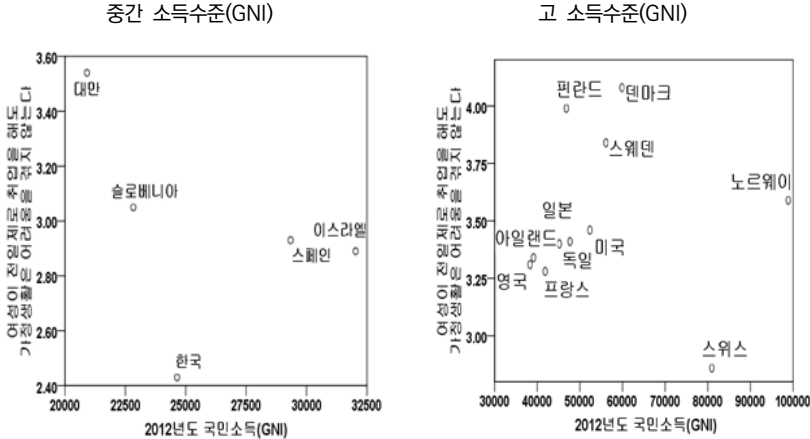
[그림 3-5]는 어머니의 취업과 가정생활의 어려움 간 관계에 대한 ISSP 25개 국가 국민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1인당 국민총생산이 높은 국가들에서 여성의 전일제 취업으로 인한 가정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덜하다. 중간 소득수준(GNI)과 저 소득수준(GNI) 국가들 간 여성의 전일제 취업 때문에 초래되는 가정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평가는 큰 차이가 없다. 가정생활의 어려움과 관련된 어머니의 전일제 취업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인 국가들은 저 소득수준(GNI) 국가에서는 멕시코(2.19점), 칠레(2.39점), 필리핀(2.68점), 중간 소득수준(GNI) 국가에서는 한국(2.43점)이다. 고 소득수준(GNI)국가에서는 스위스(2.86점) 등이다. 특히 스위스는 다른 고 소득수준(GNI)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소득수준(GNI)과 비례하는 어머니의 전일제 취업에 대한 호의적 평가에 반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편임에도 어머니

의 전일제 취업이 가정생활에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가장 많다. 중간 소득 국가군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대만(3.54점)이 어머니의 전일제 취업에 대해 가장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그림 3-5] 여성의 전일제 취업과 가정생활의 어려움 3: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을 해도 가정생활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림 3-6] 중간 GNI와 고 GNI 국가의 여성의 전일제 취업과 가정생활의 어려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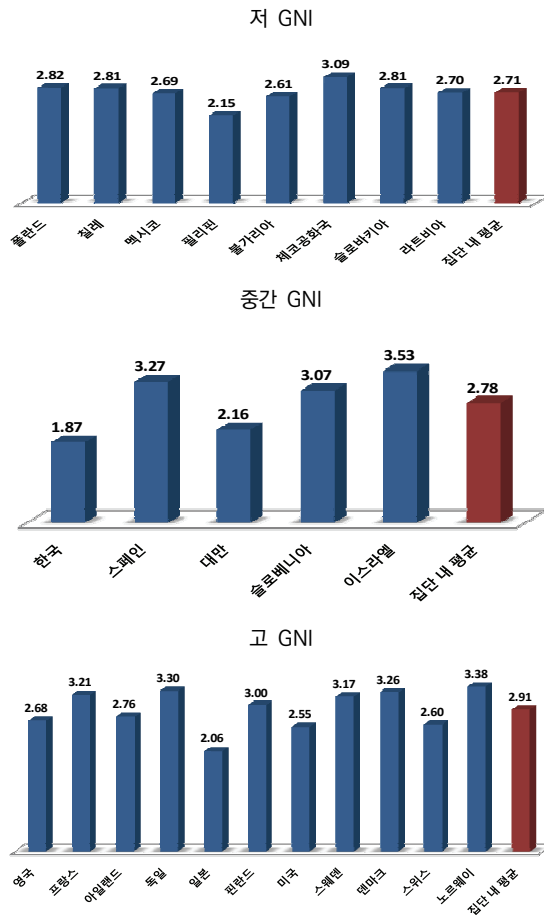


다. GNI와 ‘전업주부 대비 취업에 대한 높은 가치부여’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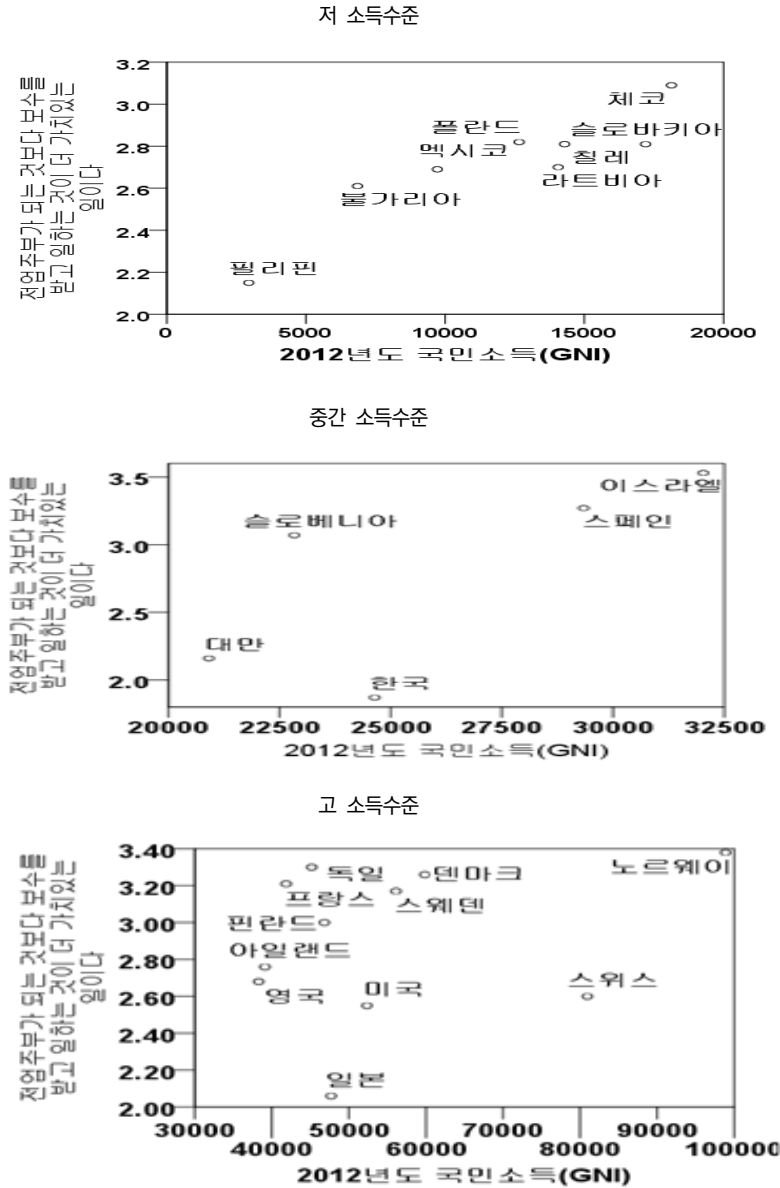
여성의 취업과 가족관계에 대한 문항인 ‘전업주부가 되는 것 보다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에 대해서는 위의 네 가지 문항과는 상이한 패턴이 발견된다([그림 3-7]). 우선, 저(2.71점), 중간(2.78점), 고(2.91점) 소득수준 간 평균점수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다. 둘째, 가족가치에 상대적으로 더 무게를 두는 동양권 국가들인 한국(1.87점), 일본(2.06점), 대만(2.16점)에서 취업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셋째, 고 소득수준 군에 속하는 국가들 간 변이가 존재한다. 즉 위의 네 문항과는 달리 고 소득수준 내 몇몇 서구 국가에서 취업의 전업주부에 대한 상대적 가치 우위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관찰된다. 미국(2.55점), 스위스(2.60점), 영국(2.68점), 아일랜드(2.76점)가 그 예들이다. 다만, 저 소득수준과 중간 소득수준 내 소득이 높아질수록 취업의 비교 우위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은 여전히 발견되며, 위의 네 문항에서보다 더 일관적이고 뚜렷하다 (그림 3-8).

[그림 3-7] 전업주부 대비 취업에 대한 높은 가치부여 5: 전업주부가 되는 것 보다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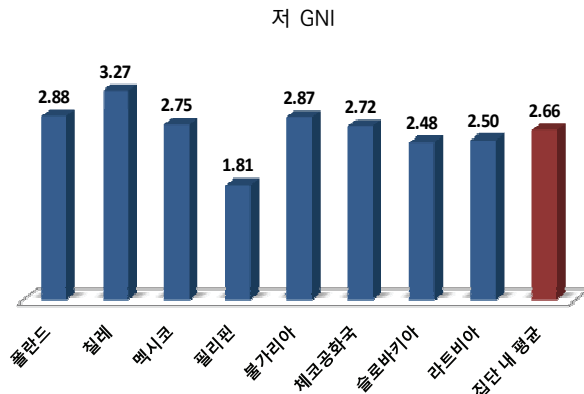
[그림 3-8] GNI 수준별 국가의 전업주부 대비 취업에 대한 높은 가치부여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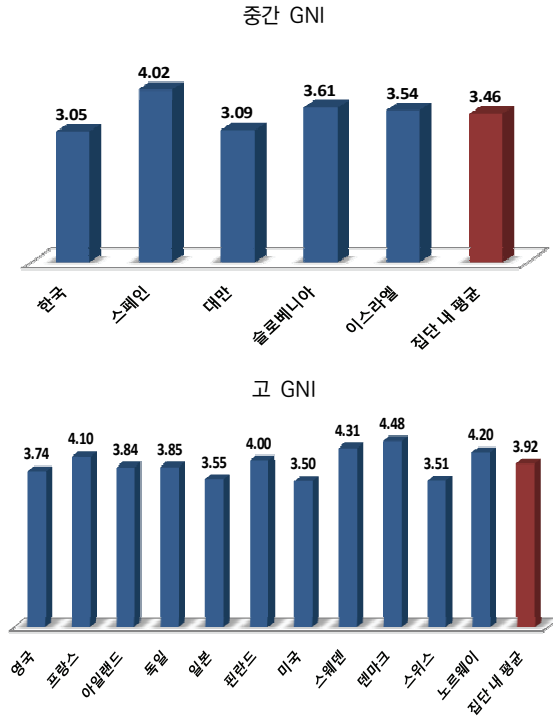
2. 소득수준별 성역할 태도에 대한 인식 비교

성역할 태도와 관련된 두 번째 내용으로 25개 국가별로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라는 의견에 대해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림 3-9]에서 보이는 것처럼, ‘동등한 가계 기여’와는 달리, 성별 분업에 있어서의 평등한 인식은 고 GNI(3.92점), 중간 GNI(3.46점), 저 GNI(2.66점) 국가군 등의 순으로 강하며, 집단 간 편차 또한 상당히 크다. 집단 내 변이는 그리 심하지는 않지만, 저 GNI 국가군 내에서 필리핀(1.81점)의 성별 분업에 있어서의 평등 의식이 가장 낮고 칠레(3.27점)가 가장 높다. 중간 GNI 국가군에서는 스페인(4.02점)이 성별 분업에 대하여 가장 평등한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고 GNI 국가군에서는 스위스(3.51점), 미국(3.50점), 일본(3.55점)에서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은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평등적 인식이 가장 약함이 확인된다.

[그림 3-9] GNI 수준별 ‘성별 분업’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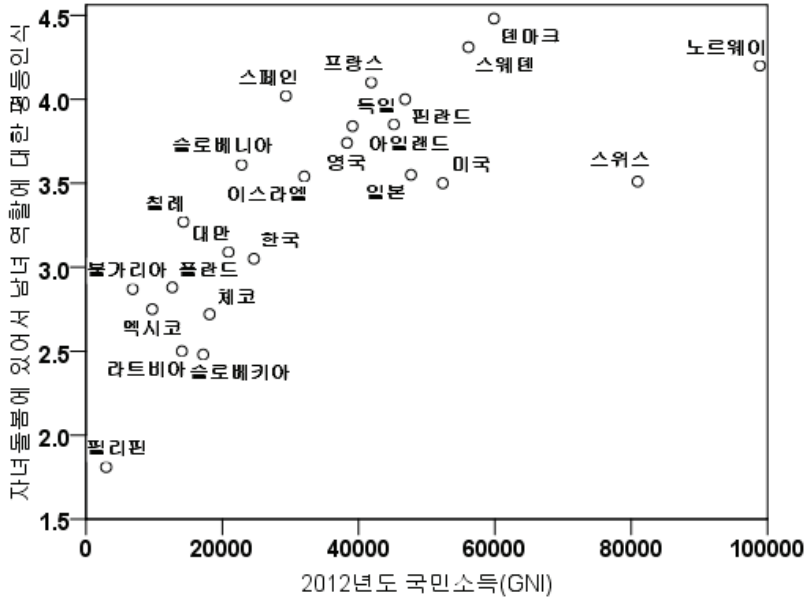


[그림 3-9] 계속



[그림 3-10]은 성별 분업에 대한 평등 인식과 국가별 GNI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스위스처럼 GNI는 월등히 높으나 성별 분업과 관련된 평등적 인식 수준이 높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GNI가 높은 국가일수록 가정 내에서 남자는 돈을 버는 역할을 맡고 여자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성별 분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성별 분업에 대한 평등적 인식이 강하다.

[그림 3-10] 국가별 소득수준과 '성별 분업' 인식



제3절 출산율과 여성의 취업 및 성역할에 대한 인식

본 절에서는 출산율 수준에 따른 여성의 취업 및 역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의 국제 비교를 수행하고자 한다. 국가군은 합계출산율이 1.5 미만으로 낮은 수준에 속하는 초저출산 국가들과 1.5 이상 2.1미만의 저출산 국가들로 범주를 나누어 성역할, 가족제도에 대한 인식, 가족생활의 만족도, 여성의 노동활동, 가족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가치관을 살펴볼 것이다³⁾. 특히 이러한 국가별 가치관의 차이가 시계열적으로 어떻

3) ISSP에서 합계출산율 2.1 이상 국가들로는 필리핀, 멕시코, 이스라엘이 존재하는데 실제

계 변화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2년과 2012년의 두 결과를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1. 합계출산율별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인식 비교

가. TFR과 ‘어머니의 취업과 취학 전 자녀의 어려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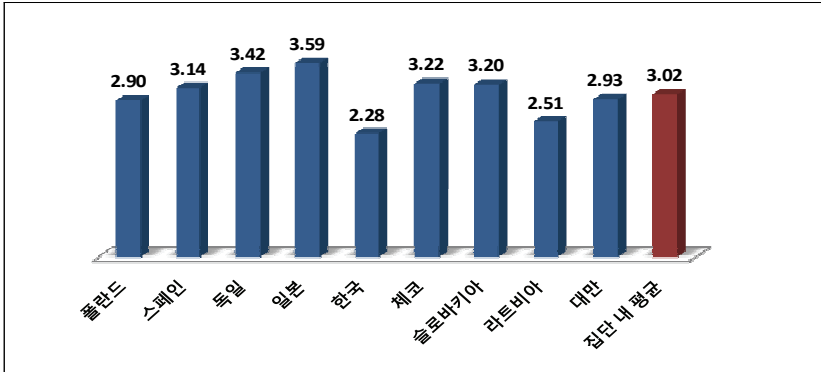
다음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인식’ 중 ‘어머니가 취업해도 취학 전 자녀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 ISSP 25개 국가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25개 국가들을 각 국가별 TFR을 기준으로 3개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먼저, [그림 3-11]와 같이 TFR이 1.5 미만이 10개국들의 경우 ‘어머니의 취업과 취학 전 자녀의 어려움’ 인식에 있어 평균 3.02점이었으며, 이러한 태도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어머니의 취업 시 취학 전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인식이 가장 강한 국가는 한국(2.28점)이며, 그 다음은 라트비아(2.51점), 폴란드(2.90점), 대만(2.93점), 스페인(3.14점) 순이다. 한국, 폴란드, 스페인은 앞서 ‘취업모와 자녀와의 온정적/안정적 관계 유지’ 인식에서도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던 국가들이다. 반면, 일본은 3.59점으로 출산율이 낮은 10개국들 중 어머니의 취업 시 취학 전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인식이 가장 낮으며, 그 다음으로 독일(3.42점), 체코(3.22점), 슬로바키아(3.20점) 순이다. 앞서 ‘취업모와 자녀와의 온정적/안정적 관계 유지’ 인식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에 격차가 있었던 것처럼 ‘어머니의 취업과 취학 전 자녀의 어려움’ 인식에 있어서도 양국 간에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분석에서는 사례 수가 적으므로 제외하고자 한다.

[그림 3-11] TFR 1.5 미만 국가들의 ‘어머니의 취업과 취학 전 자녀의 어려움’ 인식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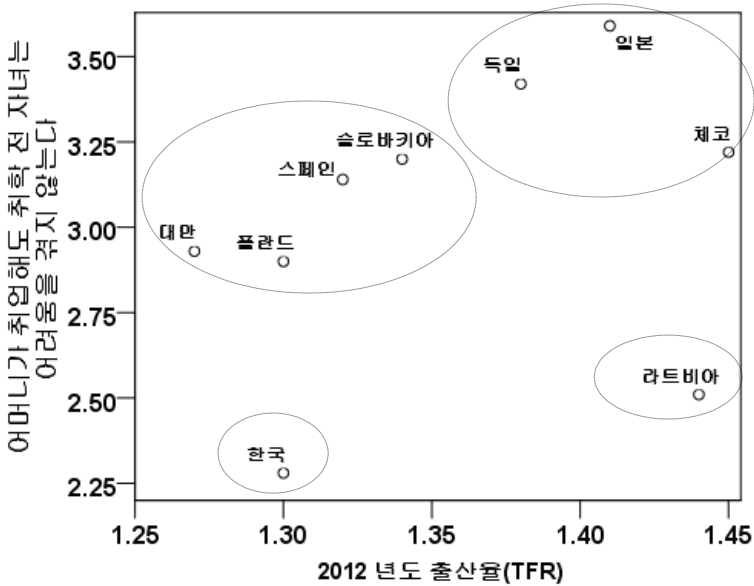


주: 질문 내용은 “어머니가 취업해도 취학 전 자녀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이며, 위에 제시된 값은 5점 서열형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냄(역코딩).

이러한 ‘어머니의 취업과 취학 전 자녀의 어려움’과 TFR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산포도는 아래의 [그림 3-12]과 같다. TFR이 1.5미만인 국가들을 ‘어머니의 취업과 취학 전 자녀의 어려움’과 교차시켜 보면 크게 4개의 국가군으로 나뉜다. 먼저, 일본, 독일, 체코공화국은 출산율이 낮은 10개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며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취학 전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인식이 약한 국가들이다. 반면, 슬로바키아, 스페인, 대만, 폴란드 등 4개국은 어머니의 취업으로 취학 전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인식이 약한 국가들이지만, 10개국 내에서 출산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TFR이 낮은 10개국 내에서도 대만 다음으로 매우 낮은 초저출산 국가이면서도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취학 전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라트비아는 10개국 중 체코공화국 다음으로 출산율이 높지만,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취학 전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인식이 강한 국가이다.

[그림 3-12] TFR 1.5 미만 국가들의 TFR과 ‘어머니의 취업과 취학 전 자녀의 어려움’ 인식과의 관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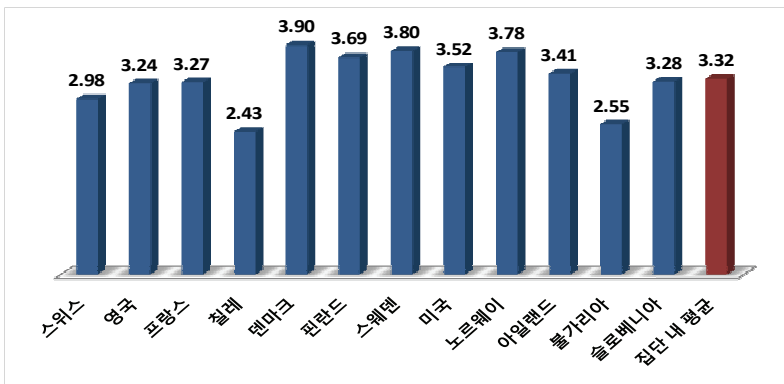
주: 질문 내용은 “어머니가 취업해도 취학 전 자녀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이며, 위에 제시된 값은 5점 서열형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냄(역코딩).

[그림 3-13]은 TFR이 1.5~2.1 미만인 12개국 내에서 ‘어머니의 취업과 취학 전 자녀의 어려움’ 인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들 국가들의 평균값은 3.32점으로 앞서 살펴본 TFR이 1.5미만인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다. 즉, TFR이 1.5~2.1미만 국가들이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취학 전 자녀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TFR이 1.5미만인 국가들에 비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 내에서도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12개국 내에서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취학 전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는 인식이 가장 높은 국가는 칠레(2.43점)이며, 그 다음은 불가리아(2.55점), 스위스(2.98점) 순이다. 반면, 이러한 태도가 가장 약한 국가는 덴마크(3.90점)이고, 스웨덴(3.80점), 노르웨이(3.78점), 핀란드(3.69점) 등 북유럽국가들이 그 뒤를 잇는다.

[그림 3-13] TFR 1.5~2.1 미만 국가들의 ‘어머니의 취업과 취학 전 자녀의 어려움’ 인식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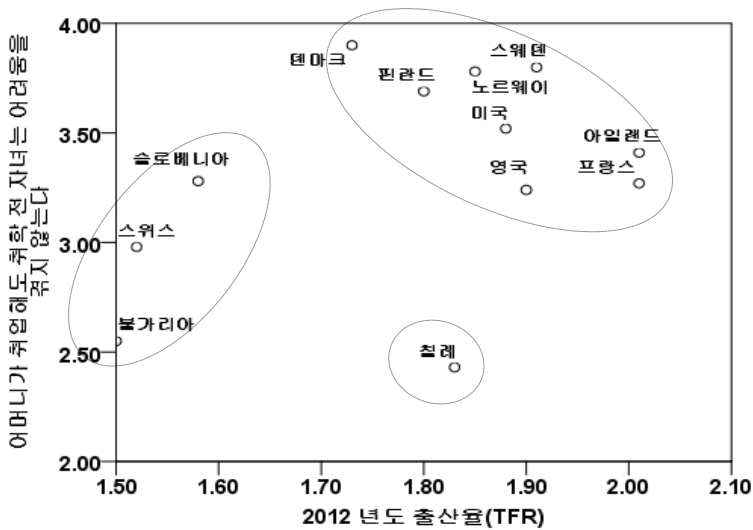
주: 질문 내용은 “어머니가 취업해도 취학 전 자녀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이며, 위에 제시된 값은 5점 서열형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냄(역코딩).

이들 12개국의 TFR과 ‘어머니의 취업과 취학 전 자녀의 어려움’ 인식과의 연관성을 알아본 결과가 [그림 3-1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등은 동 국가군 내에서 출산율이 중상인 국가들이면서,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취학 전 자녀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약한 국가들이다. 반면, 슬로베니아, 스위스, 불가리아 등은 출산율도 낮으면서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취학 전 자녀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인식도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들이다. 반면, 칠레는 상대적 인 출산율은 높지만, 이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이 강한 국가이다.

[그림 3-14] TFR 1.5~2.1 미만 국가들의 TFR과 ‘어머니의 취업과 취학 전 자녀의 어려움’ 인식과의 관계

(단위: 점)



주: 질문 내용은 “어머니가 취업해도 취학 전 자녀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이며, 위에 제시된 값은 5점 서열형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냄(역코딩).

나. TFR과 ‘여성의 전일제 취업과 가정생활의 어려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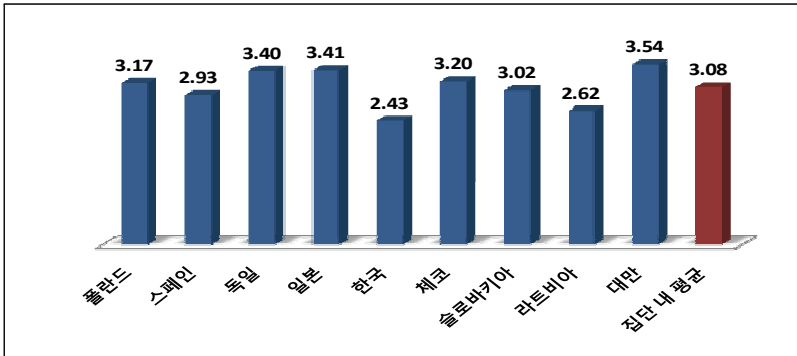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을 하면 가정생활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질문에 대해 25개 국가들의 TFR 수준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TFR이 1.5미만인 국가들의 ‘여성의 전일제 취업과 가정생활이 어려움’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 3-15]와 같다. 이들 10개국 중에서 여성의 전일제 취업은 가정생활을 어렵게 할 것

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2.43점)이다. 그 다음은 라트비아(2.62점), 스페인(2.93점), 슬로바키아(3.02점) 순이다.

반면, TFR이 1.5미만인 10개국 중에서 대만은 여성의 전일제 취업은 가정생활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인식이 3.54점으로 가장 약하며, 일본(3.41점), 독일(3.40점)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이 여성의 전일제 취업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저출산 국가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그림 3-15] TFR 1.5 미만 국가들의 '여성의 전일제 취업과 가정생활의 어려움' 인식

(단위: 점)



주: 질문 내용은 “전반적으로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을 하면 가정생활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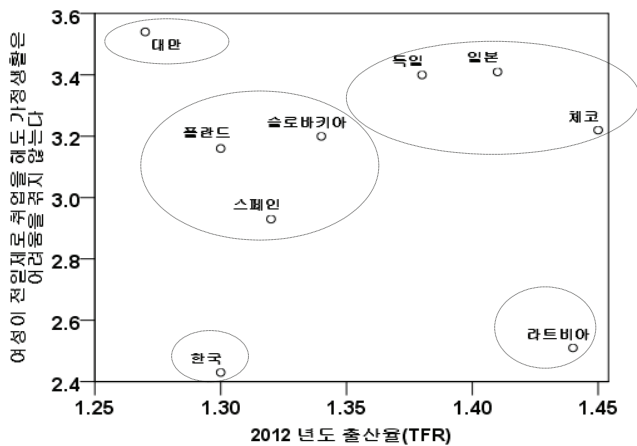
이며, 위에 제시된 값은 5점 서열형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여성)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냄(역코딩).

각 국가별 TFR과 비교한 [그림 3-16]을 보면, 한국을 포함하여 크게 5개의 국가군으로 구분된다. 한국은 초저출산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낮으면서 여성의 전일제 취업으로 인해 가정생활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한국과 비교할 때, 폴란드, 스페인, 슬로바키아는 비슷한 출산율이지만 취업모에 대해 한국보다는 긍정

적인 태도를 갖는 국가들이다. 특히, 대만은 한국보다 출산율은 낮지만 10개국 중 여성이 전일제 취업이 가정생활의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적은 국가였다. 반면, 독일, 일본, 체코공화국 등은 한국보다 출산율도 높으면서 한국보다 여성의 전일제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국가들로 분류된다. 라트비아는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지만 한국 처럼 여성의 전일제 취업으로 가정생활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이 높은 국가이다.

[그림 3-16] TFR 1.5 미만 국가들의 TFR과 '여성의 전일제 취업과 가정생활의 어려움' 인식과의 관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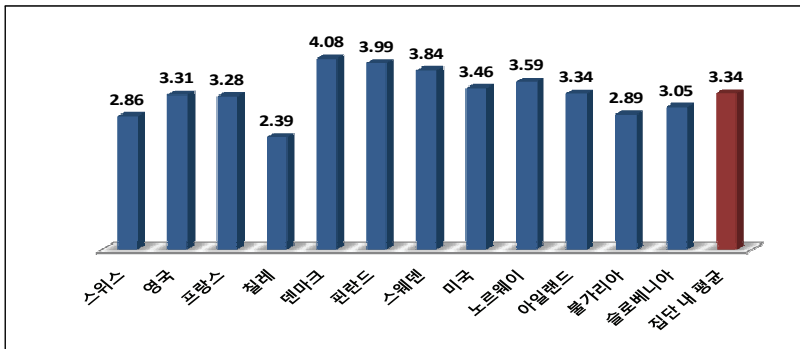


주: 질문 내용은 “전반적으로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을 하면 가정생활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며, 위에 제시된 값은 5점 서열형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여성)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냄(역코딩).

TFR이 1.5~2.1인 12개국들은 TFR이 1.5 미만인 국가들에 비해 여성의 전일제 취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이

국가군 내에서도 국가별로 변이는 존재한다. 먼저, 여성의 전일제 취업이 가정생활의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은 국가는 칠레(2.39점)였는데, 한국(2.43점)보다 더 부정적인 태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스위스(2.86점), 불가리아(2.89점), 슬로베니아(3.05점) 등이다. 반면, 12개국 중 여성의 전일제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는 덴마크(4.08점)이며, 그 다음은 핀란드(3.99점), 스웨덴(3.84점), 노르웨이(3.59점) 등의 순으로, 북유럽 국가들에서 여성의 전일제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강함을 볼 수 있다.

[그림 3-17] TFR 1.5~2.1 미만 국가들의 '여성의 전일제 취업과 가정생활의 어려움' 인식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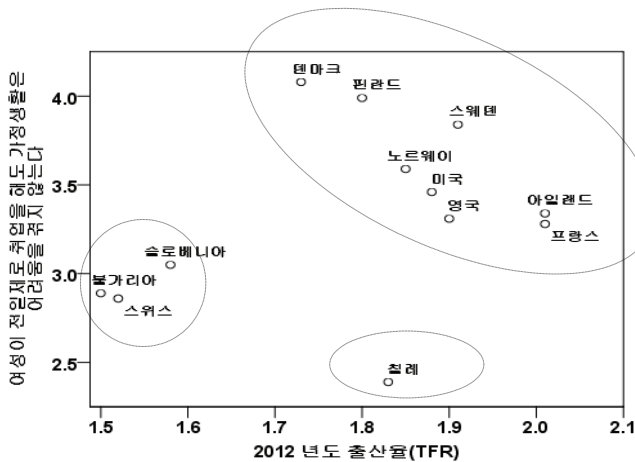
주: 질문 내용은 “전반적으로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을 하면 가정생활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며, 위에 제시된 값은 5점 서열형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여성)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냄(역코딩).

이러한 여성의 전일제 취업에 대한 국가별 인식들을 각 국가별 TFR과 연계시켜 보면 [그림 3-18]과 같이 크게 3개의 국가군으로 구분된다. 먼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등은 12개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과 함께 여성의 전일제 취업이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강한 국가들이다. 이들과는 달리,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스위스 등은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여성의 전일제 취업에 대해 부정적인 국가들이며, 칠레는 출산율은 높지만 여성의 전일제 취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가장 강한 국가이다.

[그림 3-18] TFR 1.5~2.1 미만 국가들의 TFR과 ‘여성의 전일제 취업과 가정생활의 어려움’ 인식과의 관계

(단위: 점)



주: 질문 내용은 “전반적으로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을 하면 가정생활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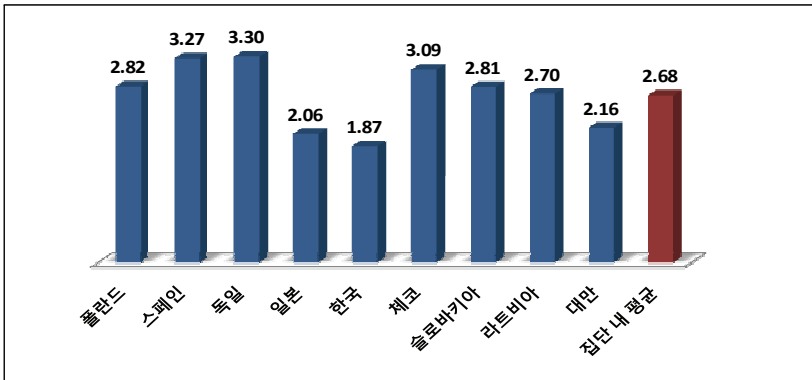
이며, 위에 제시된 값은 5점 서열형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여성)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냄(역코딩).

다. TFR과 ‘전업주부 대비 취업에 대한 높은 가치부여’ 인식

‘전업주부가 되는 것보다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

다'라는 의견에 대한 태도를 25개 국가들의 TFR 수준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을 포함하여 TFR이 1.5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들은 '취업에 대한 높은 가치부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본 결과가 [그림 3-19]에 제시되어 있다.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10개국 내에서 전업주부보다 취업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의견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한 나라는 한국(1.87점)이며, 그 다음은 일본(2.06점), 대만(2.16점) 등 동아시아국가들이 주를 이룬다. 이와는 달리 저출산 10개국 내에서 전업주부가 되는 것보다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의견에 찬성하는 경향이 가장 강한 나라는 독일(3.30점)이다. 그러나 초저출산 10개국들의 평균은 2.68점으로 전체적으로 찬성보다는 반대의 의견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9] TFR 1.5 미만 국가들의 '전업주부 대비 취업에 대한 높은 가치부여' 인식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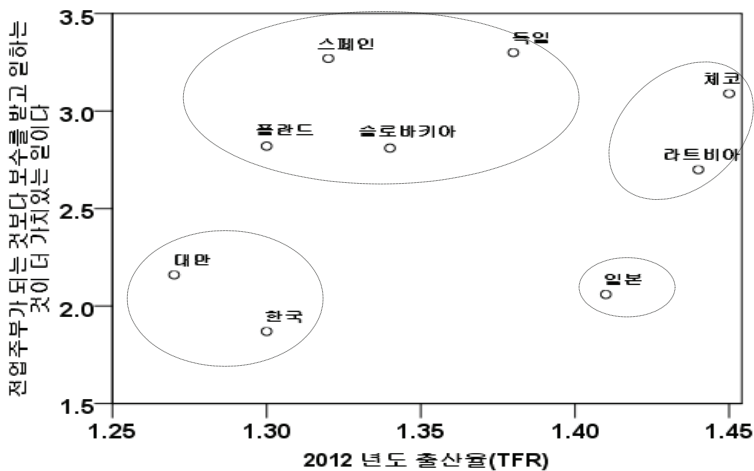
주: 질문 내용은 “전업주부가 되는 것 보다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이 더 가치있는 일이다”이며, 위에 제시된 값은 5점 서열형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여성)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냄.

비록 TFR이 1.5 미만인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취업에 대한 높은 가치

부여를 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각 국가별 TFR과 비교해보면 아래의 [그림 3-20]과 같이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한국과 대만은 TFR이 10개국 내에서 가장 낮으면서 여성 취업이 전업주부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의견에 반대하는 경향이 가장 강한 국가들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TFR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경향이 강한 국가이다. 그리고 스페인,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10개국 내에서는 출산율은 중간수준이지만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체코슬로바키아와 라트비아 역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상대적인 출산율은 높은 국가들이다.

[그림 3-20] TFR 1.5 미만 국가들의 TFR과 ‘취업에 대한 높은 가치 부여’ 인식과의 관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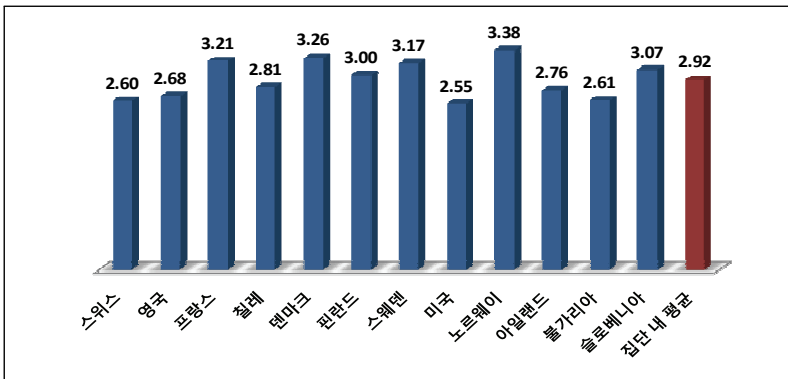


주: 질문 내용은 “전업주부가 되는 것 보다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이 더 가치있는 일이다”이며, 위에 제시된 값은 5점 서열형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여성)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냄.

반면, TFR이 1.5~2.1 미만인 국가들 내에서 취업이 전업주부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림 3-21]과 같다.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이 약간 강하지만, 크게는 반대하는 경향이 강한 국가와 찬성하는 국가들로 나뉜다. 여성의 취업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의견에 가장 반대가 심한 미국(2.55점)을 중심으로 스위스(2.60점), 불가리아(2.61점), 영국(2.68점), 아일랜드(2.76점), 칠레(2.81점) 등의 순으로 반대 경향이 강하다. 반면, 노르웨이(3.38점), 덴마크(3.26점), 프랑스(3.21점), 스웨덴(3.17점) 등은 찬성의 비율이 다소 높은 국가들이다.

[그림 3-21] TFR 1.5~2.1 미만 국가들의 '전업주부 대비 취업에 대한 높은 가치부여' 인식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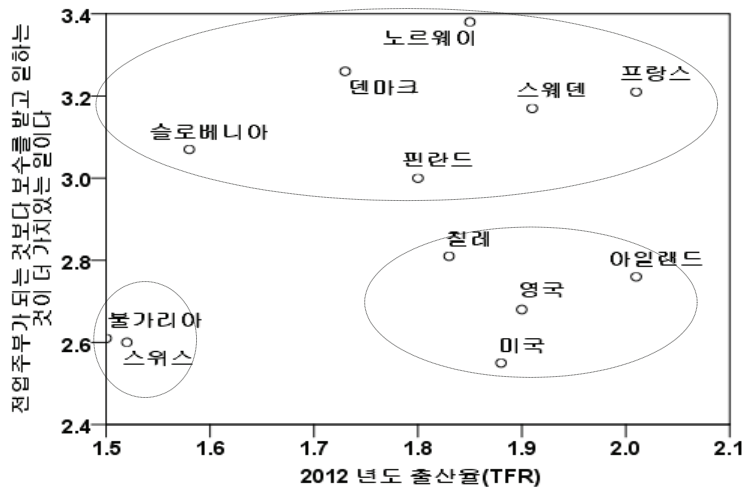
주: 질문 내용은 “전업주부가 되는 것 보다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이 더 가치있는 일이다”이며, 위에 제시된 값은 5점 서열형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여성)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냄.

다음으로 이러한 태도들을 각 국가별 TFR과 비교하면 [그림 3-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크게 3개의 국가군으로 분류된다. 우선, 노르웨이, 덴

마크,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슬로바키아는 12개국 내에서 출산율이 중상수준이면서 전업주부가 되는 것보다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의견에 긍정하는 경향이 강한 국가들이다. 이와는 달리, 칠레, 영국, 미국, 아일랜드 등은 12개국 중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여성의 취업이 전업주부보다 더 가치있는 일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향이 강한 국가들이다. 마지막으로 불가리아와 스위스는 TFR이 1.5~2.1 미만인 국가들 내에서는 출산율이 낮은 편이면서 전업주부에 비해 여성의 취업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의견과 관련하여 가장 반대의 의견이 강한 국가들로 분류된다.

[그림 3-22] TFR 1.5~2.1 미만 국가들의 TFR과 '전업주부 대비 취업에 대한 높은 가치 부여' 인식과의 관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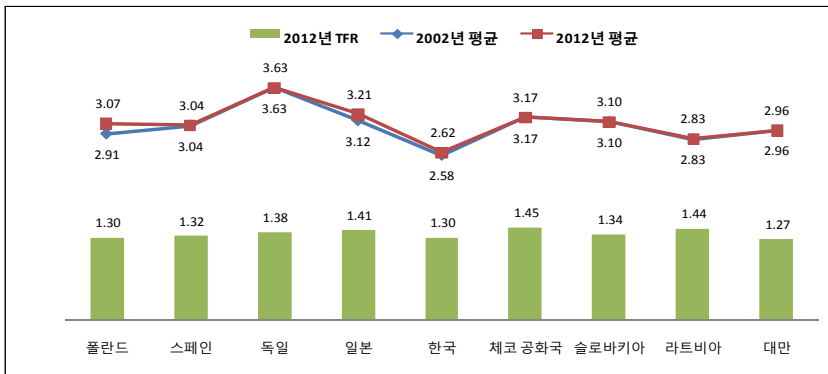
주: 질문 내용은 “전업주부가 되는 것 보다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이 더 가치있는 일이다”이며, 위에 제시된 값은 5점 서열형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여성)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냄.

라. 출산수준별 어머니의 역할 인식 및 변화

앞서 어머니의 역할과 관련된 총 5개의 질문들에 대해 국가별로 응답한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TFR과 연계시켜 비교해보았다. 각 국가별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이것이 출산수준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그림 3-23]은 TFR이 1.5 미만인 국가들에 대한 2002년과 2012년을 비교한 결과이다. 폴란드가 2002년 2.91점에서 3.07점으로 약 0.16점 증가하였고, 일본이 경우 약 0.09점, 한국은 0.04점 정도 증가하는 등 미미한 증가세만 있을 뿐 급격한 인식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그림 3-24]와 같이 출산율이 1.5~2.1미만인 국가들의 경우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불가리아와 슬로베니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3] 2012년 TFR 1.5 미만 국가군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2002년과 2012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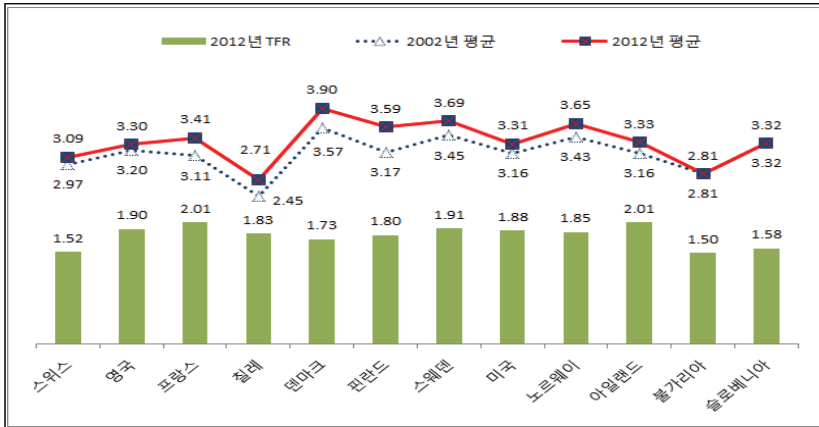
(단위: 점)



주: 한국의 경우 2003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자료를 이용함

[그림 3-24] 2012년 TFR 1.5~2.1 미만국가들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2002년과 2012년 비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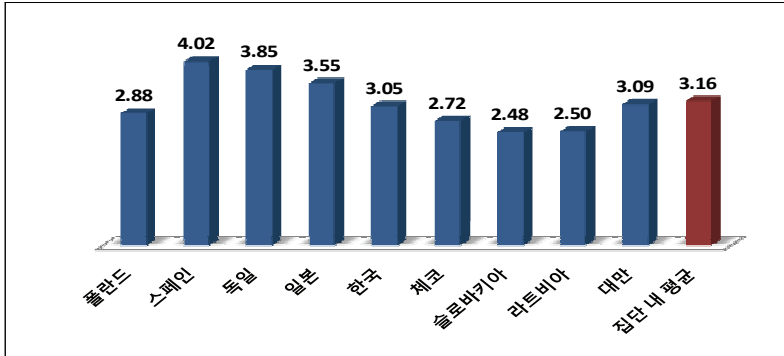


2. 합계출산율별 성역할 태도에 대한 비교

[그림 3-25]는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성별 분업)라는 의견에 대해 국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를 보여준다. 우선, TFR이 1.5 미만인 국가들의 경우, 성별 분업에 대해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스페인(4.02점)의 경우 성별 분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가장 강하며, 그 다음으로는 독일(3.85점), 일본(3.55점), 대만(3.09점), 한국(3.05점) 등의 순으로 반대 입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이다. 반면, 저출산 10개국 내에서 성별 분업 인식이 가장 강한 국가는 슬로바키아(2.48점)이며, 라트비아(2.50점), 폴란드(2.88점) 등 동유럽 국가들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림 3-25] TFR 1.5 미만 국가들의 '성별 분업' 인식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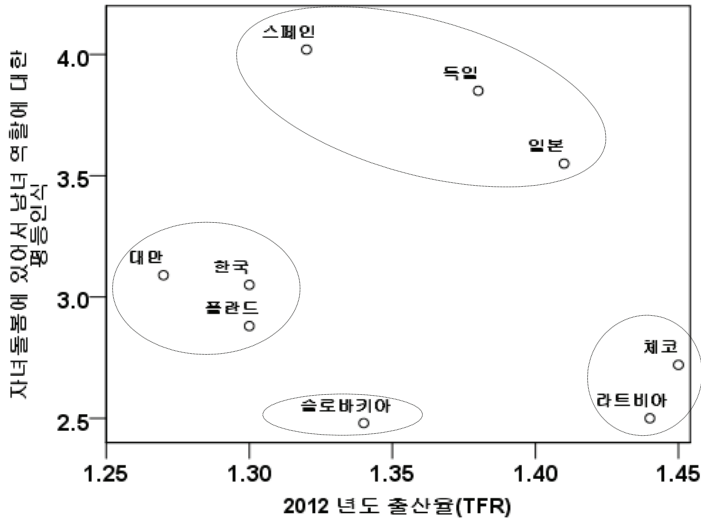


주: 질문 내용은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이며, 위에 제시된 값은 5점 서열형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의 평등의식이 강한 것임(역코딩).

[그림 3-26]은 성별 분업에 대한 인식을 TFR과 비교해 얻은 분류 결과이다. 대만, 한국, 폴란드가 하나의 국가군으로, 스페인, 독일, 일본이 또 다른 하나이고, 체코공화국과 라트비아가 세 번째 군집, 그리고 슬로바키아가 마지막 4번째 군집을 이룬다.

[그림 3-26] TFR 1.5 미만 국가들의 TFR과 '성별 분업' 인식과의 관계

(단위: 점)



주: 질문 내용은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이며, 위에 제시된 값은 5점 서열형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의 평등의식이 강한 것임(역코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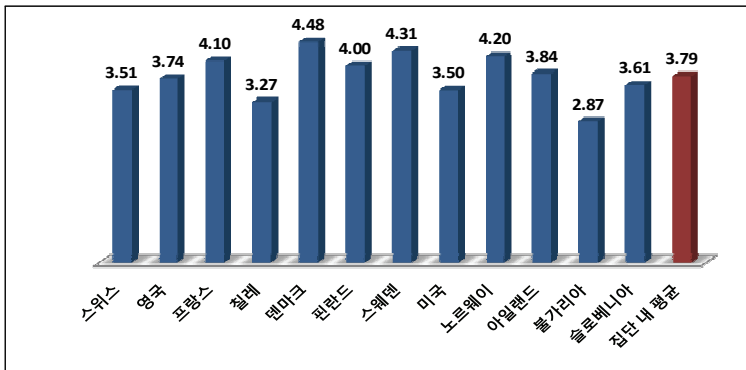
TFR이 1.5~2.1 미만인 국가들에서 성별 분업 의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앞서 TFR 1.5 미만의 저출산국가들과는 달리 불가리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1개국들이 성별 분업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덴마크가 가장 높고(4.48 점), 그 다음을 스웨덴(4.31점), 노르웨이(4.20점), 프랑스(4.10점), 핀란드(4.00점) 등 북서유럽 국가들이 뒤를 이었다([그림 3-27] 참조).

이러한 국가별 인식의 차이를 TFR과 비교해보면 아래의 [그림 3-28]과 같은데, 크게 3개의 국가군으로 분류된다. 즉, 12개국 중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미국, 칠레 등은 출산율도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성별 분업에 대한 반대 인식이 강한 국가군들이다. 반면, 스위스와 슬로베니아는 성평등 의식은 다소 높지만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이다. 불가리아의 경우에는 12개국 중에서 출산율도 낮고 성별 분업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이 높은 국가이다.

[그림 3-27] TFR 1.5~2.1 미만 국가들의 '성별 분업'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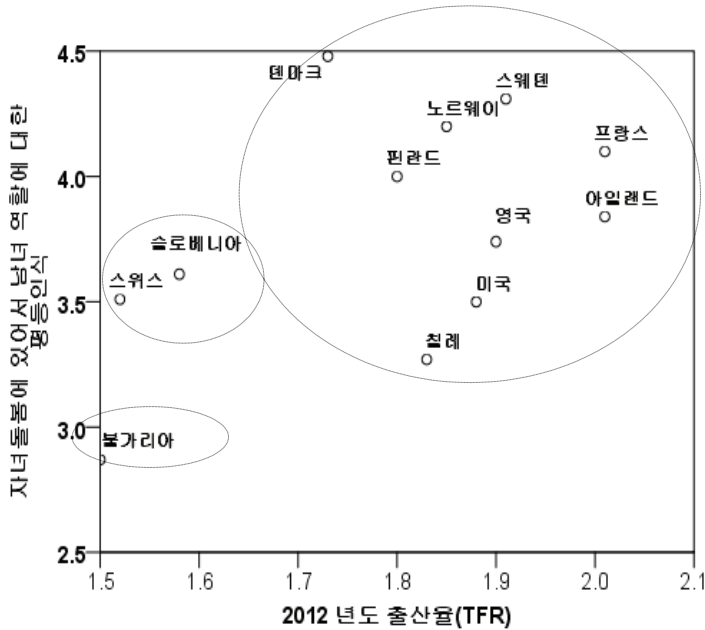
(단위: 점)



주: 질문 내용은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의 평등의식이 강한 것임(역코딩).

[그림 3-28] TFR 1.5~2.1 미만 국가들의 TFR과 '성별 분업' 인식과의 관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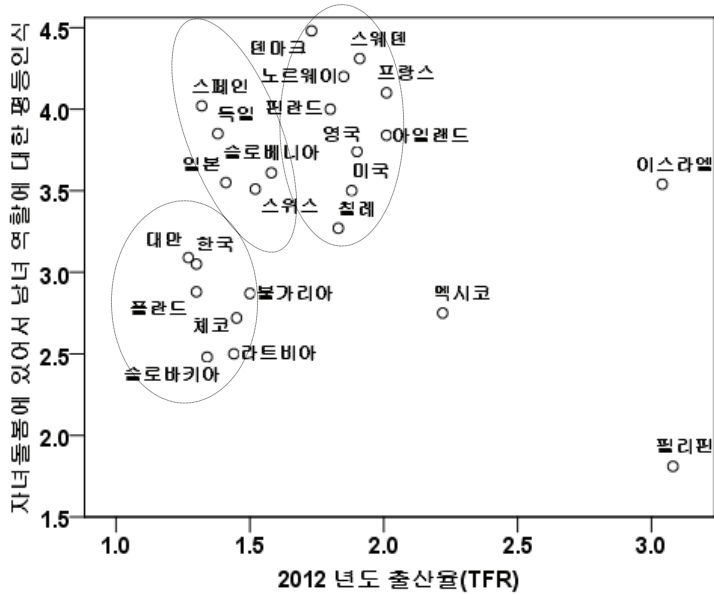


주: 질문 내용은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의 평등인식이 강한 것임(역코딩).

각 국가의 성별 분업 인식을 TFR 수준과 비교해보면 아래의 [그림 3-29]와 같은데, 특징적인 3개의 집단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군집은 출산율이 중상이면서 성별 분업에 대한 반대의식이 높은 국가들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미국, 칠레 등이다. 두 번째 군집은 출산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성별 분업 의식이 약한 스페인, 독일, 일본, 슬로베니아, 스위스 등이다. 그리고 세 번째 군집은 출산율도 낮으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성별 분업 의식이 강한 대만, 한국,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리트비아, 슬로바키아 등이다.

[그림 3-29] 25개 전체 국가들의 TFR과 '성별 분업' 인식과의 관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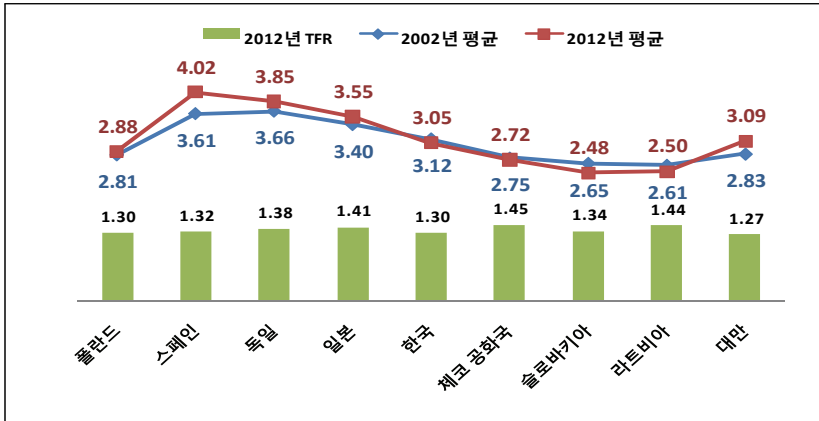


주: 질문 내용은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의 평등의식이 강한 것임(역코딩).

그렇다면 이러한 성별 분업 인식이 각 국가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각 국가별 TFR과 어떠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3-30]과 [그림 3-31]과 같다. TFR이 1.5 미만인 국가들의 경우 성별 분업 인식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국을 비롯해서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등은 성별 분업 인식이 강화되는(성별 분업에 대한 평등적 인식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TFR이 1.5~2.1 미만 국가들의 경우 스위스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별분업 인식이 약화되었다.

[그림 3-30] 2012년 출산율(TFR) 1.5 미만 국가들의 '성별 분업' 인식의 변화: 2002년과 2012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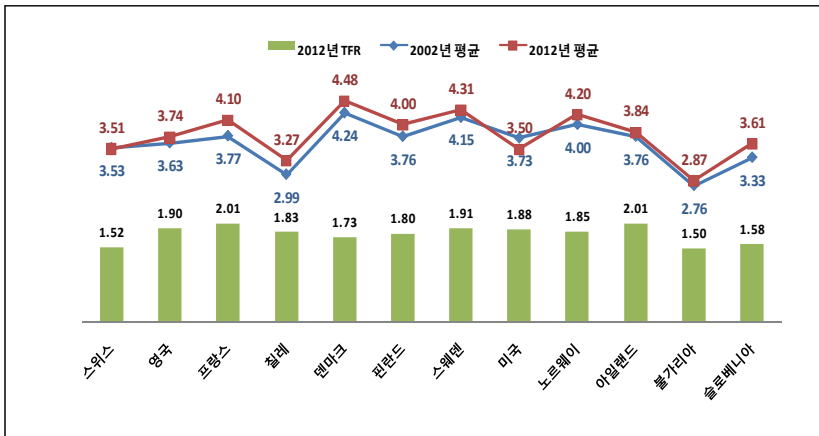
(단위: 점)



주: 한국의 경우 2003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자료를 이용함

[그림 3-31] 2012년 출산율(TFR) 1.5~2.1 미만 국가들의 '성별 분업' 인식의 변화: 2002년과 2012년 비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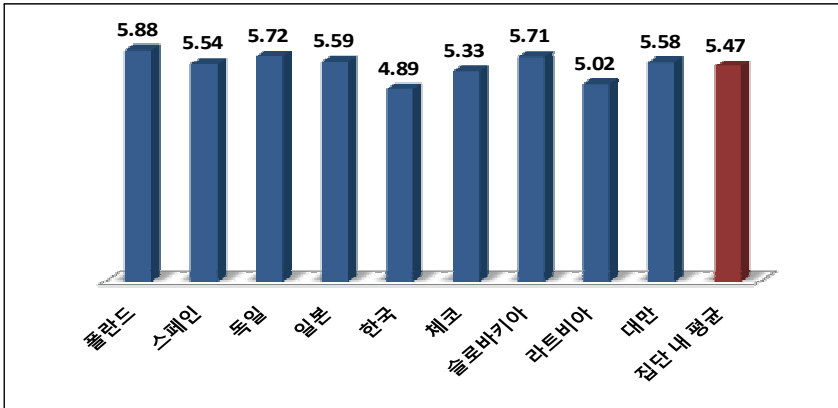
3. 합계출산율별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의 비교

가. TFR과 ‘가정생활만족도’와의 관계

가정생활만족도에 있어 국가 간 차이와 출산수준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TFR이 1.5 미만이 초저출산 국가들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폴란드가 5.88점으로 가장 높고, 독일(5.72점), 슬로바키아(5.71점), 일본(5.59점) 등의 순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4.89점으로 출산수준이 낮은 국가 내에서도 가정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은 국가이다.

[그림 3-32] TFR 1.5 미만 국가들의 ‘가정생활만족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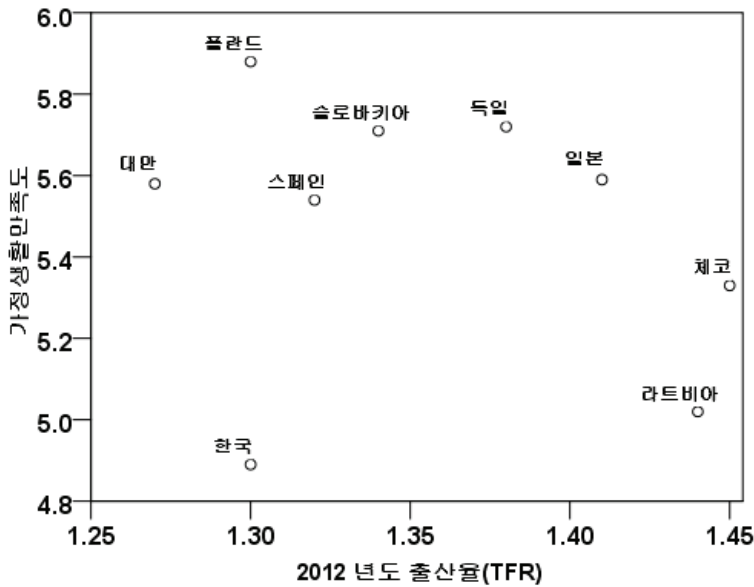
주: 질문 내용은 “귀하는 가정생활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이며, 위에 제시된 값은 7점 서열형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이러한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국가 간 차이를 TFR과 비교한 결과는 [그림 3-33]에 제시되어 있다. 국가별로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는 않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한국에 비해 출산율도 높으면서 가정

생활만족도 역시 높아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33] TFR 1.5 미만 국가들의 TFR과 가정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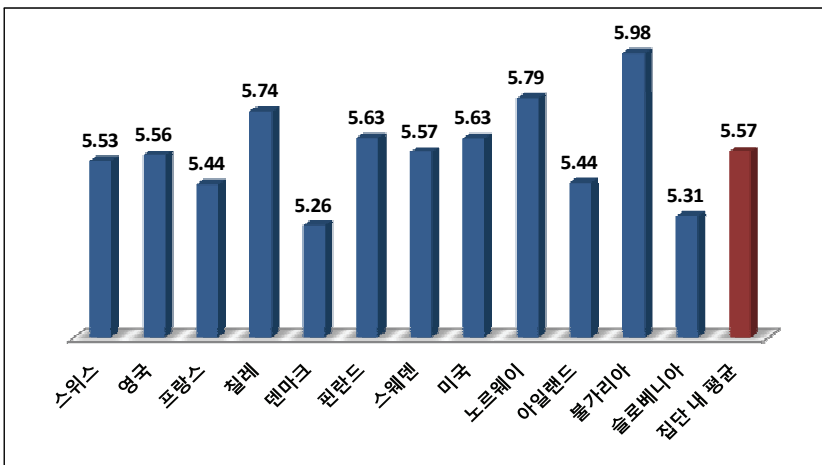
주: 질문 내용은 “귀하는 가정생활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이며, 위에 제시된 값은 7점 서열형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다음으로 합계출산율이 1.5~2.1 미만 국가들의 가정생활만족도와 TFR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3-34]와 [그림 3-35]이다. 먼저, 국가별 가정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불가리아가 5.98점으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는 노르웨이(5.79점), 칠레(5.74점), 핀란드(5.63점)와 미국(5.63점), 스웨덴(5.57점) 등의 순이다. 그리고 이들 12개국 내에서 가정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은 국가는 덴마크이며(5.26점), 슬로베니아(5.31

점), 아일랜드(5.44점)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가정생활만족도를 각국의 TFR과 비교해보면, 크게 3가지 국가군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불가리아는 12개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출산율은 낮지만 가정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며, 스위스, 슬로베니아, 덴마크는 상대적으로 중하위의 출산수준과 낮은 가정생활만족도를 갖고 있는 국가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 칠레, 핀란드, 미국, 스웨덴,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등은 높은 출산율과 함께 가정생활만족도도 높은 국가들이다.

[그림 3-34] TFR 1.5~2.1 미만 국가들의 '가정생활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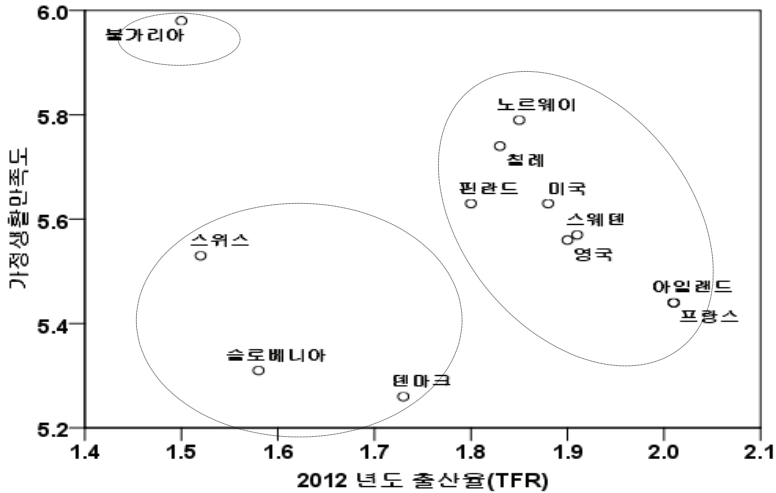
(단위: 점)



주: 질문 내용은 “귀하는 가정생활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이며, 위에 제시된 값은 7점 서열형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그림 3-35] TFR 1.5~2.1 미만 국가들의 TFR과 가정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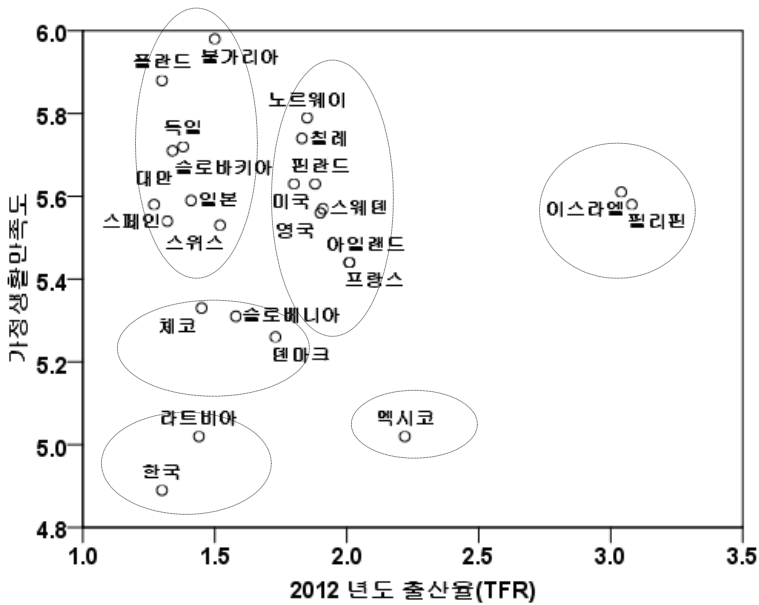


주: 질문 내용은 “귀하는 가정생활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이며, 위에 제시된 값은 7점 서열형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이상의 가정생활만족도와 각 국가별 TFR을 대비시킨 결과가 [그림 3-36]에 제시되어 있다. ISSP 25개국은 크게 6개의 국가군으로 나뉜다. 불가리아, 폴란드, 독일, 슬로바키아, 일본, 대만, 스페인, 스위스 등은 가정생활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출산율은 낮은 국가들이다. 그리고 노르웨이, 칠레, 핀란드, 미국,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은 출산율이 중상 수준이며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은 국가들로 분류된다. 체코공화국, 슬로베니아, 덴마크는 중하 수준의 출산율과 다소 낮은 가정생활만족도를 보이는 국가들이다. 한국은 경우 라트비아와 함께 출산율도 낮으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정생활만족도도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그림 3-36] 25개 전체 국가들의 TFR과 가정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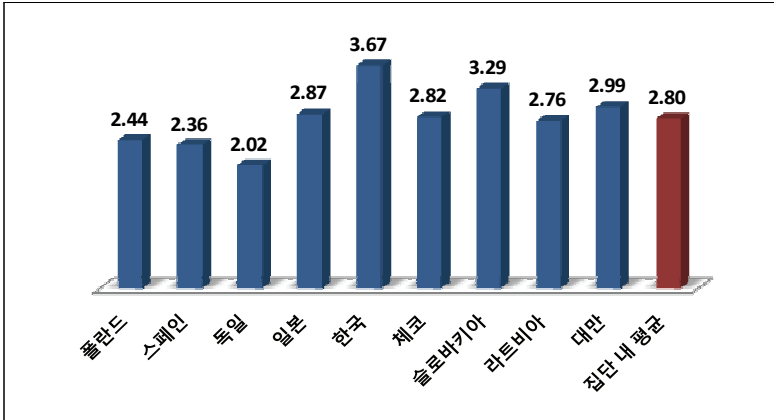


주: 질문 내용은 “귀하는 가정생활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이며, 위에 제시된 값은 7점 서열형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국가별 결혼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함께 사는 것은 결혼할 의사를 전제로 한다’라는 인식을 비교하였다. TFR이 1.5 미만이 국가들의 경우 한국과 슬로바키아에서 함께 사는 것은 결혼할 의사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동거가 반드시 결혼 의사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이 중에서도 독일이 반대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2.02점), 그 다음은 스페인(2.36점), 폴란드(2.44점) 순이다.

[그림 3-37] TFR 1.5 미만 국가들의 ‘동거는 결혼의사 전제가 필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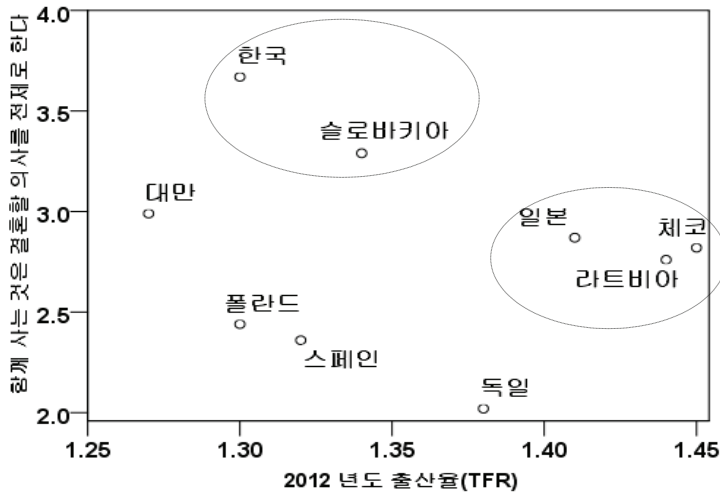
(단위: 점)



주: 질문 내용은 “함께 사는 것은 결혼할 의사를 전제로 한다”이며, 위에 제시된 값은 5점 서열형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이러한 가치관은 각 국가의 TFR과 비교할 때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그림 3-38]을 보면 한국과 슬로바키아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낮으면서 동거가 결혼의사 전제가 필수라는 의식이 강한 국가들로 분류되는 반면, 일본, 라트비아, 체코공화국의 경우에는 한국이나 슬로바키아에 비해 출산율이 높으면서 함께 사는 것은 결혼할 의사를 전제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더 많은 국가들에 속한다.

[그림 3-38] TFR 1.5 미만 국가들의 TFR과 '동거는 결혼의사 전제가 필수' 인식과의 관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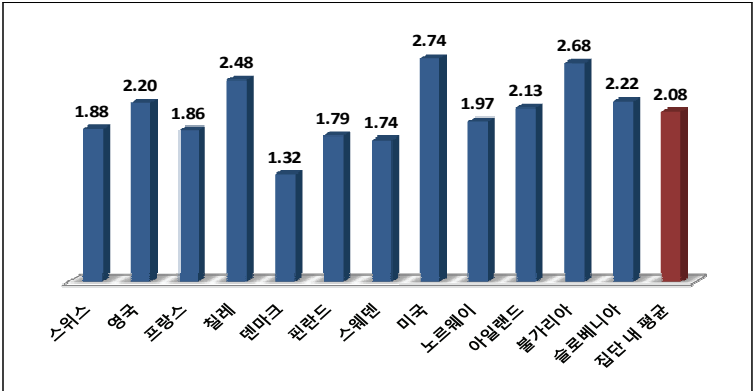


주: 질문 내용은 “함께 사는 것은 결혼할 의사를 전제로 한다”이며, 위에 제시된 값은 5점 서열형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그림 3-39]를 보면, TFR이 1.5~2.1 미만인 모든 국가들은 동거가 반드시 결혼할 의사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덴마크(1.32점)가 가장 강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스웨덴(1.74점), 핀란드(1.79점), 스위스(1.88점) 등이 뒤를 이었다. [그림 3-40]은 이러한 가치관을 국가별 TFR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크게 두 개의 국가군으로 분류된다. 미국, 칠레,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 등의 국가들은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결혼의사를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해 반대 의견이 강한 편에 속한다. 반면, 불가리아와 슬로베니아, 스위스 등은 비록 동거가 결혼의사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상대적으로 출산율은 낮은 국가들이다.

[그림 3-39] TFR 1.5~2.1 미만 국가들의 ‘동거는 결혼의사 전제가 필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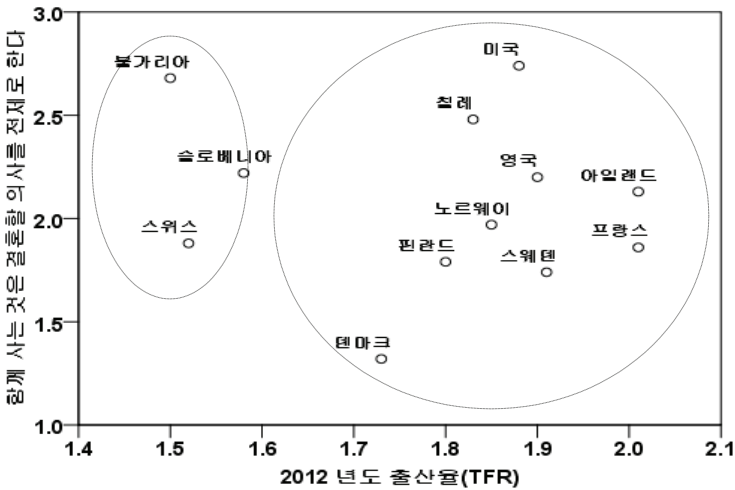
(단위: 점)



주: 질문 내용은 “함께 사는 것은 결혼할 의사를 전제로 한다”이며, 위에 제시된 값은 5점 서열형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다.

[그림 3-40] TFR 1.5~2.1 미만 국가들의 ‘동거는 결혼의사 전제가 필수’ 인식과의 관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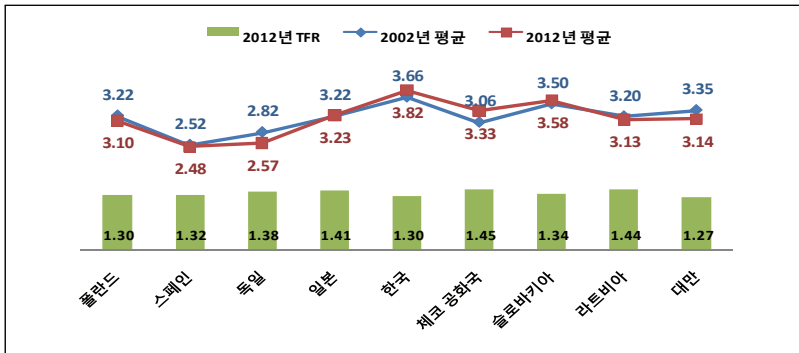


주: 질문 내용은 “함께 사는 것은 결혼할 의사를 전제로 한다”이며, 위에 제시된 값은 5점 서열형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다.

다음으로 각 국가별로 전통적인 결혼관이 10년간 어떻게 변화되어왔고, 이것이 현재 국가별 TFR과는 어떠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그림 3-41]과 [그림 3-42]를 살펴보면, TFR 수준에 따라 전통적 결혼관의 변화가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TFR이 1.5 미만인 국가들인 일본, 한국,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의 경우 전통적인 결혼관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TFR이 1.5~2.1 미만 국가들의 경우 스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통적인 결혼관이 약화되고 있다.

[그림 3-41] 2012년 출산율(TFR) 1.5미만국가들의 '전통적 결혼관'의 변화: 2002년과 2012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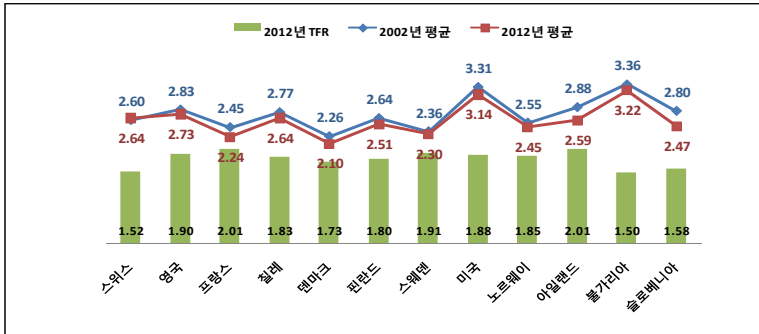
(단위: 점)



주: 한국의 경우 2003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자료를 이용함

[그림 3-42] 2012년 출산율(TFR) 1.5~2.1 미만국가들의 '전통적 결혼관'의 변화:
2002년과 2012년 비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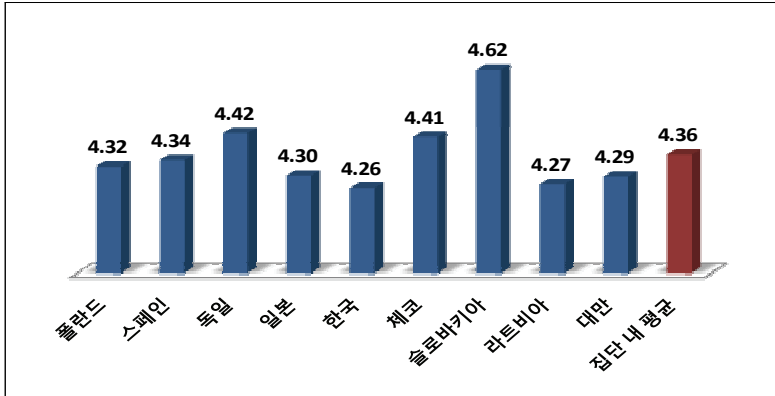


나. TFR과 '자녀관'

다음으로 자녀관에 대한 인식에서 국가 간 차이와 출산수준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즉,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국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TFR이 1.5 미만인 저출산 국가들의 자녀관을 살펴보면, 슬로바키아가 인생에서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으로 느끼는 경향이 가장 강하며, 그 다음은 독일(4.42점), 체코(4.41점) 등의 순이다. 한국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분석결과 저출산 국가 내에서 가장 약한 태도를 갖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림 3-43] TFR 1.5 미만 국가들의 자녀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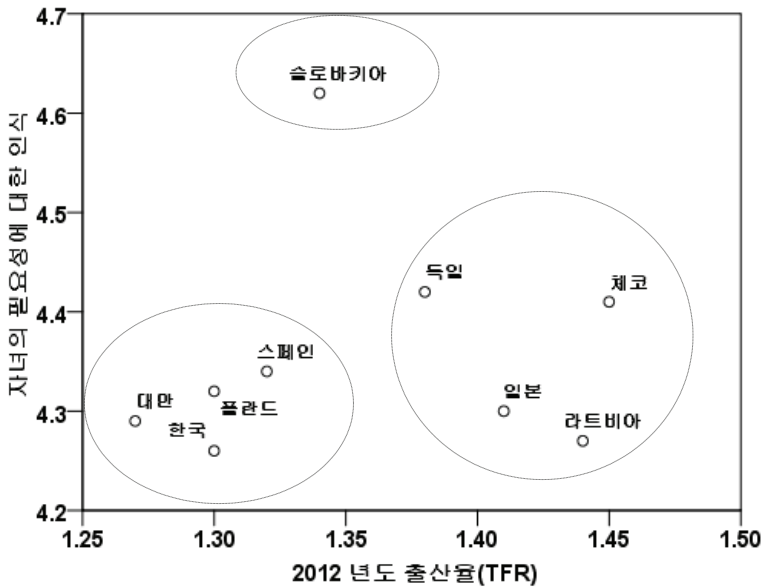


주: 질문 내용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이며, 위에 제시된 값은 5점 서열형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임.

위와 같은 국가별 자녀관의 차이를 각 국가별 TFR과 비교해보면 아래의 [그림 3-44]와 같이 크게 3개의 집단으로 나뉜다. 슬로바키아는 저출산국가 내에서 중간 정도의 출산수준이지만 자녀에 대해 높은 긍정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다음으로 독일, 체코공화국, 일본, 라트비아가 같은 국가군 내에서는 출산율도 상대적으로 높고 자녀관도 낮지 않은 국가들이다. 스페인, 폴란드, 대만, 한국은 출산율과 함께 자녀관 역시 다소 낮은 국가들이다.

[그림 3-44] TFR 1.5 미만 국가들의 TFR과 자녀관과의 관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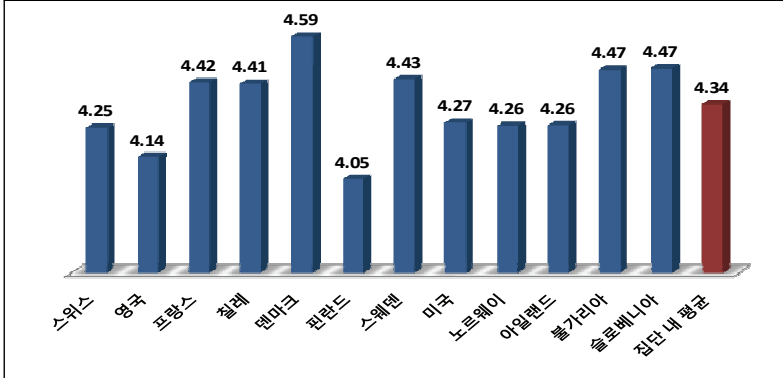


주: 질문 내용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이며, 위에 제시된 값은 5점 서열형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임.

TFR이 1.5~2.1 미만인 국가들의 경우 자녀관을 비교해보면 [그림 3-45]과 같은데, 자녀에 대해 제일 긍정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국가는 덴마크로 4.59점이었으며, 불가리아(4.47점)와 슬로베니아(4.47점), 스웨덴(4.43점), 프랑스(4.42점), 칠레(4.41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국가별 자녀관을 TFR과 비교한 [그림 3-46]을 살펴보면 크게 3개의 국가군으로 나뉘는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로 자녀관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45] TFR 1.5~2.1 미만 국가들의 자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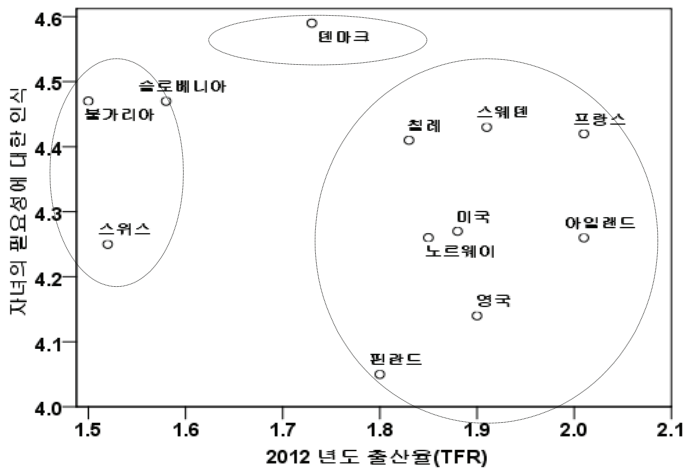
(단위: 점)



주: 질문 내용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이며, 위에 제시된 값은 5점 서열형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그림 3-46] TFR 1.5~2.1 미만 국가들의 TFR과 자녀관과의 관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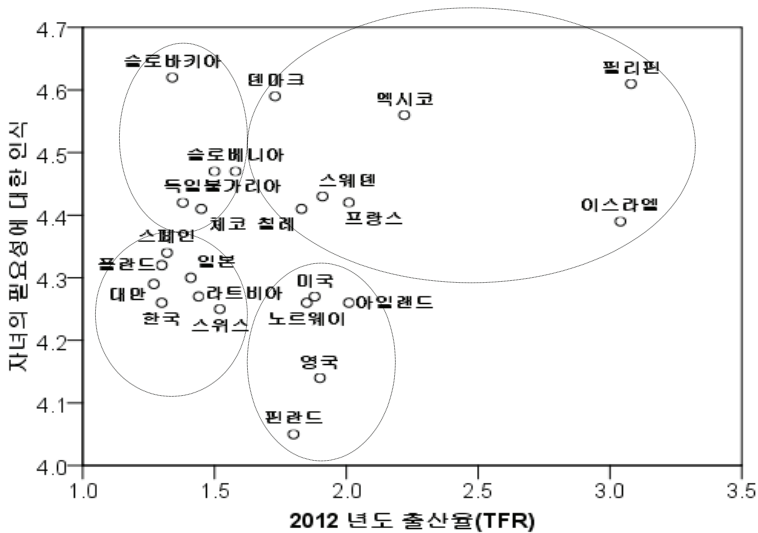


주: 질문 내용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이며, 위에 제시된 값은 5점 서열형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위에서 살펴본 25개국들의 자녀관과 합계출산율을 종합하여 비교해보면 아래의 [그림 3-47]과 같은데, 크게 4개의 국가군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출산율은 낮으면서 자녀에 대해 긍정적 가치관이 강한 국가들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독일, 체코공화국이다. 그리고 덴마크, 멕시코, 필리핀, 이스라엘, 스웨덴, 칠레, 프랑스 등은 출산율이 중상 이상 수준이면서 자녀관도 긍정적인 국가들이다. 미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영국, 핀란드 등은 출산율은 높으나 상대적으로 자녀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국가들이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폴란드, 대만, 일본, 라트비아, 스위스와 한국은 저출산국가이면서 자녀가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가장 약한 국가들로 분류된다.

[그림 3-47] 25개 국가들의 TFR과 자녀관과의 관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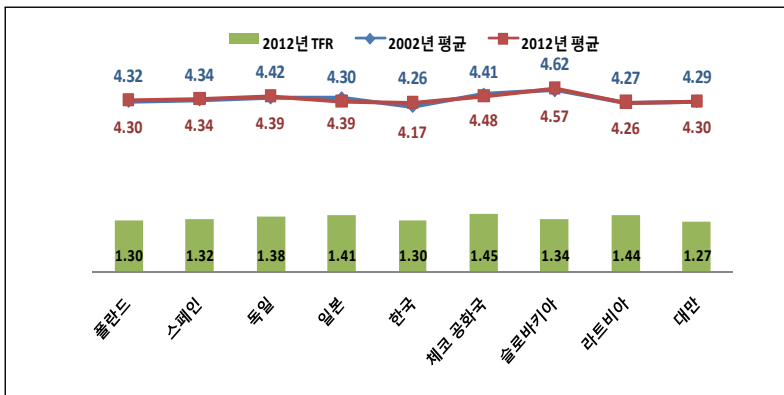


주: 질문 내용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이며, 위에 제시된 값은 5점 서열형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그렇다면 이러한 전통적인 자녀관은 10년간 각 국가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의 TFR과는 어떠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은 아래의 [그림 3-48]과 [그림 3-49]를 통해 대략적인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TFR이 1.5 미만인 국가들의 경우 약간의 인식변화는 보이지만 뚜렷한 경향을 포착되지 않는다. 반면 TFR이 1.5~2.1 미만 국가들의 경우 영국, 노르웨이, 슬로베니아의 경우 소폭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통적인 자녀관은 약화되고 있다.

[그림 3-48] 2012년 출산율(TFR) 1.5 미만국가들의 '전통적 자녀관'의 변화: 2002년과 2012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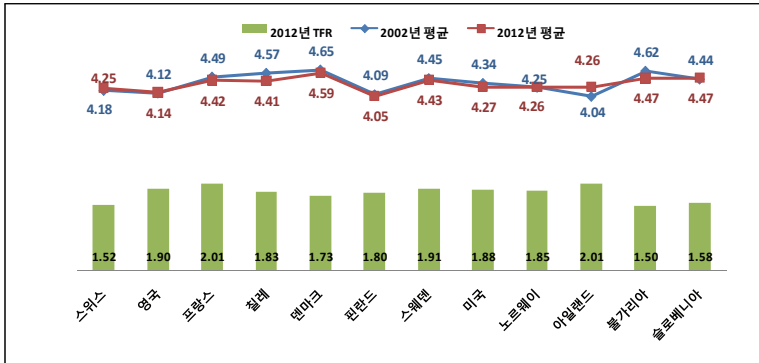
(단위: 점)



주: 한국의 경우 2003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자료를 이용함

[그림 3-49] 2012년 출산율(TFR) 1.5~2.1 미만국가들의 '전통적 자녀관'의 변화:
2002년과 2012년 변화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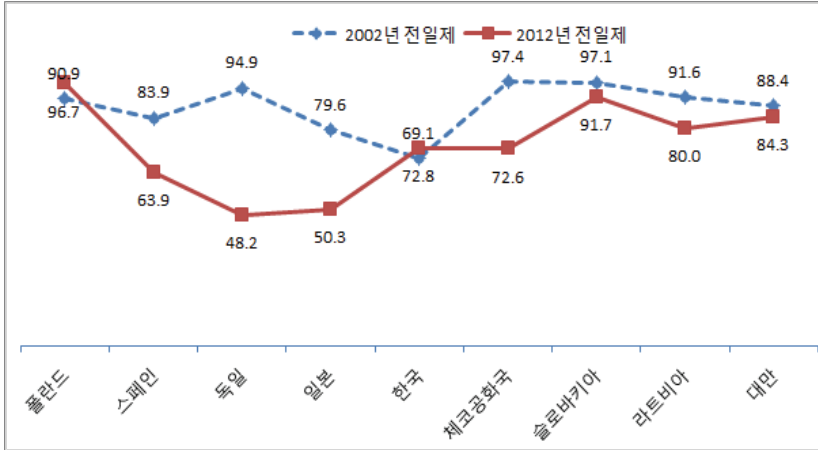
4. 합계출산율별 취업형태 및 유급휴가 인식의 변화

가. TFR과 취업형태의 변화

전일제로 근무하는 취업모의 경우 아무래도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각 국가별 TFR별로 자녀가 미취학아동일 때의 취업형태의 변화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 3-50]에 제시된 바와 같이 TFR이 1.5 미만인 국가의 경우 자녀가 미취학아동일 때 독일과 일본을 제외하고 전일제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지난 10년 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그림 3-51]에서와 같이 TFR이 1.5~2.1 미만인 국가들의 경우 과거에 비해 전일제의 비율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50] 2012년 출산율(TFR) 1.5 미만 국가들의 '취업형태'의 변화: 2002년과 2012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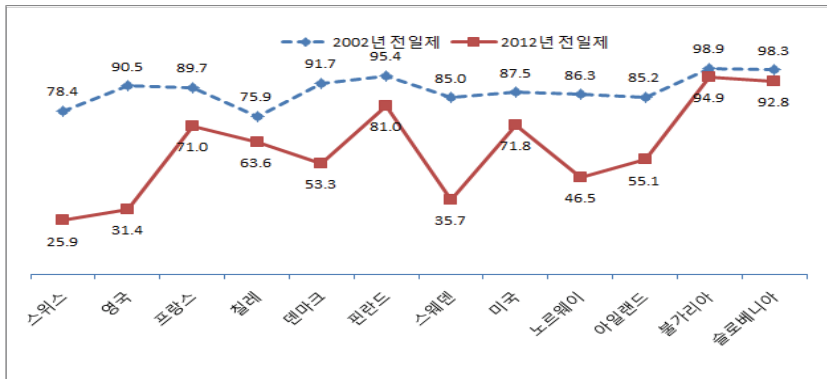
(단위: 점)



주: 한국의 경우 2003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자료를 이용함

[그림 3-51] 2012년 출산율(TFR) 1.5~2.1미만 국가들의 '취업형태'의 변화: 2002년과 2012년 비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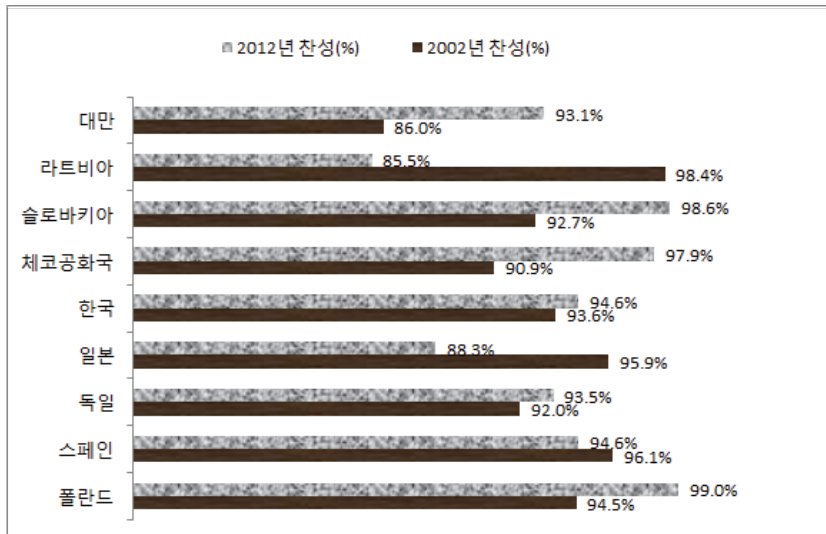


나. TFR과 유급휴가의 필요성 인식

각 국가의 TFR 수준에 따른 유급휴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먼저, [그림 3-52]에 제시된 바와 같이 TFR이 1.5 미만인 국가의 경우, 라트비아, 일본, 스페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급휴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초저출산 국가들에 비해 TFR이 1.5~2.1 미만인 저출산 국가들의 경우 유급휴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으며, 지난 10년 간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그림 3-53] 참조).

[그림 3-52] 2012년 출산율(TFR) 1.5 미만 국가들의 '유급휴가 필요성' 인식의 변화:
2002년과 2012년 비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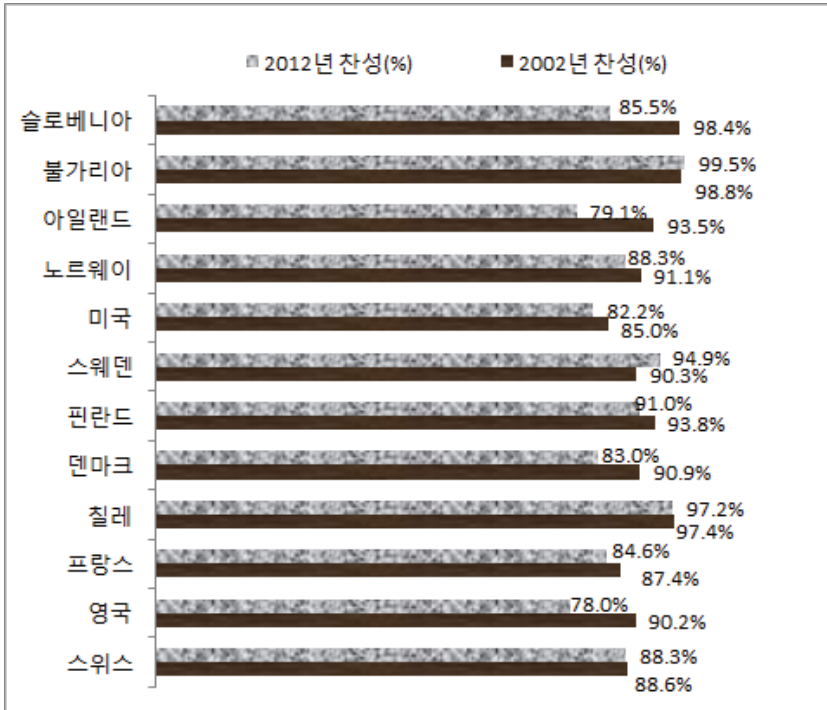


주: 한국의 경우 2003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자료를 이용함

: 국가별로 위의 선이 2012년도이며 아래의 선이 2002년임

[그림 3-53] 2012년 출산율(TFR) 1.5~2.1 미만 국가들의 '유급휴가 필요성' 인식의 변화: 2002년과 2012년 비교

(단위: 점)



주: 국가별로 위의 선이 2012년도이며 아래의 선이 2002년임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ISSP 2012년과 2002년의 자료를 토대로 국가소득수준(GNI) 및 합계출산율(TFR)에 따라 국가군을 유형화하여 일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에는 20여개국을 대상으로 여성 및 어머니의 경제활동에 대한 가치관, 성역할에 대한 태도, 결혼관

및 자녀관, 가정생활의 만족도, 여성의 취업형태, 유급휴가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였다.

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먼저 국민총소득(GNI)별 국가간 차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 경우 여성의 취업이나 성역할에 있어 더 개방적이고 성평등한 의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 GNI 국가들은 저 GNI 국가들에 비해 어머니의 취업 및 전일제 노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전업주부보다는 취업에 더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성별 분업에 있어서도 필리핀, 멕시코,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등 저소득 국가군들을 중심으로 ‘아버지-생계부양자와 어머니-돌봄책임자 모델’의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가 나타나 높은 소득수준이 성평등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냈다.

한편, 합계출산율(TFR)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할 경우 대체로 출산율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더 성평등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산율 수준별로 상이한 패턴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 및 전일제 취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 사이에서는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과 낮은 국가군 사이의 차이가 나타났다. 몇몇 편차가 나타나지만 대체로 폴란드, 독일, 한국, 일본 등 출산율이 1.5미만의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국가는 어머니의 취업과 출산율이 양적 관계를 나타냈지만 덴마크, 미국, 프랑스 등과 같이 출산율이 1.5-2.1 사이에 위치한 국가 사이에서는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출산율과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개방적 태도는 전체적으로 뒤집어진 U자형의 패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어머니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환경은 초저출산을 야기하거나 반대로 모성의 역할을 강화하는 높은 출산율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분업에 대한 인식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결혼 및 자녀관에 있어서는 대체로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 역시 높게 나타났다. 결혼관에서 TFR 1.5 미만의 저출산 국가군들은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냈는데 이들 국가군 사이에서는 출산율과 혼전동거는 서로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일부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군을 제외하고 대체로 양적 관계를 나타냈다. 자녀양육에 대해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다소 국가군별 편차가 나타났다.

유급휴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저출산 국가들보다 출산율이 높은 국가군에서 더 유급휴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따라서 출산율의 증가는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어머니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국가 간 차이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취업 및 전일제 노동에 대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과 한국, 대만의 동아시아 국가들과 스페인의 남유럽 국가 사이의 두드러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다른 국가군에 비해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응답한 수준이 더 높았다. 반면 한국은 전체 국가 중 거의 최하위에 위치하면서 어머니의 취업이 취학 전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한국과 비슷한 태도를 나타내는 국가들은 주로 필리핀, 멕시코, 칠레 등으로 한국의 경제규모가 중위권 국가에 속하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경제성장수준과 달리 어머니의 취업과 성역할 태도에 있어 상당히 보수적인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생계부양자와 어머니-돌봄책임자 모델’의 성별 분업관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 북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성평등한 가구모형을 지향한 반면 한국, 대만은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 성별분

업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이 서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성역할이나 가족규범에 대한 태도에 있어 중간수준에 위치하였는데 국가별로 다양한 편차가 존재하였다.

이처럼 국가 간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는 일-가족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지원체계의 발달수준과 전통적인 가족주의 문화 등의 차이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대표적인 사민주의 국가로서 비교적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이른 시기부터 여성의 완전고용을 통한 성평등의 실현을 정책적 목표로 지향하기 때문에 일하는 어머니가 근로상의 불이익을 경험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다. 반면 비슷한 경제수준으로 대비할 때 어머니의 취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 국가군은 한국과 스페인, 대만 등인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가족지원을 위한 공공지출이 낮고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문화가 강하며 보수적인 성역할에 대한 규범이 높은 사회이다.

한국은 특히 다른 국가에 비해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또한 혼전동거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가장 높았으며 자녀를 삶의 행복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역시 가장 저조하였다.

한편 2012년과 2002년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지난 10년간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성평등 인식이 성장한 국가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 및 프랑스 등이고 이들 국가는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유형에 속한다. 반면 출산율이 낮은 국가군에서는 폴란드를 제외하고 대체로 10년간 성평등 의식수준의 성장이 두드러지지 않았고 한국 역시 매우 저조한 수준의 상승을 나타내어 보수적인 태도로부터 큰 변화가 없었다. 결혼관 및 자녀관에 있어서도 출산율이 낮은 국가군보다 높은 국가군에서 더 개방적 태도로 변화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혼전동거에 대해서도 지난 10년간 변화가 거의 없었고 자녀 관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부정적 인식이 높아져 보수적인 가족규범은 지속되는 대신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도리어 감소하는 출산에 있어 여러모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제4장

미혼여성의 사회적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제1절 미혼여성의 가족적 위험

제2절 미혼여성의 경제적 위험

제3절 미혼여성의 사회적 위험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4

미혼여성의 사회적 <<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제4장부터 6장까지는 2012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2)를 중심으로 미혼여성, 기혼여성, 노인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4장은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계층별 미혼여성이 경험하는 가족적 위험, 경제적 위험, 사회적 위험이 무엇인지 각각 살펴보고,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향후 여성의 출산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회적 변화의 동향을 해석할 것이다. 사회계층의 구분은 소득분위수를 활용하였으며, 2012년 전국 전체 가구대상의 평균 가계소득을 7분위수 이상(451.7886만원이상), 4~7분위수(297.6744만원이상 ~ 451.7886만원 미만), 4분위수(297.6744만원 미만)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이를 각각 상층, 중층, 하층으로 정의하였다.

제1절 미혼여성의 가족적 위험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가족규범과 젠더역할에 대한 태도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양(兩)부모와 자녀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혈연 및 결혼제도를 근거로 하는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점점 덜 중요시되는 반면, 1인가구, 미혼가구, 동거가구, 한부모가족, 비동거가족 등 다양하고 탈표준화된 방식의 가구생활이 등장하고 있다.

McDonald(2000)는 저출산을 야기하는 중요한 사회적 원인으로 여성이 경험하는 개인지향적 사회제도(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와 가족지향적 제도(family-oriented institution)의 불일치를 제안했다. 여성들은 교육, 노동활동, 정치활동 등 개인수준의 제도에서 높은 성평등을 보장받지만, 결혼, 가족, 부모됨 등 가족제도로부터는 그들의 개인생활과 괴리되는 성 불평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럴 경우 여성은 사회변화로부터 괴리된 가족제도에 결속되는 것을 기피하게 되며, 결혼기피, 만혼, 출산지연 및 출산기피 등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저출산 현상이 보수적인 가족규범과 억압적인 젠더 이데올로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예컨대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대한 규범적 압력이 강하거나 개인의 생활양식에 있어서 생애단계의 경직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게 나타났다(Lesthaeghe & Moors, 2000; Shirahase, 2000).

본 절에서는 가구구성 형태, 사회계층, 연령 등에 따라 우리나라 미혼여성들을 집단으로 나누어 결혼, 가족, 부모됨에 대한 가치관과 성역할 태도를 비교하였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가족규범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미혼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족제도로부터의 개인적 갈등과 충돌의 요인을 분석하여 저출산 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족적 위험을 예측하였다.

1. 미혼여성의 가구구성 및 가족동거 현황

〈표 4-1〉은 응답자 중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1인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미혼남녀의 비율을 성별 및 연령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응답자 중 5.37%가 미혼 1인가구에 속했는데, 여기에는 남성이 7.78%, 여성이

3.47%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15%, 30대가 13.83%로 주로 청년층의 미혼 1인가구의 경우, 교육, 취업준비를 지속하고 있는 20대의 젊은 연령대에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 부모로부터의 독립(1인가구)여부에 따른 미혼 응답자의 분포

(단위: 명, %)

유형		1인가구	그 외 가구	합계
성별	미혼남성	48	569	617
		7.78%	92.22	100.00%
	미혼여성	27	752	779
		3.47%	96.53	100.00%
연령	18-29세	33	187	220
		15.00%	85.00%	100.00%
	30-39세	26	162	188
		13.83%	86.17%	100.00%
	40세 이상	16	972	988
		1.62%	98.38%	100.00%
합계		75	1,321	1,396
		5.37%	94.63%	100.00%

주: 가족이 아닌 구성원과 동거할 경우 동거가족으로 포함하지 않음

〈표 4-2〉는 전체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비율을 집계한 표이다. 남성의 경우 73.78%가 부모와 동거하였고 여성의 경우 78.69%가 여기에 해당되면서 미혼여성은 미혼남성보다 부모와 동거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연령의 경우 대부분이 20대 이하로 전체 20대 중 89.71%가 부모와 동거 중에 있어 대체로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30대 이상에서부터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30대에서는 47.27%의 절반가량의 30대가 부모와 독립하지 않았으며 40대에서도 미미하였지만 부모와 동거 중인 미혼 응답자의 사례가 일부 존재하여 생애경로의 다양성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표 4-2〉 부모와 동거여부에 따른 미혼 응답자의 분포

(단위: 명, %)

유형		부모와 동거	비동거	합계
성별	미혼남성	121	43	164
		73.78%	26.22%	100.00%
	미혼여성	96	26	122
		78.69%	21.31%	100.00%
연령	18-29세	183	21	204
		89.71%	10.29%	100.00%
	30-39세	26	29	55
		47.27%	52.73%	100.00%
	40세 이상	8	19	27
		29.63%	70.37%	100.00%
합계		217	69	286
		75.87%	24.13%	100.00%

2. 미혼여성의 결혼 및 이혼에 대한 인식

〈표 4-3〉은 미혼자를 대상으로 결혼과 이혼에 관한 가치관을 사회계층별로 비교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혼남성은 미혼여성에 비해 더 보수적인 가족관을 나타냈다. 계층별 남녀 간 차이가 유의한 문항으로는 중층과 하층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결혼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으며, 반면 상층남녀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와 결혼에 관한 인식에서도 역시 중층 및 하층여성의 경우 남녀차이가 발생했는데, 중·하층 여성은 같은 계층의 남성에 비해 결혼을 기반으로 한 자녀양육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상층보다는 주로 중층과 하층의 남녀사이에서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이혼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상층의 여성은 상층의 남성보다 이혼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지만, 다른 계층의 남녀에게서는 이와 같은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3〉 미혼응답자의 결혼 및 이혼에 대한 인식(사회계층별 차이)

(단위: 점, 명)

문항		상층			중층			하층		
		미혼 남성	미혼 여성	T값	미혼 남성	미혼 여성	T값	미혼 남성	미혼 여성	T값
1)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대체로 더 행복하다	평균	3.44	3.34	-0.41	3.67	2.87	-4.35**	3.42	2.95	-2.20*
	표준오차	1.07	0.83		0.92	0.92		1.12	0.96	
	사례수	48	32		55	45		60	44	
2) 자녀를 원하는 사람은 결혼해야 한다	평균	3.88	3.66	-0.99	3.93	3.40	-2.49*	3.97	2.55	-2.07*
	표준오차	0.98	0.94		0.97	1.14		0.98	1.09	
	사례수	48	32		54	45		61	44	
3)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평균	2.77	2.75	0.08	3.06	3.07	-0.05	2.82	2.91	-0.40
	표준오차	1.13	1.14		1.12	1.07		1.17	1.10	
	사례수	48	32		54	45		62	45	
4) 부부 사이의 문 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평균	2.38	3.06	-2.73**	2.91	2.62	1.12	2.60	2.91	-1.46
	표준오차	1.01	1.19		1.29	1.19		1.05	1.16	
	사례수	47	32		53	45		62	45	
보수적 가족관 (총점)	평균	3.54	3.30	1.66	3.41	3.14	1.99*	3.48	3.18	2.41*
	표준오차	0.61	0.66		0.62	0.68		0.59	0.70	
	사례수	47	32		53	45		60	44	

* <0.05, ** <0.01, *** <0.001

주: 1) 전체 총점의 경우 3), 4)의 문항은 역코딩하여 합산

2) 매우 반대(1) ~ 매우 찬성(5)

한편, 〈표 4-4〉는 미혼 집단을 연령별로 나누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것이다. 20대 미혼남녀에게는 결혼 및 이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였지만, 30대 미혼남녀에게서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20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좀 더 뚜렷하게 보수적인 가족관을 나타내었는데, 남성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결혼을 중심으로 한 자녀의 필요성,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30대에서는 그 평균치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 보다 결혼 및 이혼관에 있어서 좀 더 개방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4〉 미혼 응답자의 결혼 및 이혼에 대한 인식(연령별 차이)

(단위: 점, 명)

문항		18-29세			30세 이상		
		미혼 남성	미혼 여성	T값	미혼 남성	미혼 여성	T값
1)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대체로 더 행복하다	평균	3.59	3.09	3.64***	3.33	2.84	2.08*
	표준오차	1.03	0.89		1.07	1.00	
	사례수	112	90		51	31	
2) 자녀를 원하는 사람은 결혼해야 한다	평균	3.92	3.47	3.14**	3.94	3.68	1.16
	표준오차	1.01	1.04		0.89	1.14	
	사례수	113	90		50	31	
3)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평균	2.79	2.91	-0.80	3.10	2.97	0.48
	표준오차	1.13	1.03		1.15	1.30	
	사례수	114	91		50	31	
4)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평균	2.52	2.88	-2.21*	2.90	2.74	0.58
	표준오차	1.15	1.14		1.07	1.32	
	사례수	113	91		49	31	
보수적 가족관 (총점)	평균	3.55	3.19	4.05***	3.31	3.20	0.69
	표준오차	0.60	0.62		0.58	0.85	
	사례수	111	90		49	31	

* <0.05, ** <0.01, *** <0.001

주 : 1) 전체 총점의 경우 3), 4)의 문항은 역코딩하여 합산

2) 매우 반대(1) ~ 매우 찬성(5)

3. 미혼여성의 자녀에 대한 인식

〈표 4-5〉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나타내는 문항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표이다. 2012년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제시된 6개의 자녀인식 관련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시도한 결과, 두 가지의 요인군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각각 자녀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호소하는 부정적 태도와 자녀의 정서적,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긍정적 태도로 나누어진다.

〈표 4-5〉 자녀의 가치에 대한 요인분석

자녀에 대한 인식		요인 1	요인 2	Uniqueness
부정적 태도	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자유는 너무 많이 제약된다	0.7824	-0.0361	0.3865
	자녀는 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이다	0.7732	0.0214	0.4016
	자녀가 있으면 부모 양쪽 혹은 어느 한쪽의 취업 및 경력기회가 제약된다	0.7540	-0.012	0.4314
긍정적 태도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0.2484	0.5888	0.5916
	자녀가 있으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다	-0.0222	0.7745	0.3997
	성인자녀는 노부모에게 도움을 중요한 원천이다	-0.1177	0.7337	0.4479
Eigenvalue		1.85462	1.48673	
Proportion		0.3091	0.2478	

〈표 4-6〉은 자녀가 경제적이거나 물질적으로 부모에게 부담을 주는지의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문항을 사회계층별로 나누어 남녀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평균값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미혼여성은 미혼남성보다 자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부담감이 더 높았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의 자유가 제약될 것을 우려하는 문항에 대해서 하층의 남녀에게서 인식차가 나타났고, 여성이 남성보다 이러한 부담감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로 인한 재정적 부담의 경우, 상층남성이 가장 적게 느끼고 있었다.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총점으로 비교할 경우, 상층남성은 상층여성에 비해 자녀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층집단에서도 역시 남성은 여성보다 자녀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고 있었고, 전체 남녀 중 자녀에 대한 경제활동 및 비용의 부담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집단은 하층여성이었다.

〈표 4-6〉 미혼남녀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사회계층별 차이)

(단위: 점, 명)

문항		상층			중층			하층		
		미혼 남성	미혼 여성	T값	미혼 남성	미혼 여성	T값	미혼 남성	미혼 여성	T값
1)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자유는 너무 많이 제약된다	평균	3.21	3.66	1.95	3.47	3.64	1.01	3.36	3.80	2.60*
	표준오차	1.07	0.90		0.94	0.71		0.91	0.79	
	사례수	48	32		55	45		61	45	
2)자녀는 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이다	평균	2.85	3.53	2.73**	3.33	3.60	1.36	3.35	3.60	1.14
	표준오차	1.05	1.14		1.07	0.89		1.12	1.10	
	사례수	48	32		55	45		60	45	
3)자녀가 있으면 부모 양쪽 혹은 어느 한쪽의 취업 및 경력기회가 제약된다	평균	3.19	3.59	1.14	3.35	3.40	1.82	3.38	3.56	0.31
	표준오차	1.12	1.10		0.96	1.01		0.87	0.91	
	사례수	60	45		48	32		55	45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총점)	평균	3.08	3.59	2.73**	3.38	3.55	1.16	3.36	3.62	2.02*
	표준오차	1.05	1.14		0.78	0.63		0.73	0.76	
	사례수	48	32		55	45		60	45	

* <0.05, ** <0.01, *** <0.001

주 : 높을수록 자녀에 대해 부정적 태도가 높음, 매우 반대(1) ~ 매우 찬성(5)

한편 〈표 4-7〉은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20대와 30대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20대 및 30대 모두 미혼여성은 연령에 차이 없이 평균적으로 자녀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유의한 문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대 이하에서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자유제약과 재정적 부담에서 남녀 인식의 차이가 높았고, 30대 이상에서는 취업 등 경력기회의 제약에서 남녀 간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표 4-7〉 미혼남녀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연령별 차이)

(단위: 점, 명)

문항		18-29세			30세 이상		
		미혼남성	미혼여성	T값	미혼남성	미혼여성	T값
1)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자유는 너무 많이 제약된다	평균	3.30	3.70	3.12**	3.48	3.71	1.20
	표준오차	1.01	0.80		0.86	0.78	
	사례수	114	91		50	31	

〈표 4-7〉 계속

(단위: 점, 명)

문항		18-29세			30세 이상		
		미혼남성	미혼여성	T값	미혼남성	미혼여성	T값
2)자녀는 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이다	평균	3.14	3.54	2.63**	3.32	3.71	1.60
	표준오차	1.12	1.01		1.06	1.07	
	사례수	113	91		50	31	
3)자녀가 있으면 부모 양쪽 혹은 어느 한쪽의 취업 및 경력기회가 제약된다	평균	3.36	3.46	0.78	3.20	3.65	2.18*
	표준오차	0.92	0.95		0.88	0.91	
	사례수	114	91		50	31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총점)	평균	3.27	3.57	2.76**	3.33	3.69	2.18*
	표준오차	0.80	0.77		0.72	0.70	
	사례수	113	91		50	31	

* <0.05, ** <0.01, *** <0.001

주: 높을수록 자녀에 대해 부정적 태도가 높음, 매우 반대(1) ~ 매우 찬성(5)

〈표 4-8〉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사회계층별로 비교한 표이다.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달리, 긍정적 태도에서는 어떠한 문항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8〉 미혼남녀의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사회계층별 차이)

(단위: 점, 명)

문항		상층			중층			하층		
		미혼남성	미혼여성	T값	미혼남성	미혼여성	T값	미혼남성	미혼여성	T값
1)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평균	3.92	3.50	1.93	3.85	3.57	1.46	3.80	3.33	2.32
	표준오차	0.90	1.02		1.06	0.85		0.96	1.07	
	사례수	48	32		55	44		59	45	
2)자녀가 있으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다	평균	2.79	2.97	-0.84	2.84	2.80	0.21	2.90	2.98	-0.42
	표준오차	0.90	0.97		0.88	0.87		0.91	0.88	
	사례수	48	32		55	45		61	44	
3)성인자녀는 노부모에게 도움의 중요한 원천이다	평균	3.83	3.78	0.24	3.85	3.62	1.16	3.80	3.69	0.61
	표준오차	0.97	0.91		1.03	0.96		0.89	1.04	
	사례수	48	32		55	45		61	45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총점)	평균	3.51	3.42	0.72	3.52	3.34	1.41	3.50	3.31	1.65
	표준오차	0.55	0.65		0.65	0.56		0.56	0.58	
	사례수	48	32		55	44		59	44	

* <0.05, ** <0.01, *** <0.001

주: 높을수록 자녀에 대해 긍정적 태도가 높음, 매우 반대(1) ~ 매우 찬성(5)

〈표 4-9〉는 20대와 30대를 나누어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묻는 문항에서 남녀 간 인식차를 조사한 것이다. 30대는 어떠한 문항에서도 유의한 남녀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20대 이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즉, 미혼 20대 남성은 미혼 20대 여성에 비해 자녀양육에 대한 행복과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전체 문항의 총점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아직 결혼 및 가족생활에 깊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20대 여성이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대해 남성보다 더 부정적인 견해가 높은 것으로 볼 때, 이미 어린 미혼여성에서부터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널리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젊은 세대의 여성일수록 점차 자녀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으로부터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자녀양육 역시 부담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젊은 여성들은 더 이상 자녀출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거나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감을 해소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 사회의 저변에 깔린 젊은 여성들의 가치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9〉 미혼남녀의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연령별 차이)

(단위: 점, 명)

문항		18-29세			30세 이상		
		미혼남성	미혼여성	T값	미혼남성	미혼여성	T값
1)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평균	3.83	3.46	2.82**	3.90	3.48	1.71
	표준오차	0.99	0.89		0.93	1.21	
	사례수	114	90		48	31	
2)자녀가 있으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다	평균	2.82	2.82	0.00	2.90	3.17	-1.20
	표준오차	0.86	0.85		0.95	0.99	
	사례수	114	91		50	30	
3)성인자녀는 노부모에게 도움의 중요한 원천이다	평균	3.94	3.74	1.56	3.58	3.55	1.56
	표준오차	0.93	0.90		0.97	1.15	
	사례수	114	91		50	31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총점)	평균	3.53	3.34	2.34*	3.45	3.37	0.57
	표준오차	0.56	0.58		0.65	0.62	
	사례수	114	90		48	30	

* <0.05, ** <0.01, *** <0.001

주 : 높을수록 자녀에 대해 긍정적 태도가 높음, 매우 반대(1) ~ 매우 찬성(5)

4. 미혼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

〈표 4-10〉은 미혼남녀의 부모됨에 대한 성역할 인식을 사회계층별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남녀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문항은 4)로, 여성의 취업을 일부 긍정하나, 여성의 진정한 가치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다고 인식하는 수정된 방식의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다. 여기서 상층남녀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반면, 중층 및 하층 남성은 같은 계층의 여성에 비해 이러한 인식에 더 많이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부 여성-전일제 남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기반으로 한 성별분업 구조에 대한 인식과 여성의 취업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여성의 중심적 역할을 가족돌봄과 양육으로 인식하는 수정적 남성생계부양자(a revised male-breadwinner model) 모델은 변화하지 않고 있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여전히 주변적 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중·하층 남성들에게서 지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중·하층 여성의 경우 여기에 크게 동의하지 않아 성별분업 인식에 대한 미혼남녀의 인식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표 4-10〉 미혼남녀의 부모됨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사회계층별 차이)

(단위: 점, 명)

문항6		상층			중층			하층		
		미혼 남성	미혼 여성	T값	미혼 남성	미혼 여성	T값	미혼 남성	미혼 여성	T값
1)취업하고 있는 어머니도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녀와 따뜻 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 을 수 있다	평균	3.73	4.06	-1.36	3.87	4.16	-1.35	3.77	4.00	-1.21
	표준 오차	1.07	1.08		1.06	1.03		0.93	0.98	
	사례수	48	32		55	44		62	45	
2)어머니가 취업하면 취학 전 자녀는 상당히 어려움 을 겪게 된다	평균	3.29	3.50	-0.84	3.42	3.22	0.90	3.39	3.42	-0.17
	표준 오차	1.20	0.88		1.03	1.15		1.01	1.06	
	사례수	48	32		55	45		62	45	

〈표 4-10〉 계속

(단위: 점, 명)

문항6		상층			중층			하층		
		미혼 남성	미혼 여성	T값	미혼 남성	미혼 여성	T값	미혼 남성	미혼 여성	T값
3) 전반적으로 여성이 전일 제로 취업하면 가정생활 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평균	3.10	3.19	-0.37	3.18	3.11	0.33	3.11	3.36	-1.24
	표준 오차	0.93	1.06		1.06	1.11		0.94	1.07	
	사례수	48	32		55	45		62	45	
4) 여성이 취업하는 것도 괜 찮으나 대부분의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집 에 머무르며 자녀를 키우 는 것이다	평균	2.63	2.09	1.96	2.89	2.09	3.53***	2.95	2.48	2.04*
	표준 오차	1.27	1.06		1.23	1.00		1.10	1.27	
	사례수	48	32		55	45		61	44	
5) 전업주부가 되는 것도 보 수를 받고 일하는 것만큼 이나 가치 있는 일이다	평균	4.00	4.03	-0.12	4.00	4.22	-1.24	3.82	4.09	-1.42
	표준 오차	1.07	1.15		0.92	0.85		1.00	0.90	
	사례수	48	32		55	45		62	45	

* <0.05, ** <0.01, *** <0.001

주: 매우 반대(1) ~ 매우 찬성(5)

〈표 4-11〉은 20대와 30대를 나누어 미혼남녀의 부모됨의 성역할 인식
을 조사한 것이다. 20대의 경우, 미혼여성은 미혼남성에 비해 여성의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더 높았으며, 반면 남성은 여성의 고용을 일
부 긍정하나 여성의 가치를 좀 더 가족일에 중심을 두는 수정된 남성 생
계부양자 모델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다. 한편, 30대에서는 이러한 남
녀 간 인식차이가 일부 뒤바뀌는데,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취업이 자
녀와 가족에게 질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대해 같은
30대 남성에게 비해 높게 인식하였고, 전업주부의 가치 역시 남성보다 더
존중하는 편이었다. 이는 30대 이상의 미혼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집중적
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여성과 가족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노동환경
들을 경험하게 되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하면서 나타난 결
과로 해석된다.

〈표 4-11〉 미혼남녀의 부모됨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연령별 차이)

(단위: 점, 명)

문항		18-29세			30세 이상		
		미혼 남성	미혼 여성	T값	미혼 남성	미혼 여성	T값
1)취업하고 있는 어머니도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평균	3.86	4.19	-2.35*	3.65	3.73	-0.36
	표준오차	1.05	0.92		0.91	1.23	
	사례수	114	91		51	30	
2)어머니가 취업하면 취학전 자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평균	3.36	3.21	1.00	3.39	3.84	-2.00*
	표준오차	1.14	0.99		0.92	1.07	
	사례수	114	91		51	31	
3)전반적으로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하면 가정생활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평균	3.16	3.04	0.79	3.08	3.74	-3.12**
	표준오차	1.00	1.06		0.91	0.96	
	사례수	114	91		51	31	
4)여성이 취업하는 것도 괜찮으나 대부분의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집에 머무르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	평균	2.69	2.12	3.57***	3.16	2.57	2.19*
	표준오차	1.22	1.03		1.08	1.33	
	사례수	114	91		50	30	
5)전업주부가 되는 것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다	평균	3.96	4.02	-0.41	3.86	4.42	-2.70**
	표준오차	1.00	0.99		0.98	0.76	
	사례수	114	91		51	31	

* <0.05, ** <0.01, *** <0.001

주: 매우 반대(1) ~ 매우 찬성(5)

〈표 4-12〉는 사회계층별 생계부양의 주된 책임에 대한 남녀인식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생계부양의 책임에 대한 인식에서는 사회계층별 남녀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계층에 상관없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생계부양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더 높게 긍정하였다. 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보수적인 가족관을 갖고 있으며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돌봄제공자’의 모델을 좀 더 이상적인 모델로 선호하였다. 이러한 인식차이는 계층 간 차이보다는 남녀의 차이에서 더 두드러졌다.

〈표 4-12〉 미혼남녀의 생계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사회계층별 차이)

(단위: 점, 명)

문항		상층			중층			하층		
		미혼 남성	미혼 여성	T값	미혼 남성	미혼 여성	T값	미혼 남성	미혼 여성	T값
1)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야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평균	3.69	4.13	-2.31*	3.69	4.07	-2.30*	3.44	3.93	-2.57*
	표준오차	0.83	0.83		0.79	0.84		1.00	0.95	
	사례수	48	32		55	45		62	44	
2)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평균	2.48	1.81	2.98**	2.87	2.07	3.524***	2.66	2.16	2.25*
	표준오차	1.05	0.86		1.23	1.01		1.20	1.07	
	사례수	48	32		55	45		62	45	

* <0.05, ** <0.01, *** <0.001

주: 매우 반대(1) ~ 매우 찬성(5)

한편, 〈표 4-13〉은 연령별 생계부양 책임에 대한 남녀인식을 비교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세대 간 차이보다는 남녀 간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20대 이하 남성은 여성에 비해 더 보수적인 성역할 관념을 갖고 있으며, 반면 30대 이상에서는 미혼여성의 보수적 가족구조의 가치관이 증가하면서 남녀차이가 일부 약화되었다.

〈표 4-13〉 미혼남녀의 생계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연령별 차이)

(단위: 점, 명)

문항		18-29세 이하			30세 이상		
		미혼남성	미혼여성	T값	미혼남성	미혼여성	T값
1)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야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평균	3.66	4.02	-3.06**	3.45	4.07	-2.76**
	표준오차	0.84	0.86		0.99	0.94	
	사례수	114	91		51	30	
2)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평균	2.59	1.91	4.74***	2.88	2.39	1.71
	표준오차	1.11	0.88		1.29	1.23	
	사례수	114	91		51	31	

* <0.05, ** <0.01, *** <0.001

주: 매우 반대(1) ~ 매우 찬성(5)

제2절 미혼여성의 경제적 위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임금, 고용상의 지위, 직무환경 등에서 남성에 비해 낮은 대우를 경험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성 불평등은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소규모 기업이나 영세직종에서 낮은 임금과 저숙련 노동 등 불안정하고 주변적인 고용관계에 위치하게 한다. 그 결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성은 경제적인 독립을 지연한다. 이처럼 청년세대의 고용불안정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지연시켜 만혼과 저출산을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Lesthaeghe & Moors, 2000). 특히 1인가구의 미혼여성은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였지만 남편 등 다른 생계부양자와 경제적 기반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고용 조건은 이들의 경제적 취약성을 강화시킨다. 이처럼 미혼남녀의 소득, 고용형태 등의 경제적 상황을 분석하여 경제적 위험이 어떻게 저출산의 사회적 맥락을 강화시키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1. 미혼남녀의 가구 동거형태별 경제적 차이

〈표 4-14〉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홀로 거주하는 미혼 1인가구의 성비 및 취업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취업상황에 있어, 1인가구 남성은 62.50%, 여성은 66.67%의 취업률을 나타내어 여성의 취업률이 미미한 수준에서 남성보다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임대 등의 이유로 졸업기간이 지연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 좀 더 일찍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된다.

〈표 4-14〉 부모로부터 독립한 1인가구 미혼 응답자의 취업여부

(단위: 명, %)

유형	취업여부		합계
	취업	미취업	
미혼남성	30	18	48
	62.50%	37.5%	100.00%
미혼여성	18	9	27
	66.67%	33.33%	100.00%
합계	48	27	75
	64.00%	36.00%	100.00%

〈표 4-15〉는 부모와 동거 중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취업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부모와 동거중인 미혼자의 경우 부모로부터 독립한 1인가구에 비해 미취업 상태인 경우가 2/3 가량을 차지하였다. 취업률은 남성이 38.02%, 여성이 41.77%로 여성의 취업률이 더 높았다. 이는 앞서 설명하였던 것처럼 여성이 남성보다 더 어린연령에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이 가능한 반면, 1인가구로의 독립이 비교적 용이한 남성과 달리 기혼 전까지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15〉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응답자의 취업 여부

(단위: 명, %)

유형	취업여부		합계
	취업	미취업	
미혼남성	46	75	121
	38.02%	61.98%	100.00%
미혼여성	33	63	96
	41.77%	65.63%	100.00%
합계	79	138	217
	36.41%	63.59%	100.00%

〈표 4-16〉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1인가구 미혼자들을 대상으로 가구소득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남성은 64.58%, 여성은 70.37%가 하층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가계 내 생계부양자가 1인이고 사회초년생으로 소득

역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녀의 소득수준 격차가 미미한 수준에서 나타났는데, 여성 1인가구의 경우 남성 1인가구보다 하층을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표 4-16〉 부모로부터 독립한 1인가구 미혼 응답자의 가구소득

(단위: 명, %)

유형	가구소득			합계
	상층	중층	하층	
미혼남성	6	11	31	48
	12.5%	22.92%	64.58%	100.00%
미혼여성	3	5	19	27
	11.11%	18.52%	70.37%	100.00%
합계	9	16	50	75
	12.00%	21.33%	66.67%	100.00%

〈표 4-17〉은 부모와 동거 중인 미혼자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수준을 분류하였다. 1인가구와 달리 상, 중, 하가 고르게 분포하며 부모가구의 경제수준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7〉 부모와 동거중인 미혼 응답자의 가구소득

(단위: 명, %)

유형	가구소득			합계
	상층	중층	하층	
미혼남성	47	39	35	121
	38.84%	32.23%	28.93%	100.00%
미혼여성	29	42	25	96
	30.21%	43.75%	26.04%	100.00%
합계	76	81	60	217
	35.02%	37.33%	27.65%	100.00%

2. 미혼남녀의 경제활동 현황

〈표 4-18〉은 경제활동에 종사 중인 미혼자가 어떠한 고용상의 지위와 노동조건 아래 놓여있는지 기혼자 집단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경제활동에 종사 중인 미혼자의 경우 기혼자에 비해 상용직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임시직/일용직은 남성 미혼자에 한해 좀 더 높은 수준을 차지하였다. 반면 기혼자의 경우 자영업/사업주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높았다. 전일제 여부를 중심으로 미혼자와 기혼자의 경제활동을 비교하였을 경우, 두 집단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미혼 여성의 경우 기혼 여성보다 좀 더 전일제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가족돌봄의 부담이 부재하는 데에 따르는 노동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나타냈다. 고용소득에서는 남녀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미혼남성은 200-299만원에서 44.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미혼여성은 100-199만원으로 나타나 미혼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취약한 고용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미혼여성의 낮은 소득은 미혼여성이 결혼하지 않고 1인 가구의 생활을 지속할 경우 더 많은 경제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기혼자의 경우 남성의 41.61%가 300만원 이상의 높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반면, 여성은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벌어들일 경우가 38.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러한 남녀 간 소득격차가 기혼상태에서 점차 더 벌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8〉 미혼 및 기혼 응답자의 경제활동 현황

(단위: 명, %)

유형		경제활동 중인 미혼응답자			경제활동 중인 기혼응답자		
		미혼남성	미혼여성	합계	기혼남성	기혼여성	합계
고용상의 지위	상용직	31	27	58	139	104	243
		68.89%	81.82%	74.36%	42.90%	34.10%	38.63%

〈표 4-18〉 계속

(단위: 명, %)

유형		경제활동 중인 미혼응답자			경제활동 중인 기혼응답자		
		미혼남성	미혼여성	합계	기혼남성	기혼여성	합계
고용상의 지위 (계속)	임시직/일용직	18	8	26	41	59	100
		24.45%	16.00%	20.64%	12.65%	19.34%	15.90%
	자영업/사업주	10	5	15	144	142	286
		13.16%	10.00%	11.90%	44.44%	46.56%	45.47%
전일제 여부	시간제	11	7	18	45	81	126
		14.47%	14.00%	14.29%	13.89%	26.56%	20.03%
	전일제	65	43	108	279	224	503
		85.53%	86.00%	85.71%	86.11%	73.44%	79.97%
고용소득	100만원 미만	5	2	7	38	118	156
		6.58%	4.00%	5.56%	11.8%	38.82%	24.92%
	100~199만원	21	25	46	69	106	175
		27.63%	50.00%	36.51%	21.43%	34.87%	27.96%
	200~299만원	34	19	53	81	43	124
		44.74%	38.00%	42.06%	25.16%	14.14%	19.81%
	300만원 이상	16	4	20	134	37	171
		21.05%	8.00%	15.87%	41.61%	12.17%	27.32%
합계		76	50	126	322	304	626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19〉는 미혼 1인가구의 고용형태를 남녀별로 나누어 집계한 것이다. 상용직인 경우가 가장 우세하였으며, 무직상태인 경우도 남성이 37.50%, 여성이 33.33%로 나타나 청년 1인가구의 상당부분에서 1인가구로의 독립이 반드시 경제적 독립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나타냈다.

〈표 4-19〉 미혼 1인가구의 고용형태

(단위: 명, %)

유형	상용직	임시직/일용직	자영업/사업주	무직	전체
미혼남성	17	8	5	18	48
	35.42%	16.67%	10.42%	37.50%	100.00%
미혼여성	11	5	2	9	27
	40.74%	18.52%	7.41%	33.33%	100.00%

〈표 4-19〉 계속

(단위: 명, %)

유형	상용직	임시직/일용직	자영업/사업주	무직	전체
전체	28	13	7	27	75
	37.33%	17.33%	9.33%	36.00%	100.00%

제3절 미혼여성의 사회적 위험

1인가구의 수가 증가하면서 가족, 이웃, 사회와의 관계에서 고립되는 개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동시에 공동체의 유대감을 저해시키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미혼 1인가구를 대상으로 미혼여성은 미혼남성과 다른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지 사회적 연결망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미혼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의 유형

〈표 4-20〉은 미혼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조직이나 모임이 무엇인지 성별로 나타낸 것이다. 남성은 많은 수가 동창회(13명), 여가모임(12명), 종교집단(8명)에 해당되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임이 없는 경우도 12명이 해당되어 사회적 유대관계나 소속집단 활동을 하지 않는 1인가구도 존재하였다. 여성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남성과 여성 간의 편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정치모임, 사회봉사 클럽 등 공공활동의 경우 응답률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유대관계의 활동유형이 주로 친목, 종교 등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20〉 미혼 1인가구 응답자가 지난 1년간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조직/모임

(단위: 명, %)

유형	미혼남성	미혼여성	합계
정치모임	0	1	1
	0.00%	3.70%	1.33%
사회봉사 클럽	1	0	1
	2.08%	0.00%	1.33%
종교집단	8	8	16
	16.67%	29.63%	21.33%
동창회	13	6	19
	27.08%	22.22%	25.33%
여가모임	12	7	19
	25.00%	25.93%	25.33%
노동조합	1	0	1
	2.08%	0.00%	1.33%
직업/직능 단체	1	2	3
	2.08%	7.41%	4.00%
없음	12	3	15
	25.00%	11.11%	20.00%
합계	48	27	75
	100.00%	100.00%	100.00%

2. 미혼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

〈표 4-21〉은 가족 및 이웃과의 사회적 유대빈도에 있어서 미혼 1인가구와 미혼 비1인가구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비1인가구의 미혼자와 달리 1인가구의 미혼자 경우, 가족과의 유대빈도가 낮은 편이었고 0명인 경우도 상당 부분 존재하였다. 이웃과의 유대관계에 있어서는 남녀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1인가구와 비1인가구 모두 여성의 유대빈도가 남성보다 활발하였고, 특히 1인가구에서 이러한 남녀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표 4-21〉 미혼 응답자가 가족/이웃 간 평소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는 빈도

(단위: 명, %)

유대빈도 1		1인 가구			비1인 가구		
		미혼남성	미혼여성	전체	미혼남성	미혼여성	전체
가족	0명	11	2	13	21	9	30
		22.92%	7.41%	17.33%	17.36%	9.38%	13.82%
	1-2명	26	17	43	58	56	114
		54.17%	62.96%	57.33%	47.93%	58.33%	52.53%
	3명 이상	11	8	19	42	31	73
		22.92%	29.63%	25.33%	34.71%	32.29%	33.64%
이웃 (가족, 친척 제외)	0명	6	1	7	5	2	7
		12.50%	3.70%	9.33%	4.13%	2.08%	3.23%
	1-9명	35	14	49	91	78	169
		72.92%	51.85%	65.33%	75.21%	81.25%	77.88%
	10명 이상	7	12	19	25	16	41
		14.58%	44.44%	25.33%	20.66%	16.67%	18.89%
전체		48	27	75	121	96	217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22〉는 친지 외 사람들과 식사와 음주를 어느 정도로 갖는지 사회적 유대의 빈도에 대해 1인가구와 비1인가구를 비교한 것이다. 이 경우에서도 1인가구는 비1인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사회적 빈도가 낮은 편으로, 유대관계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일정 비율 존재하였고, 자주하는 경우도 비1인가구의 미혼자보다 남녀 모두 저조하게 나타났다. 1인가구 내에서 미미한 차이였으나,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유대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미혼 응답자의 친지 외 사람들과 식사 혹은 음주 여부

(단위: 명, %)

유대빈도 2	1인가구			비1인가구		
	미혼남성	미혼여성	전체	미혼남성	미혼여성	전체
전혀 안 한다	5	2	7	9	6	15
	10.42%	7.41%	9.33%	7.44%	6.25%	6.91%
가끔 한다	27	15	42	61	50	111
	56.25%	55.56%	56.00%	50.41%	52.08%	51.15%
자주 한다	16	10	26	51	40	91
	33.33%	37.04%	34.67%	42.15%	41.67%	41.94%
합계	48	27	75	121	96	217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23〉은 평소 인사하는 이웃의 수를 1인가구와 비1인가구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1인가구 응답자는 비1인가구 응답자에 비해 사회적 유대관계의 수가 낮았으며, 인사하는 이웃의 수가 0명인 경우도 상당부분 존재하였고 대부분 1-4명 내에 그쳤다. 반면 비1인가구의 경우 1인가구보다 이웃과의 더 활발한 접촉을 보였는데, 5명 이상 인사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혼 1인가구일 경우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을 경험하기가 더 쉽고 거주공간의 공동체로부터 고립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웃과의 교류에서는 1인가구와 비1인가구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더 빈번하게 이웃과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미혼 응답자의 인사하는 이웃 수

(단위: 명, %)

유대빈도 3	1인 가구			비1인 가구		
	미혼남성	미혼여성	전체	미혼남성	미혼여성	전체
0명	13	7	20	24	19	43
	27.08%	25.93%	26.67%	19.83%	19.79%	19.82%
1-4명	21	13	34	53	58	111
	43.75%	48.15%	45.33%	43.80%	60.42%	51.15%
5명 이상	14	7	21	44	19	63
	29.17%	25.93%	28.00%	36.36%	19.79%	29.03%
합계	48	27	75	121	96	217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24〉는 문제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하는 경로를 1인가구와 비1인가구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는 1인가구와 비1인가구 사이의 큰 편차를 발견할 수 있는데, 1인가구의 경우 친구, 전문직업인 혹은 기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았고 누구에게도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 반면, 비1인가구 미혼자의 경우 대부분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1인가구에 비해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비중은 적었

다. 이는 사회적 유대관계로부터 고립된 1인가구의 미혼자가 위험에 직면할 때 적절한 도움경로를 지원받기 어렵다는 점과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표 4-24〉 미혼 응답자의 위험 발생 시 도움 요청하는 경로

(단위: 명, %)

유대유형	미혼 1인가구					미혼 비1인가구				
	감정적, 심리적 문제	건강 문제	가사 및 돌봄 문제	금전적 문제	긴급 혹은 재해문제	감정적, 심리적 문제	건강 문제	가사 및 돌봄 문제	금전적 문제	긴급 혹은 재해문제
가족	12 16.00%	26 34.67%	20 26.67%	30 40.00%	25 33.33%	55 25.35%	152 70.05%	133 61.29%	131 60.37%	117 53.92%
친척	4 5.33%	5 6.67%	6 8.00%	9 12.00%	6 8.00%	4 1.84%	1 0.46%	5 2.30%	4 1.84%	5 2.30%
직장동료	2 2.67%	2 2.67%	0 0.00%	2 2.67%	2 2.67%	1 0.46%	1 0.46%	0 0.00%	0 0.00%	2 0.92%
이웃	2 2.67%	0 0.00%	0 0.00%	1 1.33%	0 0.00%	1 0.46%	0 0.00%	16 0.46%	0 0.00%	1 0.46%
친구	41 54.67%	13 17.33%	11 14.67%	12 16.00%	7 9.33%	137 63.13%	28 12.90%	16 7.37%	47 21.66%	21 9.68%
전문직업인 혹은 기관	1 1.33%	20 26.67%	1 1.33%	3 4.00%	4 5.33%	2 0.92%	25 11.52%	0 0.00%	2 0.92%	15 6.91%
누구에도 요청하지 않음	10 13.33%	7 9.33%	19 25.33%	12 16.00%	11 14.67%	15 6.91%	4 1.84%	20 9.22%	21 9.68%	11 5.07%
경험 없음	3 4.00%	2 2.67%	18 24.00%	6 8.00%	20 26.67%	2 0.92%	6 2.76%	42 19.35%	12 5.53%	45 20.74%
전체	75 100.0%	75 100.0%	75 100.0%	75 100.0%	75 100.0%	217 100.0%	217 100.0%	217 100.0%	217 100.0%	217 100.0%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본 장은 2012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설문지를 중심으로 미혼남녀가 경험하는 다양한 위험군을 가족적 위험, 경제적 위험, 사회적 위험으로 나누고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적 위험에서 홀로 거주하는 미혼 1인가구는 전체 약 5%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았고, 부모와의 동거여부에서도 남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이는 응답자군에서 미혼여성이 미혼남성보다 부모로부터 독립된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가 더 높다는 점을 나타낸다. 가족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미혼여성이 미혼남성보다 좀 더 개방적인 결혼 및 이혼관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상층남녀보다는 중·하층의 남녀에게서 이러한 편차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 역시 미혼여성은 미혼남성보다 자녀에 대해 높은 부담감을 갖고 있었으며, 자녀의 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성역할 인식에 있어서는 미혼여성이 미혼남성보다 부모역할과 생계활동에서 성평등한 태도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를 긍정하고 성중립적인 생계부양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미혼남녀 사이에서 가족규범에 있어 인식의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미혼남성이 보수적인 가족관과 성역할의 가치를 지지하는 것과 달리 미혼여성은 결혼과 자녀양육에 따르는 성 불평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성평등한 부부 관계를 지향하고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청년층 사이에서 점차 가족규범에 대한 남녀인식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다. 미혼여성들은 교육, 취업 등 그들의 사회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수적인 가족제도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고 이는 결혼, 자녀양육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이어진다.

한편, 경제적 위험에 있어서는 좀 더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본수는 적으나 1인가구의 미혼여성은 미혼남성에 비해 취업률은 높은 반면 가계소득은 적은 편이었다. 경제활동에 종사 중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할 경우, 미혼여성은 미혼남성에 비해 상용직 등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지만 임금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여성의 고용상의 지위와 임금수준은 가족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는 기혼상태가 되면서부터 임금하향세

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분석에서는 미혼남녀 사이에서도 임금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특히 1인가구의 미혼여성일 경우 낮은 가계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에 더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위험에서는 미혼여성이 미혼남성보다 유대빈도나 유대강도가 더 높다는 점이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비1인가구의 응답자보다 1인가구의 응답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1인가구의 미혼여성들은 상대적으로 1인가구의 미혼남성보다 더 활발하게 가족, 친구, 이웃 등과 교류하는 편이었다. 반면 부모 등과 동거하는 비1인가구일 경우, 미혼남성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혼여성보다 더 높아 가구구성의 형태에 따른 남녀의 차이가 나타났다. 1인가구의 미혼 응답자는 위험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미혼남녀가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위험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안전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5장

기혼여성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제1절 사회계층별 기혼여성의 가족적 위험

제2절 사회계층별 기혼여성의 경제적 위험

제3절 기혼남녀의 사회적 위험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5

기혼여성의 위험요인과 << 대응방안

이 장에서는 기혼여성의 가족적, 경제적 및 사회적 위험을 살펴보고 특히 여성의 출산경력이나 자녀의 양육단계 등 생애사적인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그 위험군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자료는 4장과 마찬가지로 2012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 기본으로 하였고 기혼남녀의 집단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계층별 차이(상층, 중층, 하층)와 연령별 차이(세대)와 더불어, 마지막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양육단계의 차이(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만 7-12세, 만 13-18세, 만 19세 이상 성인자녀), 출산경력의 차이(출산한 자녀의 수), 워킹맘 여부 등 가족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제1절 사회계층별 기혼여성의 가족적 위험

기혼여성은 가사 및 돌봄노동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에게서도 가족에 대한 책임은 상당 부분 여성의 역할로 남겨져 있다. 일하는 어머니는 유급노동과 자녀육아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일-가족의 영역 간 충돌과 부모역할의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수정·김은지, 2007; 이재림·손서희, 2013). 또한 기혼여성은 기혼 남성에 비해 자녀의 육아단계 이행이나 자녀의 수, 사회계층 등 가족적 맥락에 기인하는 집단별 특성에 따라 경험하는 성별 불평등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의 결혼, 자녀 등 가족제도에 대한 가

치관과 일-가족의 영역에서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여 기혼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가족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1. 기혼남녀의 가구현황

먼저 2012년 사회종합조사에서 조사대상으로 선별된 기혼남녀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1〉은 기혼자를 대상으로 배우자와의 동거기간에 따른 응답자의 분포를 성별 및 사회계층별로 나타내고 있다.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분포는 동거기간에 따라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사회계층에 따른 분포도는 동거기간이 길어질수록 하층의 비율이 높아 응답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계소득 역시 낮아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 현재 배우자와 동거기간

(단위: 명, %)

동거 기간	성별			사회계층별			
	기혼남성	기혼여성	전체	상층	중층	하층	전체
10년 미만	57	68	125	38	48	39	125
	45.24%	54.40%	100.00%	30.40%	38.40%	31.20%	100.00%
10~19년	59	93	152	56	64	31	151
	38.82%	61.18%	100.00%	37.09%	42.38%	20.53%	100.00%
20~39년	148	160	308	113	80	114	307
	48.05%	51.95%	100.00%	36.81%	26.06%	37.13%	100.00%
40년 이상	103	93	196	12	21	161	194
	52.55%	47.45%	100.00%	6.19%	10.82%	82.99%	100.00%
전체	367	414	781	219	213	345	777
	46.99%	53.01%	100.00%	28.19%	27.41%	44.40%	100.00%

한편 출산경력의 분포를 살펴보면, 기혼남녀의 자녀수는 대체로 남녀 응답자 간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계층별 분포를 살펴보면 자녀가 없을 경우 하층에 속할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자녀의 수가 증가

할수록 응답자의 가계소득 수준 역시 높아지면서 상층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2〉 출산경력

(단위: 명, %)

출산 경력	성별			사회계층별			
	기혼남성	기혼여성	전체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자녀없음	137	235	372	24	31	315	370
	36.83%	63.17%	100.00%	6.49%	8.38%	85.14%	100.00%
1명	98	143	241	53	61	126	240
	40.66%	59.34%	100.00%	22.08%	25.42%	52.50%	100.00%
2명	153	208	361	130	117	113	360
	42.38%	57.62%	100.00%	36.11%	32.50%	31.39%	100.00%
3명이상	36	45	81	25	26	30	81
	44.44%	55.56%	100.00%	30.86%	32.10%	37.04%	100.00%
전체	424	631	1,055	232	235	584	1,051
	40.19%	59.81%	100.00%	22.07%	22.36%	55.57%	100.00%

〈표 5-3〉은 자녀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마지막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육아단계별 기혼응답자의 분포를 성별 및 계층별로 집계한 것이다. 남녀 간 분포에 있어서는 대체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으나, 만 7-12세의 아동을 양육 중인 응답자의 경우 기혼여성의 비율이 62.26%, 기혼남성의 비율이 37.74%로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사회계층별 차이를 살펴보면, 만 7-12세의 아동을 양육 중일 때 응답자의 가구경제수준이 대체로 높은 반면, 성인자녀가 있을 경우 하층의 비중이 높아지는 특성을 나타내어 자녀를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시기에 평균적인 가구경제수준이 증가하다가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에서부터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경험하며 계층이 하향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3〉 마지막 자녀의 연령별 구분

(단위: 명, %)

마지막 자녀의 연령	성별			사회계층별			
	기혼남성	기혼여성	전체	상층	중층	하층	전체
미취학아동	48	70	118	37	42	39	118
	40.68%	59.32%	100.00%	31.36%	35.59%	33.05%	100.00%
만7~12세	40	66	106	38	46	21	105
	37.74%	62.26%	100.00%	36.19%	43.81%	20.00%	100.00%
만13~18세	65	72	137	48	44	44	136
	47.45%	52.55%	100.00%	35.29%	32.35%	32.35%	100.00%
성인 자녀	134	188	322	85	72	165	322
	41.61%	58.39%	100.00%	26.40%	22.36%	51.24%	100.00%
전체	287	396	683	208	204	269	681
	42.02%	57.98%	100.00%	30.54%	29.96%	39.50%	100.00%

2. 기혼남녀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아래의 〈표 5-4〉는 사회계층별 결혼 및 이혼에 대한 기혼남녀의 인식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은 결혼 및 이혼관에 있어서 평균값의 큰 편차를 나타내지 않아 이에 대한 성별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사회계층별 결혼 및 이혼관의 차이에 있어서 기혼남성 사이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은 반면에, 기혼여성들의 경우에는 가구경제 수준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존재했다.

계층별 효과를 살펴보면, 상층여성은 좀 더 개방적인 가족관을 나타내는 반면, 하층여성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가족관을 지지하는 편이었고 결혼에 대한 규범적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먼저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서 하층여성은 중상층 여성에 비해 결혼생활이 개인에게 더 높은 행복감을 보장한다고 인식하였으며 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왔다. 또한 하층여성은 세 집단 중 결혼의 의미를 자녀양육의 가치와 연결하는 경향이 높았고 결혼할 의사가 없이 동거하는 것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면서 보수적인 결혼관을 나타냈다. 이혼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

서도 사회계층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상층여성은 비교적 이혼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취하는 반면, 하층여성은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표 5-4〉 기혼남녀의 결혼 및 이혼에 대한 인식(사회계층별 차이)

(단위: 점, 명)

문항		기혼남성				ANOVA (F값)	기혼여성				ANOVA (F값)
		상층	중층	하층			상층	중층	하층		
1)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대체로 더 행복하다	평균	3.66	3.99	3.78		2.62	3.54	3.30	3.74		8.29***
	표준오차	1.09	1.01	1.06			1.02	1.04	1.15		
	사례수	110	103	232			134	145	374		
2)자녀를 원하는 사람은 결혼해야 한다	평균	4.36	4.34	4.40		0.17	4.23	4.02	4.34		6.02**
	표준오차	0.85	0.88	0.82			0.89	1.09	0.90		
	사례수	110	103	235			134	144	376		
3)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평균	2.39	2.28	2.06		3.29	2.25	2.46	2.05		6.69**
	표준오차	1.25	1.19	1.13			1.17	1.20	1.15		
	사례수	110	103	235			134	145	373		
4)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평균	2.75	2.49	2.62		0.97	2.98	2.72	2.43		9.22***
	표준오차	1.37	1.23	1.42			1.32	1.19	1.36		
	사례수	110	103	232			134	144	374		

* <0.05, ** <0.01, *** <0.001

주 : 매우 반대(1) ~ 매우 찬성(5)

기혼남녀는 자녀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5〉와 〈표 5-6〉은 배우자의 동거기간에 따른 자녀에 대한 응답자의 가치관을 남녀별로 비교한 것이다.

먼저 〈표 5-5〉에서 기혼남성은 배우자와의 결혼기간이 길수록 자녀에 대해 더 긍정적인 가치관이 나타났다. 자녀의 존재가 부모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문항에 대해 동거기간이 20-39년일 경우 2.89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부모의 자유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집단은 10년 미만의 젊은 기혼남성으로 3.53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기혼남성들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10년 미만에서 높게 나타나다가 20-39년 사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40년 이상부터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자녀의 존재로 인한 경력기회의 제약”에 대해서도 앞선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즉, 기혼 후 20-39년 사이의 집단에서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참여활동의 제약을 가장 적게 느끼고 있으며, 반면 젊은 커플과 노년 커플에서는 높은 부담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U자형 패턴은 전체 자녀의 경제적 부담감을 총점으로 척도화하였을 때, 배우자 동거기간집단별로 유의한 평균차가 나타났다.

한편, 기혼여성에서는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여 4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지속 중인 집단일 경우 가장 낮았다. 반면 부담이 가장 높은 시기는 10년 미만이나 10-19년의 시기로, 주로 자녀양육에 집중할 시기로 나타났다. 전체 총점을 척도화했을 때,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20년 미만까지는 높게 지속되다가 20년 이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는 점을 볼 수 있다.

〈표 5-5〉 기혼남녀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현재 배우자와의 동거기간별 차이)

(단위: 점, 명)

문항		기혼남성				ANOVA (F값)
		10년 미만	10-19년	20-39년	40년 이상	
1)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자유는 너무 많이 제약된다	평균	3.53	3.08	2.89	3.34	5.42**
	표준오차	1.04	1.09	1.24	1.20	
	사례수	57	59	148	102	
2)자녀는 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이다	평균	3.35	3.27	3.15	3.34	0.71
	표준오차	1.11	1.13	1.22	1.18	
	사례수	57	59	148	103	
3)자녀가 있으면 부모 양쪽 혹은 어느 한쪽의 취업 및 경력기회가 제약된다	평균	3.42	3.03	2.90	3.24	3.43*
	표준오차	1.10	1.23	1.16	1.18	
	사례수	57	59	147	100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총점)	평균	3.43	3.13	2.98	3.20	4.61**
	표준오차	0.80	0.86	0.94	0.97	
	사례수	57	59	147	99	

〈표 5-5〉 계속

(단위: 점, 명)

문항		기혼여성				ANOVA (F값)
		10년 미만	10-19년	20-39년	40년 이상	
1)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자유는 너무 많이 제약된다	평균	3.57	3.61	3.19	3.13	5.12**
	표준오차	1.04	0.90	1.15	1.18	
	사례수	68	93	160	92	
2)자녀는 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이다	평균	3.25	3.54	3.19	3.13	2.32
	표준오차	1.10	1.06	1.23	1.22	
	사례수	68	93	160	92	
3)자녀가 있으면 부모 양쪽 혹은 어느 한쪽의 취업 및 경력기회가 제약된다	평균	3.65	3.60	3.19	3.23	4.90**
	표준오차	1.08	0.97	1.11	1.17	
	사례수	68	93	160	88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총점)	평균	3.49	3.58	3.19	3.16	6.16***
	표준오차	0.85	0.75	0.87	0.93	
	사례수	68	93	160	88	

* <0.05, ** <0.01, *** <0.001

주 :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음, 매우 반대(1) ~ 매우 찬성(5)

현재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와 동거 중인 경우만 해당

한편, 〈표 5-6〉은 동거기간별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나타낸다. 기혼남성은 “자녀가 있으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다”라는 문항에 대해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 동거기간이 긴 기혼남성일수록 젊은 기혼남성보다 자녀에 대한 가치를 더 크게 지지하고 있었다. 성인자녀를 노부모의 중요한 경제적 원천으로 생각하는지의 문항에서도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지도가 높아져 혼인기간의 지속에 따른 자녀가치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 총점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으며, 특히 동거기간이 40년 이상으로 길게 지속될수록 평균이 4점 이상으로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다.

한편, 기혼여성의 경우 남성과 다른 경향이 일부 발견되었다. 10년 미만의 짧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높았으나 10-19년 사이에서 가장 낮아지다가 그 이후 혼인의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는 자녀양육에 대한 정서적 행복감,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위 상승의 기대감, 성인자녀의 도움에 대한 기대감의 세 문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경향이었으며 전체 정서적 가치의 총점에 있어서도 같은 형태가 나타났다. 이는 실제 자녀양육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10-19년 사이의 기혼여성들이 자녀양육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심리적 피로감을 경험하면서 자녀의 가치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5-6〉 기혼남녀의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현재 배우자와의 동거기간별 차이)

(단위: 점, 명)

문항		기혼남성					ANOVA (F값)
		10년 미만	10-19년	20-39년	40년 이상		
1)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평균	4.39	4.27	4.43	4.54	1.80	
	표준오차	0.73	0.89	0.72	0.61		
	사례수	57	59	148	102		
2)자녀가 있으면 사람들의 사회적지위가 올라간다	평균	2.98	3.20	3.07	3.63	7.38***	
	표준오차	0.97	1.06	1.07	0.95		
	사례수	57	59	148	100		
3)성인자녀는 노부모에게 도움의 중요한 원천이다	평균	3.42	3.25	3.39	3.83	4.21**	
	표준오차	1.19	1.20	1.20	1.05		
	사례수	57	59	148	102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총점)	평균	3.60	3.58	3.63	4.01	8.06***	
	표준오차	0.59	0.77	0.70	0.65		
	사례수	57	59	148	99		

문항		기혼여성					ANOVA (F값)
		10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40년 미만	50년 이상	
1)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평균	4.19	4.02	4.47	4.51	4.68	8.27***
	표준오차	0.78	0.94	0.69	0.66	0.67	
	사례수	68	93	160	55	37	
2)자녀가 있으면 사람들의 사회적지위가 올라간다	평균	2.87	2.74	3.15	3.75	3.97	15.69***
	표준오차	0.85	0.89	1.16	1.02	0.91	
	사례수	67	92	156	55	36	
3)성인자녀는 노부모에게 도움의 중요한 원천이다	평균	3.12	3.12	3.42	3.57	4.24	6.91***
	표준오차	1.08	1.18	1.28	1.25	1.12	
	사례수	67	92	159	54	37	

〈표 5-6〉 계속

(단위: 점, 명)

문항		기혼여성					ANOVA (F값)
		10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40년 미만	50년 이상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총점)	평균	3.39	3.29	3.67	3.93	4.30	17.69***
	표준오차	0.55	0.68	0.78	0.72	0.71	
	사례수	67	92	156	54	36	

* <0.05, ** <0.01, *** <0.001

주 :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높음, 매우 반대(1) ~ 매우 찬성(5)
현재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와 동거 중인 경우만 해당

〈표 5-7〉은 기혼남녀의 출산경력에 따라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측정하고 있다. 기혼남성은 집단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혼여성은 일부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자녀는 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이다”에 대해 많은 자녀를 출산한 여성일수록 지지하지 않아 다자녀의 출산경력은 기혼여성의 자녀에 대한 부담감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음을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의 취업 및 경력기회를 제약한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5-7〉 기혼남녀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출산경력별 차이)

(단위: 점, 명)

문항		기혼남성				ANOVA (F값)
		자녀없음	1명	2명	3명이상	
1)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자유는 너무 많이 제약된다	평균	3.39	3.17	3.07	3.20	0.81
	표준오차	1.20	1.18	1.19	1.19	
	사례수	28	60	204	159	
2)자녀는 부모에게 재정적 부담 이다	평균	3.43	3.08	3.16	3.36	1.48
	표준오차	1.03	1.03	1.21	1.19	
	사례수	28	60	204	160	
3)자녀가 있으면 부모 양쪽 혹은 어느 한쪽의 취업 및 경력 기회가 제약된다	평균	3.32	3.18	2.97	3.19	1.6
	표준오차	1.09	1.03	1.19	1.19	
	사례수	28	60	204	156	

〈표 5-7〉 계속

(단위: 점, 명)

문항		기혼남성				ANOVA (F값)
		자녀없음	1명	2명	3명이상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총점)	평균	3.80	3.14	3.07	3.26	1.88
	표준오차	0.83	0.88	0.90	0.94	
	사례수	28	60	204	155	
문항		기혼여성				ANOVA (F값)
		자녀없음	1명	2명	3명이상	
1)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자유는 너무 많이 제약된다	평균	3.40	3.40	3.30	3.32	0.2
	표준오차	1.00	1.18	1.10	1.14	
	사례수	25	85	261	282	
2)자녀는 부모에게 재정적 부담 이다	평균	3.48	3.21	3.35	3.10	2.40*
	표준오차	0.82	1.26	1.18	1.23	
	사례수	25	85	263	282	
3)자녀가 있으면 부모 양쪽 혹은 어느 한쪽의 취업 및 경력 기회가 제약된다	평균	3.76	3.48	3.29	3.21	2.82*
	표준오차	0.60	1.05	1.13	1.14	
	사례수	25	84	263	278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총점)	평균	3.55	3.53	3.32	3.21	1.68
	표준오차	0.51	0.92	0.90	0.90	
	사례수	25	84	261	277	

* <0.05, ** <0.01, *** <0.001

주 :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음: 매우 반대(1) ~ 매우 찬성(5)

〈표 5-8〉은 출산경력별로 기혼남녀의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는 기혼남성과 기혼여성 모두에게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는 문항이 다수 존재하였다. 기혼남성과 기혼여성 모두 배우자의 출산경험이 많을수록 전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역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산경력에 따른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의 증가는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3명 이상의 다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일 경우 자녀에 대한 지지도가 뚜렷하게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다자녀의 출산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표 5-8〉 기혼남녀의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출산경력별 차이)

(단위: 점, 명)

문항		기혼남성				
		자녀없음	1명	2명	3명 이상	ANOVA (F값)
1)자녀의 성장을 지켜 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평균	3.96	4.40	4.45	4.44	3.79*
	표준오차	0.84	0.83	0.68	0.72	
	사례수	28	60	204	159	
2)자녀가 있으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다	평균	2.96	2.98	3.12	3.44	4.32**
	표준오차	1.07	0.93	1.11	1.03	
	사례수	28	60	203	157	
3)성인자녀는 노부모에게 도움의 중요한 원천이다	평균	3.82	3.35	3.31	3.70	4.33**
	표준오차	1.16	1.13	1.24	1.12	
	사례수	28	60	203	159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총점)	평균	3.58	3.58	3.63	3.86	4.12**
	표준오차	0.81	0.72	0.70	0.73	
	사례수	28	60	202	156	
문항		기혼여성				
		자녀없음	1명	2명	3명 이상	ANOVA (F값)
1)자녀의 성장을 지켜 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평균	3.64	4.31	4.35	4.55	13.3***
	표준오차	1.04	0.86	0.71	0.70	
	사례수	25	85	263	283	
2)자녀가 있으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다	평균	3.08	3.08	3.06	3.54	9.87***
	표준오차	0.83	1.13	1.09	1.07	
	사례수	24	83	257	276	
3)성인자녀는 노부모에게 도움의 중요한 원천이다	평균	3.12	3.04	3.33	3.78	11.72***
	표준오차	0.97	1.31	1.22	1.17	
	사례수	25	83	260	282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총점)	평균	3.25	3.48	3.58	3.95	18.53***
	표준오차	0.67	0.79	0.74	0.73	
	사례수	24	82	256	275	

* <0.05, ** <0.01, *** <0.001

주 :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높음: 매우 반대(1) ~ 매우 찬성(5)

3. 기혼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

〈표 5-9〉는 가장 이상적인 유형의 성별분업 형태에 대하여 사회계층별로 기혼남녀의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남성의 경우 주부 어머니-전일제 아버지를 가장 이상적인 가족유형으로 보는 응답자의 비율이 과반수 가

량을 차지하며 가장 높았고, 사회계층간 차이에 있어서는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층보다는 상층과 하층남성에게서 이러한 선호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시간제 어머니-전일제 아버지의 유형도 전체 남성 중 약 30-40% 내외를 보였고 특히 상층남성일 경우 이러한 형태를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한편 기혼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사회계층별 차이가 좀 더 뚜렷하게 형성되었는데, 상층 및 중층의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시간제 어머니-전일제 아버지를 가장 이상적인 가족구조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하층 여성의 경우 주부 어머니-전일제 아버지를 가장 이상적인 가구형태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상층여성은 그 외 다양한 형태의 가족분업구조에서도 다른 계층의 여성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이면서 좀 더 개방적인 가족관을 나타냈다.

〈표 5-9〉 기혼남녀의 가장 이상적인 유형의 성별분업(사회계층별 차이)

(단위: 명, %)

유형	기혼남성			
	상층	중층	하층	합계
1) 주부 어머니-전일제 아버지	54 49.09%	45 43.69%	122 51.69%	221 49.22%
2) 시간제 어머니-전일제 아버지	42 38.18%	39 37.86%	80 33.9%	161 35.86%
3) 전일제 어머니-전일제 아버지	11 10.00%	11 10.68%	21 8.90%	43 9.58%
4) 그 외 형태 (시간제 아버지, 주부 아버지 포함)	3 2.73%	8 7.77%	13 5.51%	24 5.35%
전체	110 100.00%	103 100.00%	236 100.00%	449 100.00%

〈표 5-9〉 계속

(단위: 명, %)

유형	기혼여성			
	상층	중층	하층	합계
1) 주부 어머니-전일제 아버지	46 34.07%	57 39.31%	187 49.73%	290 44.21%
2) 시간제 어머니-전일제 아버지	68 50.37%	76 52.41%	147 39.1%	291 44.36%
3) 전일제 어머니-전일제 아버지	11 8.15%	8 5.52%	28 7.45%	47 7.16%
4) 그 외 형태 (시간제 아버지, 주부 아버지 포함)	10 7.41%	4 2.76%	14 3.72%	28 4.27%
전체	135 100.00%	145 100.00%	376 100.00%	656 100.00%

반대로 〈표 5-10〉은 가장 나쁜 유형의 성별분업 구조에 대한 기혼남녀의 인식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기혼남성의 절대다수는 ‘주부 아버지-전일제 어머니’를 선택하였으며 특히 하층남성일 경우 이러한 인식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나쁜 유형의 성별분업 구조로는 ‘전일제 어머니-전일제 아버지’의 응답률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 하층보다는 상층남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도 남성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 ‘주부 아버지-전일제 어머니’를 가장 부정적인 형태의 분업구조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고 특히 하층여성에게서 이러한 응답률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전일제 어머니-전일제 아버지’로 하층여성보다는 상층여성의 응답률이 높아 기혼남성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기혼여성의 경우 기혼남성에 비해 ‘주부 아버지-전일제 어머니’를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좀 더 낮은 대신 ‘전일제 어머니-시간제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남성과 일부 차이를 보였다.

〈표 5-10〉 기혼남녀의 가장 나쁜 유형의 성별분업(사회계층별 차이)

(단위: 명, %)

유형	기혼남성			
	상층	중층	하층	합계
1) 주부 아버지-전일제 어머니	59 53.64%	58 56.31%	154 65.25%	271 60.36%
2) 전일제 어머니-전일제 아버지	34 30.91%	29 28.16%	58 24.58%	121 26.95%
3) 시간제 어머니-시간제 아버지	10 9.09%	7 6.80%	10 4.24%	27 6.01%
4) 그 외 형태(전일제 어머니-시간제 아버지, 주부 어머니, 시간제 어머니 포함)	7 6.36%	9 8.74%	14 5.93%	30 6.68%
전체	110 100.00%	103 100.00%	236 100.00%	449 100.00%
유형	기혼여성			
	상층	중층	하층	합계
1) 주부 아버지-전일제 어머니	64 47.41%	72 49.66%	220 58.51%	356 54.27%
2) 전일제 어머니-전일제 아버지	52 38.52%	53 36.55%	113 30.05%	218 33.23%
3) 시간제 어머니-시간제 아버지	6 4.44%	12 8.28%	25 6.65%	43 6.55%
4) 그 외 형태(전일제 어머니-시간제 아버지, 주부 어머니, 시간제 어머니 포함)	13 9.63%	8 5.52%	18 4.79%	39 5.95%
전체	135 100.00%	145 100.00%	376 100.00%	656 100.00%

제2절 사회계층별 기혼여성의 경제적 위험

기혼여성의 일-가족 양립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에 이르러 성 불평등의 주요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생애사적으로 변화를 보이는데,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M자형 분포 혹은 L자형 분포를 보인다. 이는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인 30대 중반의 기혼여성 사이에서 높은 경력단절이 일어나고 있다는 현상을 의미한다(민현주,

2011; 박효진·은선경, 2012).

일하는 어머니가 미취학 아동을 육아 중일 경우, 과도한 가사 및 돌봄 노동의 부담에 시달리게 되고 이는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동반함과 동시에 삶의 만족도 및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많은 기혼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출산 후 육아단계가 이행될수록 경력단절, 저임금 및 저숙련 노동으로 하향이동, 불안정한 고용의 비정규직, 파트타임 등 임시직으로의 이동 등 여러 가지 성 불평등에 시달리게 되는 반면, 기혼남성의 태도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으며 가사분담비율이나 육아참여도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절에서는 기혼남녀가 경험하는 일-가족 영역 간 충돌을 자녀의 양육단계나 출산경력, 사회계층별로 살펴보고 기혼여성의 경제적 위험을 야기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일하는 부모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인식

〈표 5-11〉은 경제활동에 참여 중인 부모를 대상으로 삶, 일, 가정에 대한 만족도를 자녀양육 단계별로 나누어 그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기혼남성은 전반적인 행복도에서 자녀의 육아단계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미취학 아동이 존재할 경우 삶에 대한 행복도가 가장 높았고 그 이후 자녀양육 단계가 진행되면서 점차 행복도가 하락하는 패턴을 나타냈다. 반면 기혼여성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만 12세 이상의 어린 자녀를 육아 중인 여성의 경우 같은 집단의 남성보다 낮은 행복도를 보이며 육아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나타냈다. 일의 대한 행복에서는 기혼남성과 기혼여성 모두 자녀의 육아단계 진행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

지 않았지만 대체로 남성은 육아단계가 올라갈수록 행복도가 증가하는 반면 여성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남성은 미취학 아동이 존재할 경우 가정생활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만 7-12세의 아동을 양육하는 시기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여성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자녀양육의 초기단계보다는 후기 및 종료되는 시점에서 평균적인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1〉 일하는 부모의 삶, 일, 가정에 대한 행복도(육아단계별 차이)

(단위: 점, 명)

문항		기혼남성				ANOVA (F값)
		미취학 아동	만 7-12세	만 13-18세	성인자녀	
전반적인 행복도	평균	5.57	5.11	5.07	4.87	4.44**
	표준오차	0.90	1.01	1.13	1.07	
	사례수	44	38	59	94	
일에 대한 행복도	평균	4.77	4.66	5.00	4.94	0.77
	표준오차	1.44	1.07	1.29	1.14	
	사례수	44	38	59	93	
가정생활에 대한 행복도	평균	5.61	5.03	5.31	5.11	3.21*
	표준오차	1.02	1.00	1.07	0.97	
	사례수	44	38	59	94	
문항		기혼여성				ANOVA (F값)
		미취학 아동	만 7-12세	만 13-18세	성인자녀	
전반적인 행복도	평균	5.00	4.79	5.14	4.94	0.79
	표준오차	1.36	0.78	1.05	1.22	
	사례수	28	38	56	94	
일에 대한 행복도	평균	4.96	4.63	4.78	4.77	0.43
	표준오차	1.23	1.28	1.23	1.09	
	사례수	28	38	55	93	
가정생활에 대한 행복도	평균	4.71	4.61	4.96	4.94	1.04
	표준오차	1.54	1.05	1.06	1.13	
	사례수	28	38	56	94	

* <0.05, ** <0.01, *** <0.001

기혼남녀는 가사 및 돌봄노동에서 큰 성별차이가 나타난다. <표 5-12>는 기혼남녀와 그 배우자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을 사회계층, 배우자 동거기간, 마지막 자녀의 연령, 출산경력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한 표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혼남성은 배우자 동거기간별로 가사노동시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체로 동거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사노동참여시간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반면 기혼여성은 동거기간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생애단계에 걸쳐 높은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배우자의 경우 10년 미만의 짧은 혼인기간 중일 때 높게 나타나다가 혼인기간이 지속될수록 줄어들고 다시 40년 이상의 집단에서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 대체로 남성의 가사노동참여는 자녀육아가 진행되면서 저조해지다가 은퇴이후로 증가하는 패턴이 재확인 되었다.

한편, 출산경력에 따른 차이에서는 기혼여성의 배우자에 한정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자녀가 없을 땐 남편의 가사분담시간 역시 높았으나 점차 자녀의 수가 증가할수록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이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는 다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자녀양육에 대한 높은 부담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의 가사분담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표 5-12> 기혼남녀와 그 배우자의 일주일간 평균 가사노동시간

(단위: 점, 명)

문항			가사노동시간(단위: 시간)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단위: 시간)			
			평균	표준오차	사례수	ANOVA (F값)	평균	표준오차	사례수	ANOVA (F값)
사회 계층	기혼 남성	상	6.65	8.15	110	2.02	20.93	13.55	100	1.37
		중	7.72	9.05	103		24.76	16.66	94	
		하	8.90	10.97	236		22.28	17.58	170	
	기혼 여성	상	20.22	13.86	135	0.37	7.02	11.75	119	1.43
		중	21.17	15.91	145		6.05	9.74	119	
		하	19.88	15.77	376		8.40	13.28	175	

〈표 5-12〉 계속

(단위: 점, 명)

문항			가사노동시간(단위: 시간)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단위: 시간)			
			평균	표준오차	사례수	ANOVA (F값)	평균	표준오차	사례수	ANOVA (F값)
배우자 동거 기간	기혼 남성	10년 미만	7.18	9.35	57	1.70	24.81	17.83	57	0.55
		10-19년	6.07	6.36	59		21.17	16.32	59	
		20-39년	9.09	11.87	148		22.05	14.77	148	
		40년 이상	6.99	9.07	103		22.40	17.66	103	
	기혼 여성	10년 미만	20.60	15.82	68	1.75	7.19	12.55	68	5.18**
		10-19년	21.48	16.11	93		5.35	10.43	93	
		20-39년	20.37	14.63	160		6.14	8.40	160	
		40년 이상	24.90	17.68	93		11.41	16.38	93	
마지막 자녀의 연령	기혼 남성	미취학아동	6.42	9.27	48	0.48	26.13	17.73	47	1.33
		만 7-12세	8.83	11.28	40		23.36	19.53	36	
		만 13-18세	8.31	11.70	65		19.86	13.72	50	
		성인자녀	8.23	10.22	134		21.93	15.07	111	
	기혼 여성	미취학아동	23.14	16.61	70	0.92	7.29	13.01	68	0.66
		만 7-12세	20.65	14.09	66		5.07	8.74	56	
		만 13-18세	20.90	14.67	72		5.58	10.49	57	
		성인자녀	19.60	15.57	188		7.02	10.56	115	
출산 경력	기혼 남성	없음	7.75	8.73	137	0.05	23.54	17.45	107	0.54
		1명	8.14	9.70	98		23.19	16.76	85	
		2명	8.05	11.37	153		22.87	15.28	127	
		3명 이상	7.61	9.30	36		19.41	17.67	32	
	기혼 여성	없음	19.88	14.92	235	0.17	10.42	14.86	102	3.23*
		1명	20.24	16.30	143		5.37	9.41	87	
		2명	20.88	14.59	208		7.13	11.76	167	
		3명 이상	20.73	16.09	45		5.90	9.73	42	

* <0.05, ** <0.01, *** <0.001

주 : 현재 배우자와의 동거기간(현재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와 동거 중인 경우만 해당)

한편 〈표 5-13〉은 기혼남녀와 그 배우자의 돌봄노동시간을 사회계층, 배우자의 동거기간, 마지막 자녀의 연령, 출산경력에 따라 집단별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돌봄노동시간에서는 가사노동시간 보다 좀 더 뚜렷한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사회계층에서는 기혼남성의 배우자 사이에서 돌봄노동시간의 차이를 나타냈는데 상층남성의 배우자는 하층남성의 배우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우자

의 동거기간별로 살펴보면 기혼남성과 그 배우자 모두 초기 결혼생활에서 돌봄시간이 길어지고 그 뒤로 동거기간이 길어질수록 돌봄시간 역시 줄어드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자녀양육의 진행과 종료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다. 기혼여성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자녀의 연령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기혼남성이 돌봄노동에 가장 높게 참여하는 시기는 미취학 아동이 존재할 경우이고 그 뒤로 점차 돌봄 노동의 시간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은 미취학 아동이 존재할 경우 그들의 배우자보다 평균 3.5배 이상의 시간을 돌봄노동에 할애하였고 자녀의 육아단계가 진행될수록 점차 돌봄시간이 줄어들어 성인자녀 시기에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산경력별 차이를 보면 기혼남성은 자녀수에 따른 돌봄시간의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그들의 배우자에게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돌봄노동시간 역시 비례관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혼여성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5-13〉 기혼남녀와 그 배우자의 일주일간 평균 돌봄노동시간

(단위: 점, 명)

문항			돌봄노동시간(단위: 시간)				배우자의 돌봄노동시간(단위: 시간)			
			평균	표준오차	사례수	ANOVA (F값)	평균	표준오차	사례수	ANOVA (F값)
사회 계층	기혼 남성	상	8.20	13.40	110	1.00	18.23	19.35	100	5.97**
		중	6.54	9.25	103		17.12	19.02	94	
		하	6.14	13.64	236		11.13	16.96	169	
	기혼 여성	상	17.94	22.49	135	14.73	6.18	11.26	119	0.50
		중	15.87	18.68	145		5.43	9.92	119	
		하	8.97	17.13	374		4.98	9.30	175	
현재	기혼 남성	10년 미만	13.05	15.31	57	7.90***	28.28	20.53	57	20.24***
		10-19년	7.61	11.71	59		18.08	18.34	59	
		20-39년	5.71	10.96	148		13.18	17.62	148	
		40년 이상	3.99	10.40	103		6.92	12.86	102	

〈표 5-13〉 계속

(단위: 점, 명)

문항			돌봄노동시간(단위: 시간)				배우자의 돌봄노동시간(단위: 시간)			
			평균	표준오차	사례수	ANOVA (F값)	평균	표준오차	사례수	ANOVA (F값)
배우자 동거기간	기혼 여성	10년 미만	25.65	22.45	68	20.63***	7.96	9.27	68	7.47***
		10-19년	25.51	24.50	93		8.52	13.75	93	
		20-39년	10.36	15.46	160		3.34	6.87	160	
		40년 이상	9.94	17.08	93		4.17	9.84	93	
마지막 자녀의 연령	기혼 남성	미취학아동	14.19	17.33	48	6.50***	35.34	20.98	47	22.24***
		만 7-12세	8.00	10.15	40		20.06	16.28	36	
		만 13-18세	5.74	6.52	65		14.86	16.26	50	
		성인자녀	5.52	12.54	134		11.38	16.00	111	
	기혼 여성	미취학아동	34.26	22.88	70	39.36***	10.32	9.94	68	9.67***
		만 7-12세	24.76	23.02	66		7.63	13.65	56	
		만 13-18세	16.01	19.55	72		5.84	12.09	57	
		성인자녀	7.54	14.75	188		2.52	5.33	115	
출산 경력	기혼 남성	없음	4.42	12.15	137	1.84	7.49	14.77	106	8.51***
		1명	7.01	10.52	98		17.20	18.07	85	
		2명	7.36	13.07	153		18.83	20.06	127	
		3명 이상	8.36	15.03	36		16.72	19.64	32	
	기혼 여성	없음	5.63	12.35	234	19.29***	4.39	9.72	102	1.07
		1명	13.82	19.61	143		5.56	8.47	87	
		2명	18.16	21.88	208		6.47	11.93	167	
		3명 이상	18.84	23.60	45		4.45	5.33	42	

* <0.05, ** <0.01, *** <0.001

주 : 현재 배우자와의 동거기간(현재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와 동거 중인 경우만 해당)

2. 일하는 부모의 경제활동

〈표 5-14〉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를 대상으로 일과 가족의 양립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마지막 자녀의 연령별로 비교한 것이다. “직장일에 지쳐 너무 피곤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 해야 할 집안일을 할 수 없는 경우”라는 문항에 대해 기혼남성은 미취학아동을 양육할 경우 가장 높은 어려움을 나타냈고 그 뒤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해소되는 점이 발견되었다. 반면 기혼여성은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시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양육단계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단계의 진행에 따라 그 어려움이 완화되는 남성과 달리 생애사적으로 어려움에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장일을 너무 오래해서 집안내 책임을 다 하기 어려운 경우”는 기혼남성이 역시 미취학 아동일 경우에 가장 높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뒤 어려움이 점차 낮아지는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기혼여성에게도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집안일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피곤한 상태로 직장에 도착한 경우”는 기혼남성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기혼여성에서는 미취학 아동을 양육할 때 가장 높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뒤 점차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집안 내 내 책임 때문에 직장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는 남녀 모두 미취학 아동시기에서 높게 나타나다 자녀양육단계가 진행되면서 점차 해소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일-가족 양립지수의 네 문항을 합산하였을 때 남녀 모두 미취학 아동을 양육할 때 일-가정 양립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수준에서 갈등지수를 나타내고 있어 일-가정 양립의 부담은 어머니에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표 5-14〉 일하는 부모의 일-가족 양립 수준(육아단계별 차이)

(단위: 점, 명)

문항		기혼남성				
		미취학 아동	만 7-12세	만 13-18세	성인 자녀	ANOVA (F값)
1)직장일에 지쳐 너무 피곤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 해야 할 집안일을 할 수 없는 경우	평균	2.84	2.34	2.26	2.02	5.61**
	표준오차	1.12	1.07	1.18	1.05	
	사례수	44	38	58	94	
2)직장일을 너무 오래 해서 집안 내 내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경우	평균	2.61	2.34	2.07	1.77	7.43***
	표준오차	1.10	0.99	1.14	0.98	
	사례수	44	38	58	94	

〈표 5-14〉 계속

(단위: 점, 명)

문항		기혼남성				
		미취학 아동	만 7-12세	만 13-18세	성인 자녀	ANOVA (F값)
3)집안일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피곤한 상태로 직장에도 착한 경우	평균	1.55	1.50	1.45	1.31	1.22
	표준오차	0.87	0.76	0.80	0.69	
	사례수	44	38	58	94	
4)집안 내 내 책임 때문에 직장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경우	평균	1.73	1.42	1.40	1.31	3.47*
	표준오차	0.85	0.72	0.72	0.64	
	사례수	44	38	58	94	
일-가족 양립의 갈등지수	평균	2.18	1.90	1.79	1.60	7.26***
	표준오차	0.73	0.64	0.77	0.65	
	사례수	44	38	58	94	
문항		기혼여성				
		미취학 아동	만 7-12세	만 13-18세	성인 자녀	ANOVA (F값)
1)직장일에 지쳐 너무 피곤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 해야 할 집안일을 할 수 없는 경우	평균	2.93	2.97	3.00	2.36	6.44***
	표준오차	1.17	0.94	0.82	1.10	
	사례수	27	38	55	92	
2)직장일을 너무 오래 해서 집안 내 내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경우	평균	2.52	2.53	2.60	2.02	4.39**
	표준오차	1.16	1.03	1.01	1.10	
	사례수	27	38	55	92	
3)집안일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피곤한 상태로 직장에도 착한 경우	평균	2.30	1.89	1.95	1.70	2.82*
	표준오차	0.99	1.01	0.95	0.97	
	사례수	27	38	55	92	
4)집안 내 내 책임 때문에 직장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경우	평균	2.19	1.87	1.85	1.43	7.31***
	표준오차	0.88	0.93	0.85	0.76	
	사례수	27	38	55	92	
일-가족 양립의 갈등지수	평균	2.48	2.32	2.35	1.88	6.96***
	표준오차	0.88	0.81	0.74	0.78	
	사례수	27	38	55	92	

* <0.05, ** <0.01, *** <0.001

주: 전혀 없었다(1), 한두 번 있었다(2), 한 달에 여러 번 있었다(3), 일주일에 여러 번 있었다(4)

〈표 5-15〉는 자녀를 양육 중인 기혼남녀의 고용지위 및 경력단절의 경험을 자녀의 양육단계별로 나누어 집계한 표이다. 미취학 아동이 있을 경우 기혼남성은 92.79%의 절대 다수가 전일제에 종사하였지만 기혼여성의 경우 52.35%만이 전일제 고용에 그쳤고 나머지 18.79%는 시간제 고

용, 28.86%는 노동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미취학 아동의 양육부담에 따른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응답자의 배우자에게서도 비슷한 패턴을 나타냈다.

한편 막내가 학교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기혼남성은 여전히 미취학 아동이 존재할 경우와 변함없는 수준에서 절대 다수가 전일제 고용을 유지하였고 기혼여성은 64.54%로 증가하여 미취학 아동의 존재에 따른 경력단절이 일부 해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시간제로 고용된 여성 역시 23.76%로 증가하였고 일을 하지 않은 여성은 11.70%에 그쳐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시기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시기로 나타났다.

〈표 5-15〉 일하는 부모의 경력단절 경험

(단위: 명, %)

유형		미취학 아동이 있을 때			
		전일제로 일했다	시간제로 일했다	일을 하지 않았다	합계
응답자	기혼남성	283	10	12	305
		92.79%	3.28%	3.93%	100.00%
	기혼여성	156	56	86	298
		52.35%	18.79%	28.86%	100.00%
	전체	439	66	98	603
배우자	기혼남성	110	38	149	297
		37.04%	12.79%	50.17%	100.00%
	기혼여성	264	22	11	297
		88.89%	7.41%	3.70%	100.00%
	전체	439	60	160	594
		62.96%	10.10%	26.94%	100.00%

〈표 5-15〉 계속

(단위: 명, %)

유형		막내가 학교에 들어간 후			
		전일제로 일했다	시간제로 일했다	일을 하지 않았다	합계
응답자	기혼남성	255	13	8	276
		92.39%	4.71%	2.90%	100.00%
	기혼여성	182	67	33	282
		64.54%	23.76%	11.70%	100.00%
	전체	437	80	41	558
		78.32%	14.34%	7.35%	100.00%
배우자	기혼남성	114	49	101	264
		43.18%	18.56%	38.26%	100.00%
	기혼여성	253	17	6	276
		91.67%	6.16%	2.17%	100.00%
	전체	367	66	107	540
		67.96%	12.22%	19.81%	100.00%

〈표 5-16〉은 기혼남녀의 마지막 자녀의 연령별 고용상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다. 남성의 경우 자녀양육단계에 상관없이 상용직의 비율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여성은 만 13-18세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상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시직/일용직의 경우 남녀 모두 자녀양육의 후기에서 높게 나타났고 특히 여성은 임시직/일용직 여성의 과반수가 성인자녀를 둔 경우에 해당되었다. 자영업은 남성에게서는 양육 초기단계보다 만 13-18세 이후의 양육 후기단계에서 종사비율이 더 높았고 여성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 특히 대다수가 성인자녀를 두었을 경우에 해당되었다.

〈표 5-16〉 일하는 부모의 고용상의 지위(육아단계별 차이)

(단위: 명, %)

유형	기혼남성				
	미취학 아동	만 7-12세	만 13-18세	성인자녀	합계
상용직	29	20	30	30	119
	24.37%	16.81%	25.21%	25.21%	100.00%
임시직/ 일용직	5	4	8	8	25
	20.00%	16.00%	32.00%	32.00%	100.00%
자영업/ 사업주	10	14	21	21	90
	11.11%	15.56%	23.33%	23.33%	100.00%
전체	44	38	59	93	234
	18.80%	16.24%	25.21%	39.74%	100.00%
유형	기혼여성				
	미취학 아동	만 7-12세	만 13-18세	성인자녀	합계
상용직	20	20	24	21	85
	23.53%	23.53%	28.24%	24.71%	100.00%
임시직/ 일용직	4	8	12	21	45
	8.89%	17.78%	26.67%	46.67%	100.00%
자영업/ 사업주	4	10	17	51	82
	4.88%	12.20%	20.73%	62.20%	100.00%
전체	28	38	53	93	212
	13.21%	17.92%	25.00%	43.87%	100.00%

주: 임금노동자, 사업주 포함

〈표 5-17〉은 마지막 자녀의 연령별 기혼남녀의 평균 노동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남성은 미취학 아동에서 만 7-12세의 아동양육 단계로 넘어가면서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만 13-18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시점부터는 점차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비슷하였으나 성인자녀를 둔 시점에서도 장시간 노동시간이 나타나면서 배우자의 은퇴와 자녀의 독립 이후 노동활동에 다시 참여하게 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임금노동시간은 남녀 모두 평균적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나 장시간 노동이 요구되는 한국의 업무환경이 나타났다. 자녀를 양육 중인 남성은 평균 50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역시 45시간 내외의 노동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의 주

당 평균 노동시간 그리고 2000년 이미 주 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규제한 프랑스의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Noonan, 2013). 장시간 노동은 대표적으로 가족친화적인 노동환경에 반하는 사례로서 일-가족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특히 자녀를 육아 중인 어머니에게 경력단절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여진다.

〈표 5-17〉 일하는 부모의 평균 임금노동시간(육아단계별 차이)

(단위: 점, 명)

문항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 (단위: 시간)			
		평균	표준오차	사례수	ANOVA(F값)
기혼남성	미취학아동	51.72	17.32	43	2.24
	만 7-12세	55.39	18.67	38	
	만 13-18세	50.12	18.13	57	
	성인자녀	45.98	20.78	91	
기혼여성	미취학아동	44.85	11.72	27	1.4
	만 7-12세	47.49	19.10	35	
	만 13-18세	41.47	16.20	53	
	성인자녀	47.36	21.27	95	

주: * <0.05, ** <0.01, *** <0.001

제3절 기혼남녀의 사회적 위험

전통적인 관점에서 결혼 후 배우자가 함께 동거하며 가족생활을 꾸리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그러나 생활양식의 탈표준화가 진행되면서 부부가 기혼상태임에도 경제활동, 교육 등의 문제로 동거하지 않거나 이혼, 별거, 미혼육아 등의 이유로 한부모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는 등 가족구성의 원리에서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혼남녀의 가구동거 형태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변화된 가족관계에 맞추어 가족 및 친족 등 사적영역 내에 머

물던 기혼여성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점차 확대 중에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제약적인 수준에 놓여있는지 비교할 수 있다.

1. 기혼남녀의 가구동거 형태

〈표 5-18〉은 기혼자와 미혼자의 가족동거의 형태를 비교하기 위해 집계한 표이다. 현재 동거중인 가족에 한정할 경우, 미혼자의 경우 1인가구인 비중이 약 20~30%를 차지했고 특히 미혼남성은 19.70%로 미혼여성의 20.49%보다 약 10%가량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기혼남녀가 1인가구형태로 생활 중인 경우도 상당부분 존재하였는데, 기혼남성은 12.44%, 기혼여성은 25.81%가 현재 1인가구로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 응답자와 자녀만 거주하는 한부모 형태인 경우도 일부 존재하였는데 기혼남성 중 5.66%와 기혼여성 중 11.75%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남녀 내에서도 점점 가족동거 형태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5-18〉 기혼 및 미혼남녀의 가구동거 형태

(단위: 명, %)

유형	미혼자			기혼자		
	미혼남성	미혼여성	합계	기혼남성	기혼여성	합계
1인 가구	49	25	74	55	167	222
	29.70%	20.49%	25.78%	12.44%	25.81%	20.39%
응답자+배우자	1	1	2	153	153	306
	0.61%	0.82%	0.70%	34.62%	23.65%	28.10%
응답자+배우자+자녀	1	1	2	199	244	443
	0.61%	0.82%	0.70%	45.02%	37.71%	40.68%
응답자+자녀	0	4	4	25	76	101
	0.00%	3.28%	1.39%	5.66%	11.75%	9.27%

〈표 5-18〉 계속

(단위: 명, %)

유형	미혼자			기혼자		
	미혼남성	미혼여성	합계	기혼남성	기혼여성	합계
응답자+그 외 (친척, 친구, 이웃 등)	114 69.09%	91 74.59%	205 71.43%	10 2.26%	7 1.08%	17 1.56%
전체	165 100.00%	122 100.00%	287 100.00%	442 100.00%	647 100.00%	1,089 100.00%

주: 1인 가구가 아니라 응답한 경우 배우자, 자녀, 그 외의 사람들이 함께 동거 중일 경우를 분류함

〈표 5-19〉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동거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가족동거 형태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가구규모를 조사한 것이다. 남성의 경우 61.11%가 1인가구로 홀로 거주 중에 있었고 약 30%는 2-3인 가구로 자녀 등 다른 구성원과 거주 중에 있었다. 그 외 4인 이상의 다인가구에서 생활 중인 기혼남성도 존재하여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지만 다양한 가족구성 혹은 가구원들과 동거 중인 경우도 일정부분 집계되었다. 여성 역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어, 66.80%가 1인가구로서 홀로 거주 중에 있었고 나머지 유형에서는 기혼남성과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표 5-19〉 기혼남녀가 배우자가 동거하지 않을 경우 함께 거주중인 가구원의 수

(단위: 명, %)

유형	기혼남성	기혼여성	전체
1인 가구	55	167	222
	61.11%	66.80%	65.29%
2인 가구	18	47	65
	20.00%	18.80%	19.12%
3인 가구	8	25	33
	8.89%	10.00%	9.71%
4인 이상 가구	9	11	20
	10.00%	4.40%	5.88%
전체	90	250	340
	100.00%	100.00%	100.00%

주: 1인 가구 외의 가구들은 응답자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동거 중일 경우에만 표기함

〈표 5-20〉은 배우자와 동거 중이지 않은 경우 그 별거사유를 혼인지위의 차이를 기준으로 기혼남녀의 비율을 집계한 것이다. 기혼남성 중 배우자와 비동거 상황인 경우는 28.89%가 기혼 중임에도 다른 직장, 자녀양육 등의 문제로 비동거인 경우로 나타났고 기혼여성은 14.40%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한편 배우자를 사별한 경우는 기혼남성이 52.22%, 여성이 70.00%로 배우자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였으며 이들은 주로 고연령의 노인층으로 분류된다. 한편 이혼이나 별거 등의 문제로 배우자와 비동거 상황인 경우도 남성이 약 40%, 여성이 약 15%를 차지하면서 다양한 가족구성 형태의 출현을 반영하고 있었다. 비동거 부부, 이혼 및 별거가정의 증가는 점차 가족구성의 형태가 양 부모-자녀의 표준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환경과 맥락 속에 놓여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표 5-20〉 기혼남녀의 배우자와 동거형태와 별거 사유

(단위: 명, %)

유형	기혼남성			기혼여성		
	동거	비동거	합계	동거	비동거	합계
기혼	362	26	388	407	36	443
	100.00%	28.89%	85.84%	100.00%	14.40%	67.43%
사별	0	29	29	0	175	175
	0.00%	32.22%	6.42%	0.00%	70.00%	26.64%
이혼	0	27	27	0	31	31
	0.00%	30.00%	5.97%	0.00%	12.40%	4.72%
별거	0	8	8	0	8	8
	0.00%	8.89%	1.77%	0.00%	3.20%	1.22%
전체	362	90	452	407	250	657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 기혼남녀의 사회적 참여활동 유형

〈표 5-21〉은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사회적 참여활동의 유형군을 비교하고 있다. 기혼남성과 기혼여성 모두 종교집단, 동창회, 여가모임에

대한 참여활동 비율이 높았으나 어떠한 단체에서도 활동하지 않은 응답자가 기혼남성이 11.69%에 그친 반면 기혼여성은 21.80%로 10%가량 더 월등히 높게 나타나 기혼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사회적 활동의 폭이 더 많이 제약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표 5-21〉 육아 중인 기혼남녀의 사회적 참여활동 유형

(단위: 명, %)

유형	기혼남성	기혼여성	합계
정치모임	1	2	3
	0.65%	0.95%	0.82%
주민협회, 반사회	5	11	16
	3.25%	5.21%	4.38%
사회봉사 클럽	8	9	17
	5.19%	4.27%	4.66%
시민사회단체, 소비자 협동조합	2	2	4
	1.30%	0.95%	1.10%
종교집단	22	31	53
	14.29%	14.69%	14.52%
동창회	46	48	94
	29.87%	22.75%	25.75%
여가모임	36	46	82
	23.38%	21.80%	22.47%
노동조합	5	2	7
	3.25%	0.95%	1.92%
직업/직능 단체	11	14	25
	7.14%	6.64%	6.85%
없음	18	46	64
	11.69%	21.80%	17.53%
합계	48	27	75
	100.00%	100.00%	100.00%

주: 만 18세 미만 자녀를 육아할 경우에만 해당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5장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적 위험, 경제적 위험, 사회적

위험의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일과 양육을 병행 중인 일하는 부모에게 일-가족 양립은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으며 기혼남녀의 성 불평등을 강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5장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가족적 위험에서 기혼남녀는 결혼관에 있어 평균적으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회계층별로 집단을 나눌 경우 기혼남성은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기혼여성은 가계소득이 높은 여성일수록 더 개방적인 결혼관을 나타냈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서는 기혼남성과 기혼여성 모두 배우자와의 동거기간이 길거나 출산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자녀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배우자와의 동거에 관해 지속기간에서 자녀의 가치에 대한 지지는 남녀 모두 평균적으로 U자 패턴을 나타냈는데, 자녀양육에 따르는 부담이 집중되는 10년 미만에서 20년 미만 사이의 시기에서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은 편이었다. 한편, 출산경력은 남녀 모두 자녀의 수가 증가할수록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또한 증가하는 선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성역할에 대한 태도에서는 기혼여성이 '시간제 어머니-전일제 아버지'의 유형을 가장 이상적인 유형으로 지지한 반면 기혼남성이 '주부 어머니-전일제 아버지'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면서 기혼남성이 기혼여성에 비해 좀 더 보수적인 성역할을 나타내고 있었다. 기혼여성은 전일제보다는 시간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우세하였는데 이는 유연한 형태의 시간제 근무가 어머니에게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경제적 위험에서는 기혼여성이 기혼남성보다 가사 및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사회계층, 배우자와의 동거기간, 자녀의 육아단계, 출산경력 등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혼남성과 기혼여성 모두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배우자와의 동거기간이 짧을수록, 어

린 자녀를 육아 중에 있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가사 및 돌봄노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가사노동 보다는 돌봄노동에서 기혼남녀의 기여도 차이가 두드러졌다. 한편 일-가족 양립의 갈등지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모든 생애단계에 걸쳐 높게 나타났고, 특히 미취학 아동의 어린 자녀를 양육 중에 있을수록 높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어린 아동을 육아 중인 기혼여성은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높았고 상용직 보다는 임시직 및 일용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혼남녀의 사회적 위험에서는 기혼 중이지만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이 일정 부분 나타났으며, 비동거 부부의 존재는 생활과 가구구성의 형태에 있어서 다양성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기혼남녀의 사회적 참여활동을 비교했을 때 남녀별로 활동 중인 사회적 유대관계의 유형군이 다양하게 분포하였으나, 어떠한 단체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나면서 여전히 여성의 사회적 활동의 폭이 남성에 비해 제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6장

여성노인의 사회적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제1절 남녀노인의 가족적 위험

제2절 남녀노인의 경제적 위험

제3절 남녀노인의 사회적 위험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6

여성노인의 사회적 <<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인구의 부양과 돌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성 불평등의 문제는 주로 경제활동에 종사 중인 중·장년층 이하를 대상으로 연구되어왔으나, 고령사회의 진행은 남녀 노인 사이에 커다란 사회경제적 격차를 야기하면서 은퇴 이후 노인인구의 불평등 문제 역시 핵심적인 정책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생애사적으로 경제활동으로부터 소외되고 가족돌봄이 우선시되었던 여성노인은 노년기에서도 남성노인에 비해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인다. 여성노인은 노년기에 진입하였음에도 노동활동으로부터의 은퇴보다는 그들의 성인자녀의 손자녀의 양육을 대신 수행하면서 상당수준의 돌봄노동에 시달리게 되고, 배우자의 사망 시 경제적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며, 높은 기대수명으로 인해 홀로 생존하여 가족 및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 사회의 상당수의 고령 여성노인은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본 장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족적 위험, 경제적 위험, 사회적 위험의 현황을 파악하고 여성노인의 차별적인 경험과 더불어 저출산 및 고령화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특성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1절 남녀노인의 가족적 위험

가족규모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구성에 있어서 핵가족화되면서 성인 자녀는 더 이상 부모세대와 동거하지 않고 분가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배우자와의 사별 후 홀로 거주하는 1인 노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돌봄과 경제적 부양으로부터 소외된 노인들의 가족적 위험이 증대된다. 1인가구는 특히 기대수명이 높은 여성노인에게서 더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경제적 빈곤이나 사회적 고립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여성노인은 또한 성인자녀의 손자녀 돌봄이나 노인 배우자의 돌봄에 종사하는 등 황혼기에도 여전히 과도한 수준의 가사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본 절에서는 남녀노인의 가족동거 현황을 분석하고 가족 유대관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남녀노인의 돌봄노동과 돌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1. 남녀노인의 가족동거 상황

〈표 6-1〉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가족동거 상황을 집계한 표이다. 남성노인의 대다수가 자녀를 분가시키고 부부만 거주하는 형태였으며, 64.86%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그 외 1인가구인 경우는 13.51%,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18.24%,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는 2.70%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노인에 비해 1인가구일 경우가 월등히 높았는데 58.49%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부부가 단독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25.47%,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는 2.83%로 남성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치를 나타냈고 자녀하고만 거주하는 경우는 12.26%로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노인의 경우 배우자보다 기대수명이 높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사별 및 성인자녀의 독립 등으로 인해 1인가구가 될 가능성이 남성노인보다 더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6-1〉 남녀노인의 동거가족 구성(사회계층별 차이)

(단위: 명, %)

가구구성형태	남성노인	여성노인	전체
1인 가구	20	124	144
	13.51%	58.49%	40.00%
응답자+배우자	96	54	150
	64.86%	25.47%	41.67%
응답자+배우자+자녀	27	6	33
	18.24%	2.83%	9.17%
응답자+자녀	4	26	30
	2.70%	12.26%	8.33%
응답자+그 외(친척, 친구, 이웃 등)	1	2	3
	0.68%	0.94%	0.83%
전체	148	212	360
	100.00%	100.00%	100.00%

〈표 6-2〉는 자녀와 동거 중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딸 혹은 아들과 동거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유형별로 나눈 것이다. 남성노인의 경우 2.68%가 딸과 동거 중에 있었고, 12.08%가 아들과 동거하였으며, 6.04%는 딸 및 아들 모두와 동거 중에 있었다. 여성노인의 경우 2.35%가 딸과 동거 중이었고, 9.86%가 아들과 동거 중에 있었으며, 2.82%가 딸 및 아들 모두와 동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딸과의 동거비율보다 아들과의 동거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이유는 기혼남성이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6-2〉 남녀노인의 동거 중인 자녀 유형

(단위: 명, %)

동거 중인 자녀	남성노인	여성노인	전체
동거자녀 없음	118	181	299
	79.19%	84.98%	82.60%
딸과 동거	4	5	9
	2.68%	2.35%	2.49%
아들과 동거	18	21	39
	12.08%	9.86%	10.77%
딸, 아들과 동거	9	6	15
	6.04%	2.82%	4.14%
전체	149	213	362
	100.00%	100.00%	100.00%

〈표 6-3〉은 남녀노인의 동거형태별로 가구경제 상황을 집계한 표이다. 가구경제 상황은 65세 이상 노인층의 경우 경제활동 중인 다른 세대와 소득수준에서 큰 편차를 나타내기 때문에, 노인집단만을 대상으로 가계소득의 상위 75% 이상의 집단을 상층, 25% 이상~75% 미만의 집단을 중층, 25% 미만의 집단을 하층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기준으로 동거형태별 가구경제 상황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계층별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노인의 경우 전체 남성노인 중 64.38%가 배우자와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다음이 배우자 및 자녀와 모두 동거하는 경우와 1인가구일 경우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층의 남성노인은 다른 계층의 노인에 비해 1인가구일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1인 노인가구가 빈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반영한다. 중층 남성노인의 경우 배우자와 동거 중인 경우가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높았고, 자녀 및 배우자 모두와 거주하는 응답자도 상당부분 차지하였다. 상층 남성노인의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자녀와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제공받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가계소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설

명된다. 여성노인의 경우 하층노인은 77.33%가 1인가구였으며, 그 다음으로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 10.67%,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8.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남성노인 중 1인가구가 13.70%에 그친 것에 비교할 때, 상당수의 여성노인이 1인가구로 생활하는 점이 발견된다. 특히 하층 여성노인 중 77.33%, 중층 여성노인 중 55.75%, 상층 여성노인 중 24.24%가 각각 독거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여성노인 1인가구가 노인빈곤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계층이 증가할수록 배우자나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높았으며, 특히 상층노인의 경우 배우자와 거주하는 비중이 다른 계층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는데, 이는 여성노인의 빈곤이 남성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표 6-3〉 남녀노인의 동거형태별 가구경제 상황

(단위: 명, %)

가구구성형태	남성노인				여성노인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중층	하층	전체
1인 가구	5	12	3	20	8	58	58	124
	9.80%	15.38%	17.65%	13.70%	24.24%	55.77%	77.33%	58.49%
응답자+배우자	27	56	11	94	18	28	8	54
	52.94%	71.79%	64.71%	64.38%	54.55%	26.92%	10.67%	25.47%
응답자+배우자+ 자녀	17	9	1	27	1	2	3	6
	33.33%	11.54%	5.88%	18.49%	3.03%	1.92%	4.00%	2.83%
응답자+자녀	2	1	1	4	5	15	6	26
	3.92%	1.28%	5.88%	2.74%	15.15%	14.42%	8.00%	12.26%
응답자+그 외	0	0	1	1	1	1	0	2
	0.00%	0.00%	5.88%	0.68%	3.03%	0.96%	0.00%	0.94%
전체	52	78	17	147	33	104	75	212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가계소득수준을 3등분 함

2. 남녀노인의 돌봄노동과 돌봄에 대한 인식

〈표 6-4〉는 남녀노인과 그 배우자의 사회계층별 가사노동의 수준을 나

타낸 것이다. 가사노동의 경우 대체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여성노인의 배우자의 경우 가계소득이 낮을 경우 가사노동의 비율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돌봄 노동시간에서는 남성노인의 경우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보다 중층 및 상층일 경우 돌봄노동의 참여율이 더욱 높았다. 여성노인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배우자의 차이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 가계소득이 높은 여성노인의 배우자일 때 돌봄노동의 참여율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로 가계소득이 낮은 노인은 가족과 동거하지 않거나 가족관계로부터 단절을 경험하는 1인가구의 비율이 높고 돌봄참여에 물리적 제약이 따르는 고연령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6-4〉 65세 이상 남녀노인의 가사노동 수준(사회계층별 차이)

(단위: 점, 명)

문항			노동시간(단위: 시간)				배우자의 노동시간(단위: 시간)			
			평균	표준오차	사례수	ANOVA (F값)	평균	표준오차	사례수	ANOVA (F값)
가사 노동	노인 남성	상	9.08	9.04	52	0.29	27.44	15.87	45	1.19
		중	8.09	12.00	78		18.85	16.27	65	
		하	6.88	10.29	17		26.31	23.66	13	
	노인 여성	상	21.79	16.98	34	0.15	13.48	13.04	21	4.36*
		중	20.63	16.39	104		9.32	12.33	31	
		하	17.45	15.23	75		18.82	30.76	11	
돌봄 노동	노인 남성	상	3.69	6.82	52	3.71*	8.40	13.93	45	1.33
		중	4.28	11.79	78		7.88	15.33	64	
		하	2.88	10.22	17		7.08	12.01	13	
	노인 여성	상	8.50	15.31	34	0.05	8.38	12.61	21	3.36*
		중	5.86	14.57	103		3.19	7.70	31	
		하	1.65	5.24	74		0.36	0.92	11	

* <0.05, ** <0.01, *** <0.001

〈표 6-5〉는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있을 때 노인돌봄에 대한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해 남녀노인의 인식차이를 집계한 것

이다. 남성노인은 40.27%가 가족, 57.05%가 정부기관을 노인돌봄의 책임주체로 인식하며 공적 영역에 대한 책임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는 편이었고, 여성노인의 경우 가족이 46.48%, 정부기관이 48.36%로 각각 나타나 비교적 가족과 정부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6-5〉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있을 때 돌봄의 주체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노인돌봄 제공의 주체	남성노인	여성노인	전체
가족	60	99	159
	40.27%	46.48%	43.92%
정부기관	85	103	188
	57.05%	48.36%	51.93%
비영리단체/사설단체	4	11	15
	2.68%	5.16%	4.15%
전체	149	213	362
	100.00%	100.00%	100.00%

〈표 6-6〉은 일상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존재할 때 그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하는지의 책임주체에 대한 남녀노인의 차이를 집계한 것이다. 남성노인은 절대 다수인 65.10%가 정부/공적자금으로부터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는 여성노인에게서도 68.08%로 높게 나타나 남녀 모두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노인 자신이거나 가족인 경우는 남성노인이 34.90%, 여성노인이 31.92%를 각각 차지하였다.

〈표 6-6〉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있을 때 그 비용지불의 주체

(단위: 명, %)

노인비용 지불의 주체	남성노인	여성노인	전체
노인 자신 혹은 관련 가족	52	68	120
	34.90%	31.92%	33.15%
정부/공적 자금	97	145	242
	65.10%	68.08%	66.85%
전체	149	213	362
	100.00%	100.00%	100.00%

제2절 남녀노인의 경제적 위험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지만 상당수의 노인들은 연금 등 사회보험이나 체계적인 노후자금을 계획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활동으로부터 은퇴하였다. 노인층의 경제적 취약성은 은퇴 이후에도 노인들이 단순일용직이나 임시직의 형태로 경제활동을 지속하도록 만들고 있다. 특히 경제적 위험은 생애사적으로 노동시장의 활동으로부터 배제되고, 노후보장 제도에 접근하기 어려우며, 평균 기대수명이 높은 여성노인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만약 남성 배우자가 일찍 사망하거나 성인자녀가 충분한 경제적 부양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노인여성은 경제적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표 6-7〉은 남녀노인의 평균 가구소득을 남녀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여성노인의 빈곤화를 명료하게 살펴볼 수 있었는데, 월평균 5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에 해당되는 응답자가 남성노인은 23.13%에 그친 반면 여성노인은 51.17%로 두 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서 노인빈곤이 주로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반면 월평균 15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버는 경우는 남성노인이 40.14%로 여성노인의 19.25%의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나 남성노인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노인은 은퇴 후 공적연금이나 퇴직금 등으로 노후자금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반면, 여성노인은 생애과정 전체로 볼 때 노동시장에서의 경력이 단절적이고 주로 배우자의 소득에 크게 의존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표 6-7〉 남녀노인의 평균 가구소득

(단위: 명, %)

월평균 가구소득	남성노인	여성노인	전체
50만원 미만	34	109	143
	23.13%	51.17%	39.72%
50~99만원	28	39	67
	19.05%	18.31%	18.61%
100~149만원	26	24	50
	17.69%	11.27%	13.89%
150만원 이상	59	41	100
	40.14%	19.25%	27.78%
전체	147	213	360
	100.00%	100.00%	100.00%

〈표 6-8〉은 만 65세 이상의 남녀노인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 중
에 있는지를 집계한 것이다. 그 결과 남성노인의 44.97%, 여성노인의
22.54%가 여전히 경제활동에 종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 은퇴시기 이후에
도 노인들의 경제활동은 상당부분 노인시기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표 6-8〉 남녀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단위: 명, %)

경제활동 참여	남성노인	여성노인	전체
취업	67	48	115
	44.97%	22.54%	31.77%
미취업	82	165	247
	55.03%	77.46%	68.23%
전체	149	213	362
	100.00%	100.00%	100.00%

제3절 남녀노인의 사회적 위험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독거노인은 사회적 유대관계에서 소외되기 쉽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인한 여성노인의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고령의 여성노인은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도 빈곤한 상태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령사회가 진행될수록 독거 여성노인의 고립해소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표 6-9〉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독거노인과 전체노인으로 나누어 동거상황별로 가족 및 이웃과의 유대빈도에서 편차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독거노인일 경우 전체 독거노인 중 25.36%가 평소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가족이 0명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독거노인이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20.56%가 여기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독거노인이 전체 노인에 비해 가족으로부터 더 많은 단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3명 이상의 가족과 유대관계를 맺는 경우는 독거노인이 27.54%에 그친 반면 전체 노인은 31.55%로 나타나, 독거노인이 가족과 활발히 교류하는 정도가 낮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이웃과의 유대관계에서는 독거노인과 전체 노인 사이에 큰 편차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6-9〉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족과 연락 및 접촉빈도

(단위: 명, %)

유대빈도		독거노인			전체노인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가족	0명	7	28	35	30	43	73
		36.84%	23.53%	25.36%	20.41%	20.67%	20.56%
	1-2명	6	59	65	68	102	170
		31.58%	49.58%	47.10%	46.26%	49.04%	47.89%
	3명 이상	6	32	38	49	63	112
		31.58%	26.89%	27.54%	33.33%	30.29%	31.55%
	전체	19	119	138	147	208	355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이웃 (가족, 친척 제외)	0명	4	16	20	21	28	49
		20.00%	13.11%	14.08%	14.29%	13.33%	13.73%
	1-9명	15	89	104	108	155	263
		75.00%	72.95%	73.24%	73.47%	73.81%	73.67%
	10명 이상	1	17	18	18	27	45
		5.00%	13.93%	12.68%	12.24%	12.86%	12.61%
	전체	20	122	142	147	210	357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표 6-10〉은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이웃과의 유대관계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대체로 두 집단 간의 유대빈도는 비슷한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거노인은 비독거노인에 비해 이웃과의 유대빈도에서 이웃과 한 명도 교류하지 않을 경우가 더 높았는데, 독거노인은 7.64%가 여기에 해당되는 반면 비독거노인은 2.75%에 그쳐 일부 독거노인의 경우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비롯하여 이웃과의 유대관계에서도 소외를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표 6-10〉 독거노인의 이웃과 접촉 수준: 서로 인사하고 지내는 이웃 수

(단위: 명, %)

유대빈도	독거노인			비 독거노인		
	남성노인	여성노인	전체	남성노인	여성노인	전체
0명	2	9	11	4	2	6
	10.00%	7.26%	7.64%	3.10%	2.25%	2.75%
1-2명	2	8	10	17	6	23
	10.00%	6.45%	6.94%	13.18%	6.74%	10.55%
3-4명	5	13	18	14	13	27
	25.00%	10.48%	12.50%	10.85%	14.61%	12.39%
5-9명	3	22	25	20	14	34
	15.00%	17.74%	17.36%	15.50%	15.73%	15.60%
10명 이상	8	72	80	74	54	128
	40.00%	58.06%	55.56%	57.36%	60.67%	58.72%
전체	20	124	144	129	89	218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표 6-11〉은 필요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이웃의 수를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으로 집단을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독거노인은 비독거노인에 비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의존할 수 있는 이웃의 수가 적었으며, 특히 부탁 가능한 이웃의 수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20.83%로 나타나, 비독거노인의 12.39% 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독거노인이 다른 노인들에 비해 사회적 유대관계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사회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6-11〉 독거노인의 이웃과 접촉 수준: 필요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이웃 수

(단위: 명, %)

유대빈도	독거노인			비 독거노인		
	남성노인	여성노인	전체	남성노인	여성노인	전체
0명	5	25	30	15	12	27
	25.00%	20.16%	20.83%	11.63%	13.48%	12.39%
1-2명	8	32	40	43	25	68
	40.00%	25.81%	27.78%	33.33%	28.09%	31.19%

〈표 6-11〉 계속

(단위: 명, %)

유대빈도	독거노인			비 독거노인		
	남성노인	여성노인	전체	남성노인	여성노인	전체
3-4명	2	27	29	27	19	46
	10.00%	21.77%	20.14%	20.93%	21.35%	21.10%
5-9명	2	14	16	16	14	30
	10.00%	11.29%	11.11%	12.40%	15.73%	13.76%
10명 이상	3	26	29	28	19	47
	15.00%	20.97%	20.14%	21.71%	21.35%	21.56%
전체	20	124	144	129	89	218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표 6-12〉는 위험발생 시 도움을 요청하는 경로에 대해 노인 1인가구와 노인 비1인가구로 나누어 그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1인가구의 경우 비1인가구의 노인에 비해 가족과 친구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낮았고 대신 친척, 이웃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사례도 비1인가구 노인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 위험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표 6-12〉 노인 1인가구의 위험발생 시 도움 요청하는 경로

(단위: 명, %)

유대유형	노인 1인가구				
	감정적, 심리적 문제	건강문제	가사 및 돌봄문제	금전적 문제	긴급 혹은 재해 문제
가족	38	48	36	42	26
	26.39%	33.33%	25.00%	29.17%	18.06%
친척	21	24	22	32	19
	14.58%	16.67%	15.28%	22.22%	13.19%
직장동료	2	1	0	0	0
	1.39%	0.69%	0.00%	0.00%	0.00%
이웃	16	12	9	4	18
	11.11%	8.33%	6.25%	2.78%	12.50%
친구	13	8	3	3	2
	9.03%	5.56%	2.08%	2.08%	1.39%

〈표 6-12〉 계속

(단위: 명, %)

유대유형	노인 1인가구				
	감정적, 심리적 문제	건강문제	가사 및 돌봄문제	금전적 문제	긴급 혹은 재해 문제
전문직업인 혹은 기관	3	29	4	5	14
	2.08%	20.14%	2.78%	3.47%	9.72%
누구에게도 요청하지 않음	36	17	44	40	26
	25.00%	11.81%	30.56%	27.78%	18.06%
경험 없음	15	5	26	18	39
	10.42%	3.47%	18.06%	12.50%	27.08%
전체	144	144	144	144	144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유대유형	노인 비1인가구				
	감정적, 심리적 문제	건강문제	가사 및 돌봄문제	금전적 문제	긴급 혹은 재해 문제
가족	103	143	165	154	109
	47.25%	65.60%	75.69%	70.64%	50.00%
친척	13	13	10	16	13
	5.96%	5.96%	4.59%	7.34%	5.96%
직장동료	2	2	1	0	3
	0.92%	0.92%	0.46%	0.00%	1.38%
이웃	11	5	5	2	14
	5.05%	2.29%	2.29%	0.92%	6.42%
친구	25	4	1	3	6
	11.47%	1.83%	0.46%	1.38%	2.75%
전문직업인 혹은 기관	5	28	3	2	19
	2.29%	12.84%	1.38%	0.92%	8.72%
누구에게도 요청하지 않음	39	14	15	26	15
	17.89%	6.42%	6.88%	11.93%	6.88%
경험 없음	20	9	18	15	39
	9.17%	4.13%	8.26%	6.88%	17.89%
전체	218	218	218	218	218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6장에서는 여성노인의 가족적, 경제적, 사회적 위험을 살펴봄으로써
독거노인의 증가와 노인돌봄의 수요 증가로 인한 고령사회의 진전에 따

른 새로운 문제들을 예측할 수 있었다.

본 장의 주요한 발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녀노인의 가족적 위험으로는 1인 독거가구의 증가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독거가구인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으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기대수명이 높기 때문인데, 특히 여성노인은 배우자와 사별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가족규범의 변화로 인해 핵가족이 증가하면서 결혼한 성인자녀와 동거 중인 노인의 비율은 전체 18% 가량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신체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인돌봄의 필요성과 그 돌봄 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남녀노인 모두 1인가구일 때 배우자나 다른 자녀와 동거 중일 경우보다 가구경제가 열악한 비율이 높았고, 특히 하층 여성노인의 약 77%는 독거 중인 것으로 나타나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에게서 1인가구의 빈곤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여성노인은 특히 남성노인에 비해 평균적으로 가사 및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시간이 길었으며, 가계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가사 및 돌봄노동의 시간이 길었는데, 이는 하층노인이 대체로 고연령이거나 가족으로부터 고립된 상황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경제적 위험에서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평균 가계소득이 낮았고 노동활동에 참여 중인 비율도 낮아 경제적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위험에서는 성별에 상관없이 독거노인의 상당수가 필요할 때 부탁이 가능하거나 교류하는 가족, 이웃의 수가 2명 이내에 머무는 등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가구는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약 20~30% 내외를 차지하면서 상당수의 노인 1인가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제7장

사회집단별 여성의 정책욕구와 대응방안

제1절 여성의 사회집단별 차이

제2절 초저출산 정책의 이슈와 쟁점

제3절 이슈별 향후 과제와 정책대안

7

사회집단별 여성의 정책욕구와 대응방안

제1절 여성의 사회집단별 차이

이 연구에서는 제 3장부터 6장까지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ISSP 2002 및 2012와 2012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2)를 통해 경험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각 장별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제 3장에서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는 국가 소득수준이 비슷한 유형의 국가들에 비해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고 ‘아버지-생계부양자 및 어머니-돌봄책임자 모델’의 보수적인 성별분업관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한국은 전체 분석대상의 국가들 중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혼전동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자녀양육을 삶의 행복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인식들을 종합하면 한국은 여전히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전통적인 가족규범이 우세한 편이며 성평등 의식이 성장하지 못하였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지난 10년간 이러한 태도에 있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자녀양육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더 낮아지고 있어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보인다. 지난 10년간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들과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성평등 의식이 성장하고 가족규범에 있어서도 개방적 태도가 증가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이 경험한 초저출산 위기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도 밀접히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사회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여러 가지 불리한 사회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인식의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수적인 가족규범과 성역할 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양육의 양립이 상당히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녀양육의 가치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지난 10여 년간 출산지원정책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제 개인들이 체감하는 양육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폭넓게 지원해주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 4장에서 제6장까지 우리나라 남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적 위험요소의 요인과 특징에 대해 가족적 위험, 경제적 위험, 사회적 위험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미혼남녀, 기혼남녀, 노인남녀로 나누어 여성의 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생애단계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사회집단별 위험요인의 차이가 전반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먼저 제 4장에서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경제적 독립 및 부모와의 동거상황, 결혼, 이혼, 자녀 등 가족관과 성역할 인식, 경제적 상황, 사회적 관계망의 특징을 중심으로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부모와의 동거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본격적인 독립은 30대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미혼 중인 30대 중 약 50%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미혼응답자는 30대에 이르러서도 부모와 동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결혼의 지연, 부모로부터 독립의 지연은 청년세대의 생애주기에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이 지연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가족관과 성역할에 있어서 미혼남성과 미혼여성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미혼여성은 미혼남성보다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에서 더 개방적이고 평등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 미혼여성은 상대적으로 결혼의 당위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였고, 이혼에 더 개방적이었으며, 결혼을 중심으로 한 자녀출산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자녀양육에 따르는 부담감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성역할 관념 역시 미혼여성은 미혼남성보다 성평등한 부모됨의 역할을 더 지향했다. 미혼여성들은 어머니의 취업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양육의 당위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양육책임자’의 성별분업 구조로부터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미혼여성은 미혼남성보다 더 전통적인 가족규범과 성역할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사회적 수준에서의 성평등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남성들의 성평등 의식의 변화는 더디게 나타나는 사회적 지체현상의 한국사회의 특성중 하나라고 보인다. 이러한 현실은 미혼 여성들 결혼, 출산, 양육 등 전통적인 가족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킨다. 그 결과는 가족돌봄을 누가, 어느 정도까지 수행해야하는지의 재구성을 둘러싼 남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다음으로 미혼남녀의 경제적 상황에 있어서 입대 등으로 늦게 취업하는 남성보다 여성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그러나 여성의 전반적인 임금수준은 남성에 비해 낮았다. 노동시장 진입기의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의 임금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고용지위의 불안정성, 경력의 잦은 단절, 직종 및 직무에서의 성차별 문화로 인해서 더욱 심화되어 미혼여성의 경제적 위험의 중요한 위험요인이 된다. 특히 부모, 배우자 등 다른 가족구성원의 경제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1인가구

의 미혼여성은 경제적 위험에 더욱 취약하게 된다.

반면 사회적 위험의 성별 격차를 보면 미혼여성이 상대적으로 미혼남성보다 사회적 유대의 빈도가 높고 적극적인 편이었다. 다만 청년 1인가구의 응답자들은 대체로 남녀의 구분 없이 사회적 유대망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었고 갑작스러운 위험에 직면할 때 적절한 도움경로를 찾는 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점차 1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독거노인과 같이 정책적 이슈화가 되는 1인 가구에 비해서 청년세대의 경우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해주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른 시기에서부터 형성된 사회적 고립은 생애사적으로도 지속적인 고립을 강화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사회적으로 주목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제 5장에서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가족규범(결혼, 이혼, 자녀 등) 및 성역할 인식, 경제활동 및 가사돌봄의 일-가정 양립수준, 가족동거 상황 및 사회적 참여활동의 유형 등을 통해서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특히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은 사회계층과 자녀의 양육단계에 따른 생애주기의 차이에 따라 일, 가사, 돌봄, 가치관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족규범에 대한 인식에서 기혼남성은 사회계층에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기혼여성보다 결혼의 가치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자녀를 중심으로 한 결혼관을 지지하는 등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기혼여성은 사회계층에 따른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상층에 속한 여성일수록 더 개방적인 결혼 및 자녀관을 나타냈다. 자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기혼여성이 평균적으로 기혼남성보다 자녀양육에 따르는 부담감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기혼여성은 배우자와의 동거기간이 길어지거나 자녀의 수가 증가할 때 이러한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격히 감소하고 긍정적 태도가 증가하면서 생애단계의 이행에 따른 급격한 태도의 차

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기혼남성은 상대적으로 집단 간 편차가 적거나 불규칙한 편이었다. 따라서 기혼 여성 내에서는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 사이에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둘러싸고 큰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적은 수의 자녀를 출산하는 젊은 기혼부부 사이에서는 자녀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및 경력 단절의 위험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었다. 반면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 및 사회경제적 기대감은 낮게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인식에서도 기혼여성은 기혼남성보다 어머니의 전일제 경제활동을 긍정하는 등 평등한 성역할을 지향하는 편이었고 특히 남성보다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상층에 속하는 여성일수록 이러한 개방적인 성역할 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일-가족 양립 수준을 살펴볼 때, 기혼 여성이 기혼남성보다 평균적으로 가정생활과 전반적인 생활 등에서 행복도가 낮아 가족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 모두 미취학 아동에서 만 7-12세의 아동을 양육 중일 경우 행복도가 가장 낮아 이 시기의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이 가장 증가하는 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혼남녀는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시간에 있어서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냈다. 기혼여성은 전 생애과정에서 기혼남성보다 2-3배 가량 많은 가사 및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책임에 있어 남성의 역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은 대부분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높은 강도의 가족노동을 수행하였고, 남성은 결혼 초이거나 미취학 아동을 양육 중일 때 등 비교적 젊은 시기에 돌봄노동에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혼여성은 기혼남성보다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기혼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진다.

다음으로 사회적 위험에서는 기혼 남녀 사이에서 가구구성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가구동거 형태를 살펴볼 때 기혼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고 1인가구나 자녀, 다른 가족구성원 등과 거주하는 비중 역시 약 30% 가량을 차지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거하지 않는 사유로는 이혼, 별거, 사별 등 결혼지위의 변화가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결혼상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중을 볼 때 점차 비동거 부부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도 오늘날 업무, 원거리 취업,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일상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부부의 사례도 적지 않은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가족구성원이 모두 함께 살고 있는 경우를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많은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동거하지 않는 부부와 같이 표준적인 가족모델에서 벗어난 가족의 삶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아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발견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점차 다양한 양식으로 변화하는 가족생활의 현실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려는 시도는 이후에도 지속적이어야 한다. 정부 역시 전통적인 동거가족의 모델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을 고려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남녀를 대상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노인응답자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였다. 노인응답자 중 상당수가 다른 동거가족 없이 1인가구의 형태를 보였다. 특히 평균 기대수명이 높은 여성노인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 1인가구는 빈곤문제와 깊이 연결되므로 충분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에서도 경제적으로 하층에 속한 여성노인 중 절대 다수인 약 80%가 1인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남녀 간에 가사 및 돌봄노동에서 성별격차가 나타났다.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더 많은 시간의 가사노동을 부담하고

있었다. 가족에 대한 여성의 역할은 자녀양육시기로부터 은퇴 후 노후생활까지 일생에 걸쳐 지속되기 때문에 여성과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은 생애사적으로 통합된 시각에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남녀의 경제적 위험을 살펴보면 여성노인은 과반수 이상이 50만 원 미만의 월평균 소득을 나타내었다. 이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약 2배 이상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생애과정 전체적으로 수입이 적어 노후대비에 더 취약하며 배우자나 다른 가족구성원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기 쉽다. 그러므로 여성노인이 배우자의 사망이나 자녀부양을 받지 못할 경우, 쉽게 빈곤의 위험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노인남녀의 사회적 위험에서는 1인가구의 독거노인은 일반 노인에 비해 가족 및 친인척과의 유대빈도가 낮고, 주로 이웃의 도움에 의존하는 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독거노인의 가족으로부터의 관계단절은 고령사회의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국가의 지원으로부터 충분한 노후생활의 보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과의 유대단절은 독거노인에게 정서적 고립감은 물론 경제적 빈곤을 가중시킨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노인부양의 문제를 주로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해 왔으나, 가족 간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노인지원체계의 강화는 도리어 독거노인을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특히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의존이 가능한지 여부가 노후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여성노인에게는 가족으로부터의 단절이 곧 심각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으로 직결되며 남은 생애 기간 동안의 경제적 취약성이 높아질 것이다. 전통적인 가족유대가 약화되는 사회변화의 현실을 직시하고 특히 여성노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인이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를 유지할 수 있는 사

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 다음 출산에 대한 사회적 위험을 결정하는 요인은 남녀응답자가 속한 사회계층(상, 중, 하), 연령(세대), 육아단계(미취학 아동, 만 7-12세, 만 13-18세, 성인자녀), 가구동거현황(1인 가구, 비1인가구 등) 등 사회집단에 따른 남녀의 경험적 차이를 비교하고자 했다. 실제로 분석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계층의 따른 인식의 차이가 더 크게 발생하였다. 계층과 성을 종합해볼 때 상층의 여성이 하층의 남성보다 가족규범 및 성역할 관념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높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상층에 속한 여성일수록 결혼생활, 부모됨, 돌봄의 문제에 있어 남성들과의 가치관 차이에 따른 갈등이 증가될 가능성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간 차이를 보면, 대체로 젊은 세대의 응답자일수록 남성과 여성의 인식차이가 높았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성평등 의식과 개방적인 가족관, 일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면서 남성들과 괴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젊은 여성들의 개방적 태도는 세대 내 뿐만 아니라 세대 간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세대간 인식 차이는 여성이 결혼한 이후 부부내의 갈등뿐만 아니라 고부 간 가치관 갈등을 경험할 확률도 증가할 것 수 있으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맞벌이 남녀를 대상으로 양육단계의 차이에 따른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을 비교할 경우 여성은 남성보다 일-가족 갈등지수가 높았고 특히 미취학아동에서 만 7-12세에 이르는 연령대에서 높은 가족돌봄 부담과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아동이 있는 경우 주로 자녀돌봄 문제에 따른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만 7-12세 이상의 아동이 있는 경우 주로 자녀교육 문제에 따른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높은 갈등지수

를 나타냈다. 이는 특히 자녀교육에 따른 여성들의 부담이 크게 나타나 부모의 역할로서 자녀교육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한국사회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와 가구동거 상황은 특히 청년세대와 노인세대 사이에서 사회집단 간 중요한 차이가 나타났다. 청년 1인가구는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가능성과 경제적 빈곤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노인 1인가구는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감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청년세대는 여전히 상당수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고 동거 중에 있어 여전히 청년층의 독립적 가구구성을 위한 결혼 및 분가가 어려운 사회경제적 현실을 나타냈다. 노인인구의 겨우 1인가구의 독거노인이 겪는 경제적 빈곤문제가 특히 심각하였으며, 여성노인의 상당수가 독거 중에 있었고 이들은 대부분 사회경제적으로 하층에 위치하고 가족관계로부터 단절을 경험하는 등 여러 가지 위험에서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었다. 한편 기혼남녀의 가구동거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부부가 동거하지 않고 생활하는, 이른바 비동거 부부가 나타나 점차 다양화된 형태의 가족생활이 출현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2절 초저출산 정책의 이슈와 쟁점

저출산 정책은 인구정책, 가족정책, 사회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 의료정책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기존연구들에서는 출산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며 저출산의 어떠한 측면에서 사회적 위기를 발생시키는지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저출산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이론적 입장에 따라서 첫째 청년층의 낮은 경제적

독립으로 인한 만혼, 결혼기피, 출산지연 등 생애과정의 변화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시각과 둘째 성 평등화된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보수적인 가족규범과 억압적인 젠더 이데올로기가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는 시각, 셋째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이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는 시각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각각의 입장에 따라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효율적인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근로시간을 축소하거나 유연하게 해주는 출산지원 정책이 때로는 여성이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약화시킴으로서 기존의 성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의 효과성 면에서 볼 때, 출산율의 증진이라는 본래 의도한 바와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출산 정책의 대상은 여성 뿐만이 아니라 남성, 기업 등 저출산에 책임이 있는 다른 집단들을 정책 대상으로 포괄하지 않으면 저출산 정책은 본래 의도한 바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전일제 장시간 근무로 일터에만 전념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 시장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한 경제적 보상은 기꺼이 다른 것을 포기하고 출산을 하게 만드는 유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저출산 사회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산행위를 중심으로 한 도구적 정책 보다는 출산행위의 주체가 되는 여성의 경험에 대한 젠더관점에서의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는 가족과 일터에서 영역에서 개인 혹은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관해 공유되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둘러싼 사회 전체의 규범과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출산 및 양육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사회정책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여 출산과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든 때 저출산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이 공공정책으로 인해 감소되어도 많은 여성은 불평등한 관계의 근본 원인이 되는 가족제도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경제적 시각에서만 저출산 현상을 본다면 양육수당과 같은 경제적 지원, 유연근무제와 시간제 근로를 포함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의 행위와 태도가 왜 변화되지 않는지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높은 교육수준과 자신의 직장경력에 대한 야망을 지닌 젊은 여성들에게 출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줄 유인책은 무엇인가? 출산에 대한 여성의 책임과 모성역할을 강조하고, 양육의 전담자는 여성이라는 기존의 성별분업을 둘러싼 인식이 고변화하지 않을 때 여성들이 출산을 선택하게 만드는 유인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해답은 출산의 주체가 되는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여성정책의 관점에서 재정립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저출산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출산율의 증가를 통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출산율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 많은 저출산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야기되는 생산인구의 감소와 노동생산성 저하, 경제성장을 둔화, 사회복지 비출 증가, 국가재정 및 청년층의 부양부담 증가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반대로 개별 여성의 출산에 대한 선택을 유인한다고 해서 이러한 사회전반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생산인력의 부족이

반드시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혁신과 인력수급정책, 이민정책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청년실업, 조기퇴직,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초래된 다양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저출산 정책이 가지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연구에서도 미혼여성들은 결혼제도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끼며 좀 더 평등한 가족관계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전히 보수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미혼남성의 인식은 변화하지 않고 있어서 젊은 층의 경우에도 남녀 간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기혼여성 역시 상당수가 맞벌이 활동에 종사하지만 여전히 가사 및 돌봄노동, 가족에 대한 도덕적 책임 등 가족영역에 대한 책임은 상당부분 여성의 일차적 역할로 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출산 정책은 가족지원정책이면서 동시에 양성평등정책이어야 한다는 관점을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개별 가족보다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성평등한 관계를 지향할 때 ‘돌봄의 사회적 공백’에서 비롯되는 근본적인 사회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많은 선진국들과 같이 경제발전이 더욱 진전될수록 개인의 행복과 삶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탈물질적 가치의 확산될 것이며, 이로 인한 전통적인 가족중심의 돌봄 보다는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관계망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돌봄의 문제는 생산인구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시각에서 저출산 문제를 바라볼 때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그보다 필연적인 사회변화 속에서 ‘돌봄’을 개개인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폭넓은 시민적 권리로 인식하고 어떻게 돌봄의 공백을 성별과 계층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고 공공성의 원리에서 재구축할 것인가

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Daly & Lewis 2000; Knijn & Kremer 1997). 더 이상 돌봄을 여성 개인이나 가족내 역할로 전가하거나 돌봄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경제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저출산 정책의 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한 초점을 명확히 하고 대상별로 구분되는 정책을 시행할 때만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 대상이 출산의 주체인 여성인가 아니면 양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부모인가에 따라, 돌봄의 실수요를 갖고 있는 아동인가, 양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부모인가에 따라 정책의 내용과 목적은 달라질 수 있다. 저출산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을 이슈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 1) 양육기 여성의 돌봄노동과 임금노동,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저출산정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따라 기존의 성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기도 한다. 저출산정책의 대상을 여성에 초점을 둘 경우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여성의 의사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있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어렵다(신경아, 2009: 97).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출산지원정책 역시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의 통제전략을 강화한다. 그리고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권보다는 여성을 출산하는 몸으로 규정하고 도구화시키시킨다.

출산지원정책이 여성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주는가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EU와 영국국가는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유연화를 다른 정책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성 불평등 역시 다르게 나

타나고 있다. EU는 산전후 휴가, 부모휴가의 현실화, 출산전후 해고금지, 직장복귀관련 관리 강화, 남성의 양육참여 의무화 등으로 노동의 지속성 보장을 해주는 방식으로 여성인력의 노동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일본과 미국은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시장에서 높은 고용유연화로 여성들이 자유롭게 진입과 퇴직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면서 경력의 지속성 보다는 경력단절에 따른 여성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신윤정·이지혜, 2012: 111). 두 가지 전략 모두 여성의 노동유연화를 통한 일-가족 양립에 목표가 있지만, 여성의 고용안정성과 노동유연성을 동시에 보장해주는 EU와 달리 일본과 미국의 방식은 장기적으로 여성인력을 경력보다는 저숙련, 단기 근속 중심의 2차 노동시장으로 주변화함으로써 임금, 지위, 처우 등에의 성 불평등을 견고하게 나아가는 결과로 귀착된다. 우리나라 역시 여성인력의 단기적 근무 모델을 확대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이 장기적 관점에서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젊은 미혼여성 사이에서 결혼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증가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이 자신의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결과가 직업적 성취에서의 성 불평등으로 이어질 때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일-가족 양립정책이 양성적 접근이 아닌 여성인력의 유연화를 통한 모성적 역할만을 강화할 경우, 일과 가족의 조화로운 배분이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일과 가족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동시에 담당해야하는 여성의 이중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유연화 정책은 일-가족 양립의 목적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성 평등의 시각에서 포괄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고찰되어야 한다. 현행과 같이 어머니의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 중심의 유연화 방식만을 통해

확대될 경우 여성의 일-가족 양립은 노동시장에서 체계화된 성별분업과 성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시간제 일자리가 기존의 전일제 중심의 남성생계부양자의 역할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어머니의 일-가족 양립을 가능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정과 직장에서의 여성의 이중부담은 증가하고 여성의 노동은 임시직 혹은 시간제 등으로 주변화된 위치에 머물게 될 것이다.

쟁점 2) 부부의 양육의 분담인가, 여성의 이중부담 강화인가?

출산이후에도 긴 시간의 양육 과정을 요구되므로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시행되지 않고 출산전후만을 지원하는 정책은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보다 성평등한 시각에서 일-가족 양립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성중립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남성배우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출산-양육의 파트너인 남성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어떻게 양육의 책임을 남성에게 실질적으로 부여할 것인가는 중요한 이슈가 된다. 2013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69,616명의 육아휴직자 중 남성 사용자는 2,293명에 불과했다.

부모로서 남성배우자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아버지로서의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 역시 성평등한 사회의 증진과 부모의 권익보호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남성휴가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다. 남성휴가할당제는 전체 부모휴가기간 중 남성배우자에게 배타적으로 주어지는 휴가제도로 만약 남성배우자가 이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가의 혜택이 자동 소멸 되면서 남성의 돌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가진다(Duvander,

Lappegård, & Andersson 2010; Noonan, 2013).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시행되는 다수의 저출산 정책이 시간제 일자리, 양육수당 등과 같이 주로 여성과 어머니에 초점을 맞추거나 남성배우자와는 직접적으로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다.

모성 및 육아휴직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실에서는 휴가제도의 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일제 장시간의 노동을 중심으로 기업문화가 발달하여 휴직제도의 사용은 직장에 대한 헌신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되어 여러 가지 인사상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무엇보다 휴가를 사용하는 여성들의 결원보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환경에서 부모휴가의 사용은 직장과 주변동료의 불편을 증가시키는 부담스러운 일로 여겨지고 있다(유계숙, 2012; 홍정화, 2012).

남성육아휴직의 활용의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재 기업주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아예 없거나 거의 지원체계가 사실상 없어 기업의 참여를 유인할 만한 기제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가족친화 기업인증제라는 정책을 추진하지만 경제적 보상이 없이는 실질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양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제의 성공여부는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할 것인가, 유급으로 할 경우 양육의 문제를 근로자 개인으로 국한하여 고용보험에서 충당할 것인지 사회적 책임으로 고려하여 사회보험에서 충당할 것인지는 주요한 정책적 쟁점으로 부각된다. 비용부담을 기업에게 전가할 경우 정책수용에 대해서 기업이 피동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발생하게 되는 사업주의 피해와 부담을 보전해줄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액을 고용보험료 수준과 대체인력비용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아야 한다.

쟁점 3) 아동과 부모, 개인과 가족중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어야 하는가?

가족 및 돌봄 지원정책이 가족을 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돌봄에 대한 실제 수요를 갖고 있는 아동 개인을 단위로 할 것인지는 중요한 정책적 이슈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여성 개인보다는 가족과 배우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가족지원정책은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강화하고 여성의 혜택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현금지원, 조세감면 등 가족지원 정책이 개인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남성배우자의 소득수준, 가구소득과 같이 다른 가구원의 지위와 연계될 경우 여성에게 전달되는 혜택 역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MacDonald, 1998: 3). 가족 단위로 지원될 경우 가족구성원 및 남녀배우자에게 골고루 배분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한 위계관계 속에 차등적으로 배분된다. 예를 들어 소득지원정책이 가구소득이나 배우자 소득에 연계되어 차등적으로 지원될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임금수준이 낮거나 성별분업의 관행에 따라 가족돌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여성은 정책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일자리를 포기하거나 파트타임 등으로 경제활동의 범위를 축소하는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 일-가족 양립의 선택가능성을 높이고 양육의 책임을 남녀가 공유하는 성평등한 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 수요를 갖고 있는 여성이 가구원 지위나 가족관계의 특성에 관계없이 개인단위로 독립적 수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반면에 정책의 대상을 미래의 부모가 될 젊은 세대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중 하나를 청년층들의 늦은 경제적 독립과 결혼의 지연

에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저출산 정책이 여성의 출산 및 양육지원정책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청년층의 일자리 증진과 결혼비용, 소득, 주거, 출산 및 양육비용 등의 지원을 통해 출산에 필요한 안정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에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둘 것을 제안한다. 결혼과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는 젊은 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여 부모로부터 일찍 분가할 수 있어야 하며, 긴 교육과정과 취업준비 등으로 인한 만혼 혹은 혼인의 연기는 출산지연과 출산기피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김승권, 2010; 노병만, 2013; Lesthaeghe & Moors, 2000). 이러한 관점에서는 여성이나 젊은 층이 되도록 이른 시기에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청년실업률의 해소, 다출산 가구에 대한 경제적 및 사회적 인센티브, 결혼 및 다출산 의식의 고취, 긴 교육과정의 단축 등을 제시하였다.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이 결혼과 출산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결혼을 통한 출산촉진 정책을 목표로 설정할 경우 결혼을 통해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가족모델에만 정책적 혜택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후기산업화 사회로 들어올수록 가족에 대한 좀 더 개방적이고 다양한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가족형태와 생애과정의 다양성이 나타난다.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 대상으로 포섭할 필요도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가족제도의 보수성과 생애과정의 유연성이 결여된 사회일수록 저출산이 심화된다고 알려져 있다(Lesthaeghe & Moors, 2000; Shirahase, 2000).

이번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미혼가구, 1인 가구, 동거 및 이혼가구, 한부모가구, 비동거가구 등 가구구성의 원리가 점차 다양해지고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관 역시 탈표준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만약 ‘법

를적으로 결혼한 남녀배우자와 그 혈연적 자녀'를 모델로 하는 기존의 가족만을 전제로 한 저출산 정책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성공적인 가족지원 정책은 생애과정의 다양성 증가와 가족생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정책적 시각에서 통합하고 좀 더 성평등한 관점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회변화로 인해 직장, 교육 등의 문제로 자녀를 둔 부부가 서로 떨어져 거주하는 비동거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미혼 1인가구와 한부모 가구 역시 증가추세에 있다. 아직까지 대다수의 양육 지원정책은 두 남녀 배우자가 서로 일과 가정의 역할을 분담하며 동거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동거가구가 경험하는 돌봄의 부담감이나 정책적 수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경험적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변화하는 사회생활에 맞추어 저출산 정책의 수정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쟁점 4) 가족, 지역사회와 기업 중 정책의 범위를 어디로 설정할 것인가?

저출산 정책의 대상 범위가 개인인가 아니면 출산과 양육기의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인가,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인가에 따라 초점이 달라질 수 있다. 출산기의 여성이나 양육기의 부모와 같은 개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보다 기업과 지역사회, 노동시장과 같은 거시적인 사회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는 정책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볼 때 정책목표는 개별가구의 출산을 제고가 아니라,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지역사회와 노동시장의 환경구축에 두어야 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출산과 양육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이나 개별가족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보다 출산과 양육

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가장 소극적인 방법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역내의 시설을 전반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용이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출산율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양육 친화적 도시주거환경, 가족친화적 마을환경, 여성친화적 도시, 아동친화형 주거커뮤니티 등의 개념으로 출산과 양육에 용이한 지역사회 조성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란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돌봄을 지역사회에서 공유할 수 있고, 다양한 세대의 쾌적한 거주가 유지될 수 있는 공간과 관계를 구축해가는 마을, 가족의 책임수행과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공간 또는 공동체가 가족책임의 수행과 가족생활을 적극 지원하는 지역사회를 지칭한다.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점은 저출산 정책의 대상과 영역이 개별 여성이나 가족이 아니라 지역사회전체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자녀가구를 위한 주택지원, 지역사회 차원에서 운영되는 돌봄시설, 공동육아, 공동식사, 공동소유, 가사노동 절감을 위한 지역사회내의 주거 공동체의 건설 등을 통해서 개별가족이나 기업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지역사회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지역사회란 ‘가족책임을 수행하고 가족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 또는 공동체가 가족책임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지역사회’를 의미하며, 그 기본개념은 ‘자녀와 노약자의 돌봄 책임을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것을 지향한다(장미혜 외, 2012).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나 코하우징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가사서비스를 공유하면서 맞벌이 부부, 노인, 독신자, 한부모가족 등이 수행할 수 없는 돌봄의 공백을 메꾸어주기 위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공하는 시설과 서비스, 이웃간 협력활동이 이에 포함된다.

결국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은 첫째,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며, 둘째, 일하는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우며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을 조성하고, 셋째, 개별 가족 간 수평적 및 수직적 재분배 효과를 증진시켜서 사회적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고 가정 내 가사-양육에 있어 공동역할 분담하고 가정과 노동시장에서 조화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기업, 국가와 지역사회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제3절 이슈별 향후 정책적 대응방안

1. 가족의 다양성과 정책적 대응방안

출산과 양육지원정책은 크게 어머니를 포함한 부모대상의 지원정책과 아동대상 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부모지원정책은 주로 출산기의 모성보호정책 및 부모휴가제도 위주로 되어 있다. 미취업모들의 경우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대일의 개별양육을 선호하지만 단시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임시보육서비스 및 부모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는 높은 편이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소규모 자녀양육지원센터 사업, 육아나눔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용률은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편이다.

취업모의 경우 보육시설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혈연 혹은 비혈연에 의한 가정 내 양육지원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직접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조부모 및 친인척 등 다른 사적 관계망을 통해 돌봄의 지원을 받는 등 사실상 사적

돌봄으로 전가된 부담을 사회화된 돌봄의 형태로 대체한다는, 보육지원 서비스의 본연의 역할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더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중산층 이상의 부모들의 돌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존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기관지원 또는 가정 내 돌봄지원 등 일차적 지원이 아닌, 기관지원 정책(보육시설)과 가정 내 돌봄정책(아이돌보미사업)을 결합시키는 패키지 육아지원서비스가 일례가 될 것이다.

2. 부모의 취업유무 및 아동의 발달단계의 다양화와 정책적 대응방안

가족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서 좀 더 다양한 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지원시설의 경우 0-2세, 3-6세, 초등학생 등 다양한 양육단계를 고려한 차등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양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0-2세의 아동은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양육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그 이상의 연령 경우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양육시설의 질적 표준화와 더불어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시설에 맡김으로써 어머니의 경력단절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양육지원정책이 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형태 역시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부모의 야간노동, 휴일노동, 이른 출근시간, 부모의 장기 입원 등 가족의 보육 수요에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한 것은 보육시설의 이용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이소정 외, 2011: 50). 따라서 일하는 부모들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그들의 업무스케줄을 지원할 수 있는 육아서비스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일하는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근무시간이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육시설의 경우 취업모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맞추어 보육시간을 연장해야 된다. 현재 24시간 거점형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보건복지부)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아이돌보미 영아종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다.

3. 사회계층간 불평등과 정책적 대응방안

저출산 정책의 효과가 사회계층별로 편차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해서 사회계층별로 필요로 하는 돌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동양육형태의 계층화에 대한 사회적 대안의 필요: 계층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저출산 정책의 효과 역시 사회계층별로 편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육서비스 정책은 모든 계층에 있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난 반면, 휴가 정책과 현금지원정책은 계층에 따라 상이한 효과가 나타나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하층 여성은 다른 여성에 비해 출산정책으로부터의 영향력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승희, 2013). 양육서비스, 육아휴가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개별가구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감수해야 할 경제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서비스, 휴가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줄어들 소지가 있다. 다양한 소득계층 사이에게 서비스를 어떻게 배분하며, 국가, 가정, 기업이 협력하여 출산과 아이 돌봄에 소요되는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

요하다.

아동은 미래의 경제활동의 담당자로서 한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므로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것은 사회전체의 책임이라고 본다면 부모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아동이 출생해서 성장해가는 전 과정에서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 모든 가정에 지급하는 보편급여인 아동급여를 사회보장 급여로 지급하고, 출산휴가 역시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 급여로 지급하는 영국의 사례나(권병희, 2011), 사회보장 측면에서 아이가 태어난 이후 아동수당(0-15세), 학업보조금(16-20세), 학자금보조(20세 이상-54세 미만) 등이 이어지도록 되어있어 생애 주기 동안 중단 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스웨덴의 정책사례(박창렬·김미란·최연혁, 2011)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의 제도는 만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사회 전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목적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양육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정책을 채택할 경우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의 소득격차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계층간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없다는 문제점을 발생한다. 양육수당의 주요 목적이 자녀양육에 따르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출산을 독려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계층이나 가구의 특성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육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신윤정·이지혜, 2012).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학력 중산층의 여성이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지금의 저출산 현상의 핵심이므로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4)중산층

의 만족할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 자체의 질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영아기 자녀에 대한 육아서비스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중산층의 맞벌이가구는 미취학 자녀가 시설보육을 이용하기에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일대일의 개인양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관중심의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개인양육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최근 들어 다양한 출산과 양육지원정책이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고용에 놓여있는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일용직 여성,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실질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영세기업의 형편상 보육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현실이므로 이들 여성들은 보육지원에 대한 실제 수요를 갖고 있음에도 고용지위의 불안정과 더불어 적절한 보육지원을 받지 못하는데서 비롯되는 일·가정양립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결국 저출산과 돌봄의 문제를 사회 전체가 직면한 공공의 위험임을 감안한다면, 부모의 고용상의 지위나 사회계층에 따라 저출산지원 정책의 수혜정도나 정책의 접근도가 가능한 차이가 나지 않는 동시에 태어나는 아동의 양육환경의 차이로 인해 출생이후 생애주기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사회계층간 불평등이 강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출산의 주체인 여성이 소외되지 않고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향후의 성평등적 저출산 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이다.

4) 많은 선행연구에서 대다수 부모가 민간 혹은 가정형 보육시설의 이용을 기피하는 중요한 이유는 국공립보육시설이나 직장보육시설에 비해서 서비스 질과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민간 보육시설의 높은 보급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등록율은 이러한 서비스 질에 대한 부모의 불신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김영미, 2009; 유계숙, 2012; 이소정 외, 2011).

참고문헌 <<

- 권병희. 2011. “영국의 사회보장급여 개편 동향.” 『국제노동브리프』 6월호 64-73.
- 권혜자. 2008. 『청년층 고용문제와 정책과제』. 한국고용정보원.
- 기턴스, 다이애나. 1997. 『가족은 없다: 가족이데올로기의 해부』 안호용 외, 일신사.
- 김민주. 2010. “저출산 유인요소와 대응정책에 관한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9(2):105-128.
- 김사현·홍경준. 2014. “출산을 및 여성노동참여율에 대한 가족정책의 영향: 정책균형관점에서 본 OECD 21개국 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41(2호): 213-238.
- 김상욱·김지범·문용갑·신승배. 2013. 『한국종합사회조사 2012』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서울.
- 김수정·김은지. 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교환 혹은 젠더보상?” 『한국사회학』 41(2): 147-174.
- 김승권. 2010.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대책.” 『사목정보』 3(2): 70-73.
- 김영미. 2009. “한국의 복지체제와 젠더: 일가족양립정책 개혁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5(4): 281-305.
- 김혜영. 2008. “신자유주의와 다양한 가족” 『한국사회』 9(2): 55-94.
- 노병만. 2013. “저출산현상의 원인에 대한 개념구조와 정책적 검토.” 『대한정치학회보』 21(2): 179-207.
- 대한민국 정부. 2009. 『2006-2010 제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보건복지가족부
- 민현주. 2011.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별 생애사건 효과분석.” 『한구인구학』 34(1):53-72.
- 박창렬·김미란·최연혁. 2011. 『인구 전략과 국가 미래 제⑥권 선진국의 인구

- 문제 도전과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효진·은선경. 2012. “경력단절 경험을 가진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일-가족양립 정책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회』 17(1): 5-29.
- 배은경. 2010. 현재의 저출산이 여성들 때문일까?: 저출산 담론의 여성주의적 전유를 위하여. 『젠더와 문화』 3(2): 37-75.
- 보건복지부. 2014. 『2013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 손승영. 2007. “한국사회 저출산의 단계별 분석과 젠더논의.” 『담론 201』 10: 207-243.
- 송다영·장수정·김은지. 2010. “일가족양립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직장 내 지원과 가족지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3):27-52.
- 신경아. 2010. “저출산대책의 쟁점과 딜레마: 여성 없는 여성정책.” 『페미니즘 연구』 10(1): 89-122.
- 신윤정·김윤희. 2012.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보건사회연구원.
- 신윤정·이지혜. 201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성가족부. 2007. 『가족친화 기업 우수 사례집: 기업성장의 지름길 가족친화 경영』 여성가족부.
- 유계숙·한지숙·안은진·최효진. 2007. 『가족친화 기업경영의 성과에 관한 연구 - 근로자와 기업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유계숙. 2012.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일-가족 양립지원정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8(1): 111-125.
- 윤승희. 2013. “복지국가의 가족정책과 계층 간 출산수준의 관계에 대한 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40(2): 1-34.
- 이민아. 2012. “계획적 무자녀 가족: 한국 사회에서 아이 갖기의 의미와 가족주의의 역설.” 『한국사회학』 47(2): 143-176.

- 이소정·백선희·윤홍식·홍백의·김지연. 201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 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보건사회연구원.
- 이재림·손서희. 2013.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 갈등: 직장 및 자녀양육 관련 자원과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1): 93-114.
- 이진숙·최원석. 2011. “기혼 직장여성의 일-가족양립갈등 경로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50(1): 169-198.
- 이현창·송정현·박이택·김현종·이정록. 201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보건사회연구원·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사위원. 2014. “2014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안)”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부자료.
- 정성호. 2009.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32: 161-183.
- 조준모. 2012. “저출산에 대응한 모성보호제도 개선방안.” 『한국경제포럼』 4(4): 45-60.
- 진수희. 1992. “사회갈등과 불평등: 성별직업분리의 측면에서 본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성적(성적) 불평등” 『연세사회학』 13: 149-184.
- 통계청. 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홍정화. 2012.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휴직정책에 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향.” 『법과정책연구』 12(3): 1141-1174.
- 황정미. 205. “ ‘저출산’ 과 한국 모성의 젠더정치.” 『한국여성학』 21: 99-132.
- 裵海善, 2012. 韓国の小児化と政府の子育て支援政策, アジア女性研究 21号 (2012.3): 24-41.
- 池本 美香・韓松花. 2014. 韓国の小児化対策, 「実効性のある小児化対策のあり方—小児高齢化への対応は日本に与えられた世界史的な役割, 21世紀政策研究所(2014): 95-115.

小峰 隆夫. 2014. 総論, 「実効性のある小児化対策のあり方—小児高齢化への対応は日本に与えられた世界史的な役割, 21世紀政策研究所(2014): 1-18.

Ahn, Namkee, and Pedro Mira. 2002. "A Note on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667-682.

Arendell, Terry. 2000. "Conceiving and Investigating Motherhood: The Decade's Scholarship"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1192-1207.

Billari, Francesco C. 2008.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Exploring the Causes and Finding Some Surprises.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6(1): 1-18.

Billari, Francesco C, and Kohler, Hans-Peter. 2004. Patterns of Low and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Population Studies*, 58(2): 161-176.

Chandra, V. 2012. "Work - life balance: eastern and western perspectiv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3(5):1040-56.

Cotter, David, et al. 2011. "The End of the Gender Revolution" *Gender Role Attitudes from 1977 to 2008* "AJS 117(1): 259-289.

Crompton, Rosemary. 2006. *Employment and the Famil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Crompton, Rosemary, and Clare Lyonette. 2006. "Work-life 'balance' in Europe." *Acta Sociologica* 49(4):379-93.

Daly, Mary, and Jane Lewis. 2000.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2):281-98.

- De Rose, Allesandra, Filomena Racioppi, and Anna Laura Zanatta. 2008. Italy: Delayed Adaptation of Social Institutions to Changes in Family Behaviour," *Demographic Research* 19:665-704.
- Dermott, Esther, 2008. *Intimate Fatherhood: A Sociological Analysis*: Routledge.
- Dex, Shirley and Colin Smith, 2002. *The Nature and Pattern of Family-friendly employment Policies in Britain*: The Policy Press.
- Dienhart, Anna, 1998. *Reshaping Fatherhood: The Social Construction of Shared Parenting*: SAGE Publication.
- Duvander, Ann-Zofie, Trude Lappegård, and Gunnar Andersson. 2010. "Family policy and fertility: Fathers' and mothers' use of parental leave and continued childbearing in Norway and Sweden,"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0(1):45-57.
- Esping-Andersen, Gosta.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 Fleckenstein, Timo, and Soohyun Christine Lee. 2014. "The Politics of Postindustrial Social Policy Family Policy Reforms in Britain, Germany, South Korea, and Swede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7(4):601-30.
- Fraser, Nancy. 1994. "After the family wage: Gender equity and the welfare state," *Political theory*:591-618.
- Goldstein, Joshua R., Sobotka, Tomáš, and Aiva Jasilioniene. 2009. The End of "Lowest-Low"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5(4):663-699.
- Grzywacz, Joseph G, and Nadine F Marks. 2000. "Reconceptualizing the work - family interface: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correlates of positive and negative spillover between work and famil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1):111.

- Hassan, Zaiton, Maureen F Dollard, and Anthony H Winefield. 2010. "Work-family conflict in East vs Western countries." *Cross Cultural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17(1):30-49.
- Keene, Jennifer Reid, and Jill Quadagno. 2004. "Predictors of perceived work-family balance: Gender difference or gender similarity?" *Sociological Perspectives* 47(1):1-23.
- Knijin, Trudie, and Monique Kremer. 1997. "Gender and the caring dimension of welfare states: toward inclusive citizenship."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4(3):328-61.
- Lesthaeghe, R., and G. Moors. 2000. "Recent Trends in Fertility and household Formation in the Industrialized World." *Review of Population and Social Policy* 9: 121-170.
- Lewis, Jane, and Gertrude Åström. 1992. "Equality, difference, and state welfare: Labor market and family policies in Sweden." *Feminist Studies*:59-87.
- MacDonald, Martha. 1998. "Gender and social security policy: pitfalls and possibilities." *Feminist Economics* 4(1):1-25.
- McDonald, Peter.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 427-440.
- Morgan, S. Philip. 2003. "Is Low Fertility a Twenty-First-Century Demographic Crisis?" *Demography* 40:589-604.
- Myles, John. 2002. "A New Social Contract for the Elderly?" Pp. 130-172 in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edited by Gøsta Esping-Andersen, Anton Hemerijck, and John Myl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oonan, Mary. 2013. "The Impact of Social Policy on the Gendered Division of Housework."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 5(2):124-34.
- O' Brien, Margaret. 2012. "Work-Family Balance Policies."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United Nations—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New York: UNDESA.
- Paxson, Heather. 2004. *Making Modern Mothers: Ethics and Family Planning in Urban Gree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h. 2-3.
- Pierson, Paul. 1994. *Dismantling the welfare state?: Reagan, Thatcher and the politics of retrench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erson, Paul. 2001. "Post-industrial Pressures on the Mature Welfare States." Pp. 80-105 in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edited by Paul Piers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leck, E. H., & Pleck, J. H. 1997. "Fatherhood ideals in the United States. Historical Dimensions."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3rd ed., pp. 33 - 48): John Wiley.
- Rindfuss, Ronald R., Guzzo, Karen Benjamin, and S. Philip Morgan. 2003. "The Changing Institutional Context of Low Fertility,"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2(5-6): 411-438.
- Shirahase, Sawako. 2000. "Women's Increased Higher Education and the Declining Fertility Rate in Japan." *Review of Population and Social Policy* 9: 47-63.
- Skolnick, Arlene S. 2013. *Family in Transition*, 17th ed: Pearson.
- Tasker, F. & Golombok, S. 1997. "Young people's attitudes towards living in a lesbian stepfamily: A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 raised by lesbian mother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6(1&2): 183-202.
- Thévenon, Olivier. 2011. "Family policies in OEC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7(1):57-87.

United Nations(UN). 2012.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2 Revision, New York: United Nations.

Voydanoff, Patricia. 1988. "Work role characteristics, family structure demands, and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749-61.

Wadsworth, Lori L. and Bradely P. Owens. 2007,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Work - Family Enhancement and Work - Family Conflict in the Public Secto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7(1): 75-87.

Wilcox, W.B. 2004. Soft Patriarchs, New Men: How Christianity Shapes Fathers and Husban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index.go.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is.kr>.

대만통계청(National Statistics Republic of China) 홈페이지 <http://eng.stat.gov.tw>.

국제사회조사(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홈페이지 <http://www.issp.org>.

The World Bank 홈페이지 <http://www.worldbank.org>.

The United Nation 홈페이지 <http://www.un.org>.